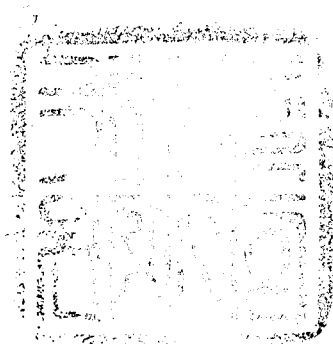


民主統一論

—北韓實態—

1989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發刊에 즈음하여

1989년은 南北韓關係가 냉전적 對決狀態에서 동반자적 協力關係로 전환하여, 「平和統一史의 元年」으로 기록되는 가장 뜻 깊은 한해 이기를 기대한다.

國內的으로는 지난해에 이룩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적 정권교체에 뒤이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民主化의 착실한 진전을 밑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統一熱望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일부 急進勢力의 體制否定,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理念的 混亂이 있는 가운데 統一論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對外的으로는 中·蘇등 공산제국의 開放·改革政策의 가속화로 우리의 北方 外交 추진 및 한반도 平和體制 유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사정도 세계청년학생축전 강행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낭비로 閉鎖經濟의 한계성이 深化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상황과 북한정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이미 밝힌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을 위한 대통령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 국민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새 통일방안을 천명하고 多角的인 남북한 人的·物的交流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자료의 과감한 공개와 민주적 統一論議 정착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國民的 合意基盤을 확충하여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當院에서는 금년에도 통일교육 표준교재로서 「民主統一論」과 「共產主義와 現代急進思潮」를 발간하였으나, 이 책이 발간되기 까지 새 통일방안이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새 통일방안 내용은 별책으로 후속 발간예정임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교재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우리 統一政策의 정당성 인식과 北韓實態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어 統一論議·北韓資料開放 등에 따른 理念的 혼란이 극복되고 확고한 통일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원고집필과 내용검토에 참여해 주신 院內外 教授陣 및 斯界專門家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이다.

統 一 研 修 院

목 차

I.北韓의 統治理念과 權力構造

1. 序 論	9
2. 政權樹立과 統治名分	10
3. 主體思想의 本질과 문제점	13
가. 형성배경	13
나. 주체사상의 내용	14
다.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主體思想	18
라. 主體思想과 南北韓關係	22
4. 勞動黨의 성립배경과 權力構造	24
가. 黨의 성립배경과 理念	24
나. 黨 조직과 역할	26
다. 黨·軍關係	32
5. 政權機關의 構造와 役割	34
가. 最高人民會議	35
나. 主席	37
다. 中央人民委員會	38
라. 政務院	39
마. 司法機關	39
6. 權力承繼와 政策및 政權方向	41
가. 權力承繼의 배경	41
나. 金正日의 權力基盤	43
다. 金正日의 偶像化 實態	48
라. 金日成이후 指導體系와 政權向方	49
7. 結 語	54

II. 南北韓 經濟力量 比較

1. 序 論	59
2 北韓 經濟體制 및 政策	61
가.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61
나. 북한 경제정책과 운용	68
다. 社會主義 經濟의 變化와 北韓經濟	71
3 南北韓 經濟力量 比較	75
가. 經濟力 評價의 基準과 制約	75
나. 總量 및 財政規模	76
다. 主要産業別 生産力	81
라. 貿易 및 國際收支	92
마. 주민 생활 與件	96
4 南北韓 經濟展望과 發展을 위한 課題	98
가. 남북한 경제의 綜合的 評價	98
나. 經濟發展 展望	100
다. 經濟交流과 協力の 可能性	102

III. 北韓의 社會

1. 序 言	107
2. 住 民 生 活	108
가. 住民生活 施策	108
나. 衣食住 生活	109
다. 職場生活	117
라. 餘暇生活	118
3. 保健 醫療	121
가. 無償治療制	121

나. 豫防醫學的 方針	122
다. 醫師擔當區域制	123
라. 東醫學	124
마. 醫療機關	124
바. 住民들의 疾病	125
4. 宗教實態	126
가. 宗教政策	126
나. 宗教團體 活動	130
다. 최근의 宗教宣傳 動向	131
5. 觀 光	134
가. 觀光事業 實態	134
나. 觀光資源	137
다. 觀光 서비스	139
라. 觀光開放과 그 影響	140
6. 結 言	142
가. 北韓社會의 特徵	142
나.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146

IV. 北韓의 教育 · 文化

1. 序 言	153
2. 教育理念과 目標	154
3. 教育政策	156
가. 社會主義教育의 形成背景과 變遷	156
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의 특징	160
4. 教育制度	162
가. 教育制度上的 特徵	162
나. 教育行政및 學校教育 體系	166
5. 教育內容과 方法	171

가. 教育內容	172
나. 教育方法	173
다. 政治思想教育의 實態	175
라. 體育을 통한 好戰的인 人間養成	177
6. 文藝政策	181
가. 文藝活動	182
나. 言論活動	189
7. 結 言	194

V. 北韓의 軍事

1. 序 言	199
2. 軍의 形成과 性格	200
가. 形成過程	200
나. 軍의 性格	202
3. 軍事思想·政策·戰略	204
가. 軍事思想	204
나. 軍事政策	208
다. 軍事戰略	212
4. 軍事組織·制度	215
가. 軍事機構	215
나. 黨·軍關係	217
다. 軍服務	220
5. 軍事能力	221
가. 總兵力	221
나. 豫備戰力	225
다. 軍事費	226
6. 對 中·蘇 軍事協力	229
7. 結 言	232

I. 北韓의 統治理念과 權力構造

李 禎 秀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論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唯一思想, 唯一政黨, 唯一統治者, 唯一後繼者를 최고의 규범으로하여 전체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여왔다.” 오늘에 와서도 共產圈의 改革·開放政策을 굳이 외면하려하며, “社會主義東方哨所”라고 자처하면서 時代흐름에 역행하려하고있다. 북한은 그러한 政治優先主義와 繼續革命의 추진속에서 심각한 經濟的 危機와 不振만을 얻게되었음을 알면서도 본래의 革命目標를 포기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적 개혁·개방으로 인해 전체주의적 정치체제의 안정을 깨뜨릴 위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금세기의 마지막 폐쇄정치체제인 북한도 外部의 압력과 内部의 변화욕구를 더이상 외면하며 억제할수 없는 지경에 까지 온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88서울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인의 주시속에서 남북한간의 중간결산을 한 결과 優劣이 판가름난것과 우리의 北方政策이 착실히 추진됨과 관련, 북의 초조와 각성이 새로운 변화의 돌파구를 강구케한것이 아닌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금년 7월에 개최될 「세계청년학생축전」이다.

물론 북한은 84년부터 「合營法」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행동반경도 넓히며, 사회적 차원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등 제한된 변화는 있어 왔지만, 본격적인 변화 계기는 ‘축전’을 개최하고 나서 나타나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계속 政治優先主義와 繼續革命論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時代의 開放思潮를 옹기 간파하지 못한다면, 비록 변화

1) 李洪九, “北韓研究的 學問的 課題”, 「北韓의 오늘과 내일」, (法文社, 1985 참고)

욕구와 발전의 열망이 높다하더라도 정치적변수가 制約原因이 되기 때문에 계산된 변화만이 가능하다.

북한이 권력후계체제에서도 首領體制를 고집하며, 主體思想을 강조한다면 이러한 규범이 요구하는 「충성과 헌신」 그리고 「배타성」이 개방화를 억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제한된 변화가 보다 큰 변화를 물고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점에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2章에 정권수립과 통치명분, 3章에 주체사상의 본질과 문제점, 4章에 「조선로동당」의 성립배경과 권력구조및 黨·軍關係, 5章에 政權機關의 構造, 6章에 權力承繼및 政策方向과 함께 앞으로의 政權向方을 전망하는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2. 政權樹立과 統治名分

북한의 共產化는 소련점령군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소련의 통제하에 있던 김일성집단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고 변질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5년 8월 9일 소련군 제25사령관 치스차코프 大將이 이끄는 소위 ‘解放軍’이 북녘땅으로 밀려 들어와, 8월 25일에는 평양에 소련 점령군사령부를 설치하여 8월말까지 북한전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한편 로마넵코少將은 정치·행정요원을 이끌고 원산을 통해서 북한에 상륙하였는데²⁾, 金日成은 이때에 북한에 들어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련점령군사령부는 그들의 공산화계획에 따라 우선 民族主義勢力의 집결체인 「평남건국준비위원회」와 玄俊嬭 중심의 「조선공산당

2) 金學俊, 「韓國問題와 國際政治」(서울, 박영사, 1975) p.26-31.

평남지구위원회」를 해체시키고, 공산주의자와 비공산주의자가 반반씩 참가하는 새로운 平南人民政治委員會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統一戰線戰術’이 적용되었음) 이후 그들은 10월 8일 5道臨時人民委員會를 구성하고 10월 28일 이를 5道行政局으로 개편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상 북한정권의 모태가 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소련점령군사령부는 북한의 소비엘化를 추진할 政治道具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革命的 黨을 발족시켰다. 10월 10일 「조선공산당 서북5도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 이어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졌다. 1945년 12월 17일에 「分局」3次大會에서 分局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김일성은 마침내 北朝鮮共產黨의 責任秘書를 맡게 되었다. 그 후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는 1947년 2월 8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북조선공산당은 金料奉의 「조선신민당」(1946. 3. 30)과 합쳐 北朝鮮勞動黨으로 개칭되었고, 이것이 다시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과 통합하여 결국 오늘의 朝鮮勞動黨(1946. 6)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45년 12월에 북조선공산당이 조직되고, 5道行政局으로 개편된 후 1946년 2월 8일 統一的 行政機構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박헌영 중심의 공산당재건위원회(45. 8. 20)의 支部가 아니고 북한의 單獨政權樹立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 공산정권수립은 스탈린의 공산주의팽창전략과 관련, 소련 점령지역인 북한의 공산화 획책의 산물인 것이다. 南北分斷이 오도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공산주의팽창전략의 산물인 북한공산정권 수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분명히 확인될수 있다.

상기한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革命도, 政權掌握도

할수없었으므로 김일성은 처음부터, 새로운 歷史와 正統性을 날조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중심적 사실에서 북한공산주의의 특수한 단면이 나타날수 있었다.

김일성은 정통성을 날조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박헌영, 현준혁 등 토착세력과 조만식 등 민족주의세력을 제거했고, 外來한 소련파(허가이, 박창옥등) 延安派(최창익, 김두봉)를 숙청하였다. 그리고 ‘金聖柱’라는 이름을 과거의 혁명지도자인 金日成으로 고쳤으며, 가족도 祖父로부터 대대로 항일투쟁에 가담했으며, 김일성은 그것을 성공시켰다고 역사를 날조하고 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金日成은 “위대한 수령”으로 군림한것이며,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떠 받들도록 한것이다.

북한에서 金日成首領의 統治를 어떻게 正當化 하였는가?

북한에서 ‘수령’이란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최고영도자로서 규정하며, 수령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프롤레타리아獨裁體系의 총체를 영도하는 최고뇌수이며, 전 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이다”라고 의미부여하고있다. 이같은 수령의 개념을 인민대중에게는 人體의 腦髓(뇌수)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³⁾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하는 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됩니다.”⁴⁾ 수령의 統治名分은 이러한 궤변속에서 구조화되었다. 다른 공산국

3)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1973) p.544.

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87. 7. 15 참조.

가, 예컨대 중국과 소련은 제도화 된 공산당의 ‘黨總書記’ 또는 ‘黨書記長’ 職位를 말하나, 북한에서는 유별나게 「수령」을 내세우며 권력승계에서도 ‘黨總秘書’ 직위보다는 수령의 직위를 인계하는 것이 문제⁵⁾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특이하다 하겠다.

물론 이것은 김일성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려는 저의가 있음은 쉽게 이해할수 있다.

이 首領指導體系는 김일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에게 인계됨으로써 수령의 차원에서 權力承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일수령을 낳는 진통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3. 主體思想의 본질과 문제점

가. 형성배경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1955년 12월에 김일성이 당 선전선동 일군들에게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이 당시 북한의 내외사정과 관련해 보면 대외적으로는 스탈린의 사망(1953)과 더불어 위성국가에 대한 지배 간섭이 약화되었으며,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쟁취(1954)한후에 “사회주의에로의 多樣한 길”(many way to socialism)을 인정하여 공산권내부에 독자노선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김일성은 이시기를 타서 ‘주체’를 표방하게 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 김일성은 후원자인 스탈린이 사망 함으로써 그의 권력유지에 불안을 갖게 되었다. 특히 흐루시초프의 등장은 소스탈

5) 金日成, “講義錄” 1986, 5, 31. 로동신문 1986, 6, 1.

린格인 金日成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黨內的 각 정파(연안파, 소련파)들은 소련으로부터 불어오는 스탈린 格下運動에 큰 고무를 받았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金日成은 자기의 권력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시기를 역이용하여 반대파들을 中·蘇의 형식과 방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非主體로 몰아쳐 숙청을 단행하였고, 金日成派는 스스로 抗日투쟁을 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쟁취하였다는 근거로 “항일혁명전통”을 내세워, 이를 기초로 ‘주체’를 표방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金日成1人體制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中·蘇 理念紛爭의 격화가 북한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양국으로부터 軍事的·經濟的 지원을 받아야만 했던 처지였으나 점차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자주노선으로 줄달음칠수 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다.

나. 주체사상의 내용

북한은 1970년 5차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과 1972년 12월에 수정 공포된 社會主義憲法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지도지침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핵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나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머리로 생각하며, 자기힘으로 믿고 自力更生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조주의를 반대하

6) 金昌順, “主體思想批判” 참고.

全寅永, “北韓의 主體思想: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變形”

신일철, 「북한 ‘주체체철학’의 비판적 분석」(사회발전연구소, 1987).

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원리와 다른나라의 경험을 자기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창조적인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입니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지도입장이 1966년부터 黨 및 政權機關에서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 自衛”, “思想에서 主體”로 나타나게 되었다.⁸⁾

主體思想의 이러한 내용은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제공산주의운동이 스탈린死後 위기를 맞게되는 1950년대 중반에 金日成의 黨內 指導權掌握을 위한 권력투쟁과정에서 “思想에서의 主體確立”문제가 제기되고, 戰後의 어려운 經濟事情을 극복·발전시키기위해 中國의 영향을 받은 經濟에서의 自立이 강조되었으며, 쿠바事態 以後 소련의 행위에 불안을 느껴 國防에서의 自衛를 부르짖고, 中·蘇紛爭의 심화로 북한외의 입장이 점점 힘들게 되자 政治에서의 自主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⁹⁾

1972년 전후해서 主體思想은 人民大衆과 연결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主體思想은 革命과 建設에서 人民大衆이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推動하는 힘도 인민대중에서 나온다”는 사상으로 간략히 규정하던서 주체사상은 人民大衆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전술이라고 설명하고있다.¹⁰⁾ 또한 人民大衆이 主人이 되기 위해서는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의 主體思想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人民大衆의 動員手段이 되었다.

7) 정치사전(평양, 1973) “주체사상”항목 p.1057.

8) 1967. 12. 16. 4기 1차최고인민회의 에서 연설.

9) 全寅永, 전개논문 p.180.

10) 김일성과 요미우리 신문기자와의 대담. (1972. 1)

主體思想은 1980년에 와서는 金正日의 등장과 더불어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 論理와 結合되어 “金日成의 統治”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전개 된다.

그들은 당규약에서 唯一思想體系를 主體思想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체사상은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원칙이며, 유일사상체제가기 때문에 주체사상이란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통일단결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복종하는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복종의 논리를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책자에서 다음같이 제시하였다. 즉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해서만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 혁명운동에서 지도의 문제는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입니다.”

“로동계급이 어떻게 의식화, 조직화 되는 문제와 어떻게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것은 수령의 옳바른 영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¹¹⁾고 역지논리를 전개한다.

북한의 주장은 수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인민대중이 혁명의 임무·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김정일은 人民大衆에게 主人意識을 고취하는 주체사상의 전술적 측면에 金日成을 주체로 하는 충성의 논리를 추가하여 “김일성 주체”를 강조하는것으로 귀결시켰다.

김정일은 1987년 7월 15일에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 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라고 하면서, 수령의 주체, 당의 주체, 인민대중의 주

1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체로 다양화 하여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중에서 “수령의 주체”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首領論’을 내세워 합리화 하고 있다.

이제까지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그 발단은 소련으로부터의 독자성 확립과 반대파로부터의 自己權力 防禦라는 임기응변적 구호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北韓의 政治·經濟·社會·軍事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綜合的 統治이데올로기로 변모하였으며, 마침내 金日成우상화와 연결되어 首領論을 뒷받침하는 理論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主體의 內容에서 보면 처음에는 당의 主體에서 人民大衆의 主體를 경과하여 마침내 首領의 主體로 귀결된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체사상이 김일성우상화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① 1982년 김일성은 그의 7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체사상탑”을 건립하였는데,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이 탑은 그 화강암의 돌수를 김일성이 살아 온 日數인 25,550일(365×70세)과 같게 하였다.¹²⁾ 이러한 현상은 인민대중이 주체라고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김일성만이 주체임을 실증하는 것이다.

② 1983년 3월 31일 東大院區域 人民委員會에서 실시한 “主體思想學習實態”를 보면 “주체사상을 고취하면 주체의 혁명관이 생기는데 主體의 革命觀에서 核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¹³⁾라고 되어있다.

③ 또한 김일성이 모든 부문에 대하여 부과한 「敎示」내용을 묶어 ‘主體農法’, ‘主體工業’, ‘主體藝術’이라는 用語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金日成의 권위를 높이고 있음을 볼수 있다.

그러나 主體思想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은데 이는 김정일의 글에서 확인할수 있다.

12) 조선예술, 7. (평양, 1982). p.52.

13) 로동신문, 1983. 3. 1

“일부선전 일꾼들이 주체사상교양을 몇프로하고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몇프로 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도 그들이 주체사상교양 밖에 또 무슨 다른 교양이 있는것처럼 생각하는것 같다”¹⁴⁾

또 주체사상교양이 “형식주의 요령주의에 사로잡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들은 북한 내부에서 주체사상에 별로 호응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른 공산국가로부터의 主體思想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일본 공산당은 1983년 12월초에 기관지인 「赤旗」에서 주체사상은 전혀 과학성을 결한 觀念論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그것은 指導者 絶對化의 理論이며, 전혀 非科學的 觀念論이며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¹⁵⁾

소련공산당 산하 「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인 페토렌코도 주체사상의 “민족주의적 이미지”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또 시에라레온과 북한 친선협회 사무총장이며, 과거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한 바 있는 M.S 코로마는 주체사상은 북한주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김일성의 이념적 수단이라고 하였으며, “주체사상은 인류의 혼란, 비인간성, 독재의 새시대를 열고 있다”¹⁶⁾고 비판하였다.

다.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主體思想

북한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북한의 현실에 創造的으로 적용한 것을 主體思想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主體思想研究者들

14) 김정일 전계논문, 로동신문, 1987. 7. 15.

15) 심리전 자료.

16) 조선일보, 1985. 4. 21.

은 “마르크스와 레닌이 혁명하던 시대와 환경이 오늘날에 와서는 크게 변천되었기 때문에 오늘에 맞는 새로운 時代觀과 人間觀을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거 先行한 모든 역사적 시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 시대는 새로운 指導思想, 指導原理, 指導方法을 요구한다”¹⁷⁾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主體思想은 단순히 마르크스와 레닌主義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대적 제한성을 극복한 시대의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와 근본적으로 다른 主體的 입장과 방법론에 입각한 완전히 獨創的인 이론이라고¹⁸⁾ 하고있다.

그러나 金日成은 주체라는 개념은 그가 처음 발견한 것이 아니고 마르크스·레닌主義者라면 모두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주장하였고, 또 원래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는 이 문제를 강조했을 따름이라고 말한 바 있다.¹⁹⁾

앞서 인용한 글은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비교하여 독창성이 있음을 넘지시 강조한데 비하여 金日成의 주장은 그 계승성에 중점을 둔 발언이라 하겠다. 金正日의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는 계승성보다는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金正日是 “종래에는 물질과 의식, 存在와 思惟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에 관한 문제를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이러한 唯物論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²⁰⁾고 한다. 북한에서는 사람을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唯物論의 연장선상에서 해명했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이점이 “새로운

17) 金日成主義原理, pp.3-10. 특히 p.10.

18) 上同.

金甲喆, “主體思想의 理論構造와 그 批判研究方向”, 「北韓統治이데올로기 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327 참고.

19) 「김일성저작선집 5권, 日本「毎日新聞」기자 대담 참고.

20)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변혁”이며 독창성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고 존재의의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을 임의로 설정하고있다.

“마르크스主義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始源을 열어놓고 레닌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하였다면 主體는 자주성의 기치밑에 전개되는 인류해방투쟁의 시대를 열어 놓았다.”고 하면서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의 창시가되는 인류해방투쟁 발전에서 일으킨 혁명적 전환의 주 되는 내용의 하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¹⁾

저들이 설정한 自主性의 시대는 공산주의가 출현한 이래 공산주의의 팽창전략 전술이며 침투구실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은 人間關係를 이간시키며, 국가간 또는 집단내 인적구성체를 지배와 피지배 또는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갈등으로 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모순상황에서 피지배, 피착취자의 고통을 벗는것을 자주성이라고하며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적 관점을 전제로 할때 가능하다. 물론 강대국에 막 벗어난 군소국가들에게는 실감이 날지모르나 이것이 자주성의 시대로 규정지을만한 것인가? 따라서 북한이 주체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인류해방투쟁발전의 시대는 선동구호에 불과하며 왜곡된 판단이다.

사실 북한이 主體思想에서 獨創性을 주장하는 내용은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이며 人間과 世界와의 관계에서 人間은 최고로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다른 물질과는 달리 세계를 변혁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 측면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이 獨創性을 주장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가 역사의 動因을 物質 또는 經濟決定論이라한데 비해서 主體思想은 思想意識이고 人間中心論이라는데 있다. 북한의 주장

21) 金甲喆·高性俊, 「主體思想和 北韓社會主義」, (文佑社, 1988)

에 의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이론가들은 의식이 물질에 대해 반작용하는 측면에 관해서는 전면적이며 완전한 해명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이 과거의 이론가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金日成1人の 이상화를 위한 전략전술임을 쉽게 확인하게 된다.

과거 마르크스도 인간은 물질에 의해서 규정되는 측면과 함께 다시 인간이 물질을 규정하는 逆規定性을 인정하였다. 또 레닌에와서는 더욱 의식성이 강조되었으며 모택동의 실천론속에서는 더욱 人民大衆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의식 또는 사람의 강조는 단지 주어진 사회환경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강조하여 왔던것을 金日成이 북한사회건설을 위해 사람을 그리고 의식을 더 강조했을 뿐 '독창'도 아니며 "새로운 변혁"도 아니다.

마르크스는 歷史의 主體와 社會發展의 原動力을 '勞動階級'이라고 했으며, 레닌은 勞動階級과 그가 지도하는 農民을, 모택동은 농민을 主體로 내세웠으며, 북한은 근로인민대중으로 보았다. 이것은 표현을 달리 할 뿐 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돋보이게한 전략적측면이 '사람'에 대한 규정인데, 사람을 어떤 의도에서 분석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主體思想이야말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²²⁾고 하면서 主體哲學을 내세우고 있다. 主體思想에서는 人民大衆을 核心으로 했지만 哲學에서는 '사람'으로 보편화를 시도한것이다. 이것은 사상과 철학의 구분에서 비롯되었다.

金正日是「主體思想에 대하여」에서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

22) 김일성, 오스트랄리아기자와 대담(1974).

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金日成이 강조했던 자주성과 창조성에 意識性을 추가한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성질을 革命的 意識性, 革命的 創造性, 革命的 自主性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의식성에서 기본은 계급의식이며, 계급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입장은 계급의식에 규제된다고 하였다.

결국 북한이 主體思想에서 중심으로 한 ‘사람’은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혁명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유도해내는 논리인것이다. 따라서 主體哲學에서 강조되는 사람은 공산주의인간이 갖는 성질의 편협한 단면을 강조한것이며, 이것을 토대로한것이 主體思想에서의 人民大衆으로 나타난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主體思想에서 강조하는 人民과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의 “프롤레타리아”와 같다고 본다.

라. 主體思想과 南北韓關係

주체사상은 겉으로 풍기는 민족주의적 이미지와 표방하는 自主性으로 인해서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점을 간과할수 없다. 특히 主體思想은 對南關係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를 한껏 활용하고 있다.

소련은 北韓의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이즘을 民族主義化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民族共產主義라고 지적하는데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있다. 즉 金日成은 “일부 자본주의국가 신문이 自主性을 갖고 있는 社會主義國家를 「民族共產主義」라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의 주체사상은 民族共產主義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또 그는 북한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성을 견지하고 옹호하면서 동시에 국제주의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自主性을 떠난 國際主義가 있을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際主義를 떠난 自主性도 있을수 없다고²³⁾ 변명하고있다. 실제 民族主義와 國際主義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니만큼 金日成의 주장은 主體思想을 빙자하여 그의 實利를 추구하려는 발언이며 다분히 기회주의적 발언이다. 김일성이 中·蘇를 왕래하며 벌이는 양다리外交는 잘알려진 사실이며, 민족공산주의 창시자인 티토를 修正主義 侍女라고 혹평한 金日成이 뒤에와서는 티토를 國際共產主義운동의 투사라고 추켜올리며, 1977년 티토의 평양방문시 “친절한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사실이 김일성의 교활한 측면을 읽게한다.

결국 김일성의 주체는 오늘날 공산국가들의 自國中心의 공산주의와 구별될 수가 없으며, 대남전략전술에서 主體가 민족주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사실 북한은 主體의 內容에서 人民大衆의 主體를 강조하였으나 民族의 主體를 명시한것은 아니다. 人民大衆은 계급개념이며 民族은 총체적 개념이다. 저들은 人民大衆은 피압박, 피착취계급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 민족에게는 분열을 조장하는 위협적 사상무기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결국 1인독재체제의 공고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이용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고립화를 초래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의 산물이다. 主體思想은 남북한관계에서 統一보다는 적대감만 고취하는 것이며 民族和合을 유도하기 보다는 民族構成員間의 이간을 자극할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강한 민족주의적 인상을 활용하여 우리 내부의 民族主義勢力을 이용하려는 무기로서 선전될것이며, 민족주

23) 요미우리신문기자와 대담

의적 이데올로기로 가장하여 좌경·급진세력을 더욱 자극하는 문제를 낳게 될수도 있다.²⁴⁾

4. 勞動黨의 성립배경과 權力構造

북한의 朝鮮勞動黨은 自由民主體制에서의 정당과는 다른 개념이다. 북한에서 黨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朝鮮勞動黨은 權力的 원천이고 中核이며 모든 국가적 및 사회적 조직의 指導的 核心이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勞動黨의 지도하에 黨의 路線과 政策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따라서 共產黨의 특징은 階級(프롤레타리아트)의 支配政黨이며, 모든 國家機關·社會組織 그리고 주민 모두를 지도하고 향도하는 유일적 존재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하 조선로동당을 로동당 또는 당으로 칭함)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政黨은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갖는 사람들끼리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행동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수 있는 조직이며 나아가 政權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때문에 우리의 정당은 階級的 性格을 갖거나 유일적 존재로서 군림할수 없게 되어 있다.

가. 黨의 성립배경과 理念

오늘날 북한에서 「로동당」 창건일은 1945년 10월10일로 공식화 하

24) 金甲喆·高性俊, 전계서, pp.208-209

고 있으나 실제 「조선로동당」의 명칭은 1946년 8월에 와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1945년 10월10일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평양에서 개최된 西北5道黨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서는 박헌영派가 주도했던 조선공산당(서울소재)을 “黨中央”으로 인정하고, “1國1黨原則”에 따라 평양에는 分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分局’ 명칭은 46년 1월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46년 4월부터 「북조선공산당」으로 개칭되었으며, 그해 8월 북조선공산당은 朝鮮新民黨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으로 출범하게 되었다.²⁵⁾ 이때 合黨大會를 1次黨大會라고 칭하고 있다. 第2次黨大會는 1948년 3월27일~30일까지 개최되었고, 동년 8월 人民共和國 政權樹立을 앞두고 南北勞動黨聯合中央委員會를 구성하여 과도적인 南北勞動黨의 合黨을 통해 「남조선노동당」을 흡수하여 1949년 6월30일에 「朝鮮勞動黨」으로 명칭을 바꾸고 金日成이 委員長으로 추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국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革命基地로 활용할 계획과 관련 소련점령군지원속에서 로동당건설이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공산집단은 오로지 스탈린의 공산주의 팽창전략에 따라 下手機關으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소련의 조종을 받는 共產黨指導部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대진영의 對決構造에서 보면 自由民主主義를 위협하는 第一線이며, “사회주의 동방초소”이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單一民族을 갈라지게 했을 뿐아니라 심각한 南北韓思想對決 상황에 돌입한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大韓民國의 正統性에 도전하는 적대세력인 것이다.

이제 혁명1세대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로동당은 1980년 10월 6차당

25) 閔丙天 編著, 「北韓共產主義」(서울, 大旺社, 1983) pp.123-124.

대회에서 권력세습체제에로의 組織改編을 단행했으며 第7次黨大會를 눈앞에 두고 있다.

朝鮮勞動黨의 理念은 크게는 黨의 政策方向을 지칭할수 있으며 적게는 主體思想에 국한시킬수 있다. 여기서는 黨規約속에 포함된 特정을 개략 정리하고자 한다.

①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主體型的의 革命的인 마르크스·레닌主義黨이다.”

② “조선로동당의 當面目的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승리를 이룩하여 全國的 범위에서 民族解放과 人民民主主義의 革命課業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社會의 主體思想화와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하는데 있다.”

③ “朝鮮勞動黨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千里馬운동과 思想·技術·文化革命을 추진한다.”

④ “朝鮮勞動黨은 오직 金日成 首領의 主體思想, 革命思想에 의해 지도된다.”

以上の 4個項目은 黨規約中에서 理念과 目標를 파악하는데 핵심적 내용인데 이중 ①, ④는 現在 朝鮮勞動黨이 金日成의 私黨임을 입증할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다.

②, ③은 黨의 統治名分과 革命目的을 長·短期로 나누어 명시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南韓까지 저들의 主體思想으로 一色化하겠다는 強度 높은 의지를 선언한것이 주목거리이며, 한편 북한은 아직도 프롤레타리아獨裁라는 反對勢力에 대한 계급 투쟁을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항목은 北韓共產體制가 얼마나 과격하고 배타적인가를 짐작케 한다.

나. 黨의 조직과 역할

1) 黨 조직

黨規約 11項에 “黨은 民主主義中央集權制原則에 의하여 조직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것을 아래와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各級 黨組織의 指導機關은 民主主義的으로 선거하고……

② 黨員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少數는 多數에 복종하며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中央委員會에 절대 복종한다.

③ 모든 黨組織은 黨의 路線과 政策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下級黨組織은 上級黨組織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된다.

「民主主義中央集權制」란 民主主義와 中央集權制가 합쳐진 용어이다. 여기서 民主主義는 최고국가권력 및 지방국가권력기관이 인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中央集權制란 국가권력기관을 구속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4년마다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로동당에서 지명된 1인의 대의원후보자를 놓고 「단일함투표」제에 의해서 선출한다. 이때 찬성하면 투표용지를 그대로 단일함에 넣고 반대의사가 있을시 기표하는 곳에 들어가야 하지만, 감시체제하에서 반대 표시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또 각대의원선거후 최고인민회의에서 主席을 선출하며, 金日成은 40년동안 선출되어 主席으로 행세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 개념의 선거라고 할수 없다.

이런점에서 보면 공산주의체제에서의 民主主義는 한낱 장식품 또는 선전적의미를 가지며 실제 강조되는 것은 「中央集權制」이다. 공산주의 黨獨裁가 가능한것은 中央集權制의 명분에서 파생된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는 광범한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혜와 지방의 創發性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發揚될수 있다.²⁶⁾고한다.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앙의 지도에 의해서만 人民의 創發性이 발양될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黨과 1人獨裁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지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朝鮮勞動黨의 統治組織은 黨規約에 잘 나타나 있다. 즉 黨의 최고 지도기관은 黨大會이며,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에는 黨中央委員會가 최고지도기관이다. “黨中央委員會는 6개월에 1회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政治局과 政治局常務委員會가 黨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중요결정은 정치국에서 이루어지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국안에서의 최고실력자로 구성된 政治局常務委員會에서 결정된다. 상무위원회는 6차당대회(1980년) 당시에 5인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 金日成, 金正日, 吳振宇 3인만 남아있다.

黨中央委員會 秘書局은 “필요시에 당간부및 당면문제 등 당내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지도한다”고 되어 있다. 黨內人事 및 政策執行內容을 결정하는 만큼 실질적 영향력을 여기서 행사한다고 할수 있다.

그리고 주목되어야 할 기구는 軍事委員會이다. 과거의 당규약에 의하면 軍事委員會는 黨中央委員會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6차당규약에서는 秘書局과 함께 조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군사위원회가 그만큼 비중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軍事委員會 委員數도 과거보다 2倍로 증가시켰다. 이와같이 黨內에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비록 세대교체가 되더라

26) 姜求真, 「北韓法の 研究」

張明奉, 「北韓憲法研究」(국봉조 82-12-1700)

도 革命性과 好戰性은 弱化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地區黨 組織을 보면, 道(直轄市), 市(區域) 및 郡수준에 中央黨의 黨大會와 黨中央委員會에 상응하는 各급 黨代表會와 黨委員會가 있고 이외에 1級, 2級工場, 企業所에는 工場黨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黨의 基層組織은 이른바 “黨細胞”로서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 各급기관, 단체에 당원3명이상인 있는 곳에서 조직되며, 당원및 후보위원 31명이상의 단위에서는 초급당위원회가 조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세포는 정책을 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 이다.

결론적으로 로동당의 統治構造에서 보면 주요한 政策決定은 政治局·秘書局 및 軍事委員會에서 행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黨政治局內에 常務委員會가 설치되어 이기구의 委員들이 당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권력의 핵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정책결정이 黨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黨內에서도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한 소수인들로 구성된 몇몇 조직들에 의하여 이끌려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고도의 중앙집권적 정치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²⁷⁾

2) 黨의 역할

黨規約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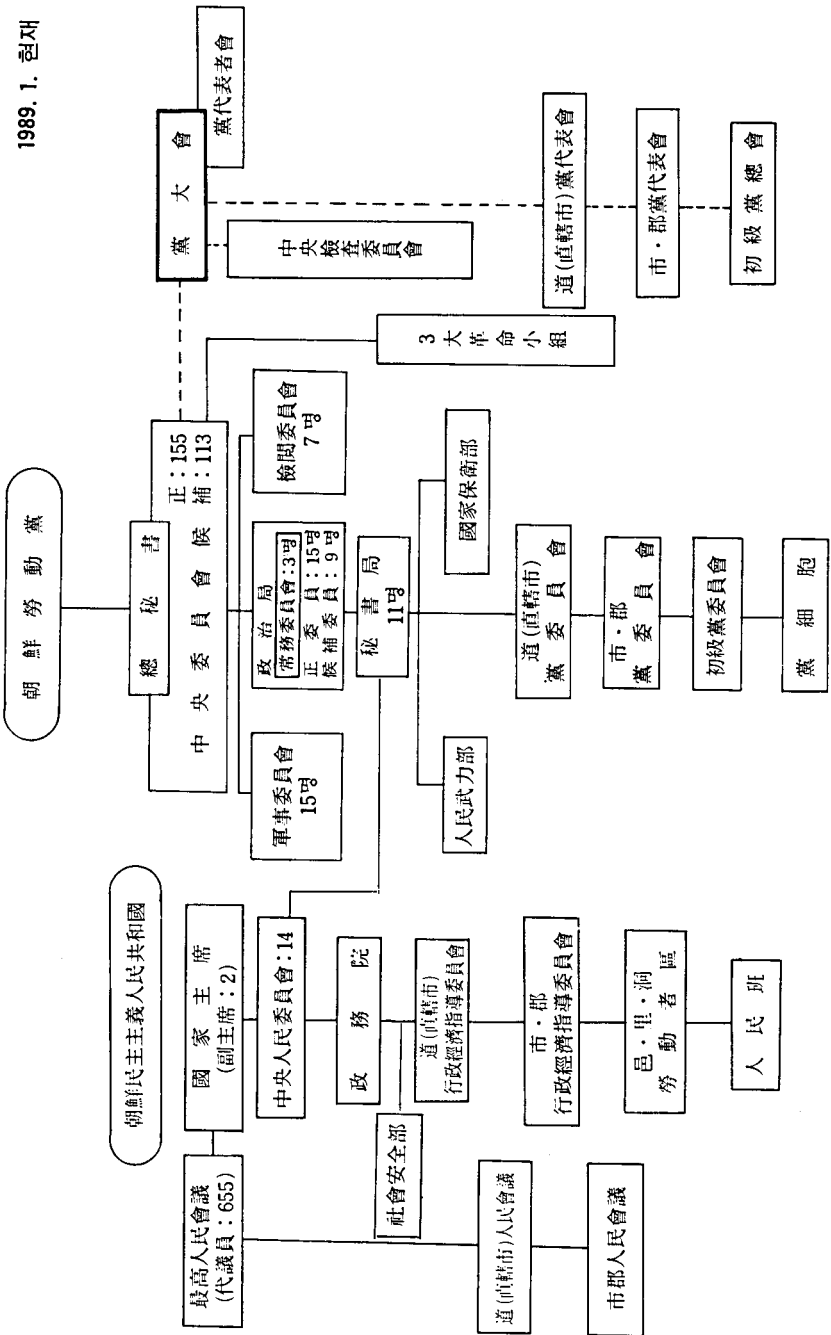
- 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 로동당은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는 것을 黨建設과 黨活動의 基本原則으로 삼는다.
- 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로선으로서 千里馬運動과 3大革命(思想, 技術, 文化)을 추진한다.

상기한 규약전문 일부에서 나타난 당의 역할을 보면 로동당이 북한을 代表하는 黨이다. 물론 집권한 黨이란 점에서 수궁이 가지만 로

27) 李命植, 申正鉉 共編, 「現代共產體制的 比較分析」(1987) pp.55-56.
安秉水, “北韓의 政治過程”, 「한국정치론」 第9章참고.

北韓政治體系

1989. 1. 현재



동당이 조선민족을 대표한다는 것은 지나친 망상이라 하겠다. 中·蘇에서는 黨은 다른 단체·조직과 함께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공산당이 헌법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다.

북한에는 야당과 유사한 友黨이 있다. 즉 “朝鮮社會民主黨”과 “朝鮮天道教靑友黨”이 있다. ‘友黨’이란 공산당을 지지하며 공산당과 統一戰線을 이룬 관계에 있는 정당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집권여당과 반대야당이 있지만 북한에는 노동당을 지지하도록 지도·통제된 黨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우리의 政治風土와는 전연 다르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보면 노동당의 友黨인 조선민주당의 당수였던 최용건을 당시 노동당의 부위원장직을 겸하게 함으로써 노동당의 시너로 만들었고, 그후 강양욱은 조민당(현재 사회민주당)당수를 하면서 국가부주석을 겸임하였다. 강양욱 사망이후는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보면 북한을 일당독재체제로 간주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수 있다.

또한 黨은 唯一思想體系 確立과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金日成의 首領指導體系확립을 위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또 唯一思想體系확립이란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독재’를 실시하는것으로 설명해도 과언이 아니다.

中國·蘇聯은 산업화단계로 진입한 조건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 투쟁보다는 “4개현대화” 또는 개혁·개방에 방해요인을 투쟁대상으로 하는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북한 공산체제의 현단계가 아직 전근대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수있다.

그리고 黨의 役割은 規約 13條에 “各級 黨委員會는 각 해당 단위의 最高指導機關이며 政治的 參謀部이다.”라고 되어있다. 이것은 모든 지역과 생산단위에서 黨의 역할을 규정한것이다. 모든 黨委員會가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한다. 북한의 軍隊內에도 「人民軍黨委員會」가 조직되며 「人民軍總政治局」이 집행기구로서 黨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黨·軍관계

북한의 勞動黨規約 第7章 조선인민군대내 黨組織에서 “朝鮮人民軍은 抗日武裝鬭爭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革命的 武裝力”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 사업에 대하여 黨中央委員會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로 되어 있다. 또 조선인민군總政治局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黨委員會의 執行機構로서 黨政治事業을 조직하고 수행한다로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北韓의 軍은 黨의 軍隊이다. 이러한 黨과 軍의 關係는 共產主義國家에서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以黨領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北韓人民軍은 黨의 領導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首領의 軍隊로서 金日成의 個人的 武裝力으로서 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²⁸⁾ 黨의 軍隊에서 金日成의 軍隊로 그 성격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는 말로서 “革命軍隊는 오직 수령의 革命思想, 黨의 唯一思想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의 유일적 영도밑에 革命的 중국적 승리를 위하여” 운운하며, 또한 “김일성동지는 武力建設에서 唯一思想體系수립에 관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과 공고화

28) 李基鐸, 「韓半島의 政治와 軍事」(1984) “黨·軍의 關係”참고.
崔平吉, “北韓의 行政體系와 黨官僚化”(국통조 88-2-10) 참고.

를 위한 사업에서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세우셨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黨에 의한 二重的 支配屬性은 金日成이 軍의 最高職位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과 黨의 지휘체계속에서 강화되고 있다.

金日成은 朝鮮勞動黨의 黨軍事委員會委員長이며,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員會 委員長 그리고 主席으로서 人民軍의 最高司令官職을 가지고 있다.

또 黨規約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북한 勞動黨의 군대 장악을 위한 정치기구의 핵심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기관인 것이다. 이 기구의 지도로 각군 부대에 黨의 영향력을 침투시키는 각급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總政治局은 北韓人民軍의 政治機關의 총본부임과 동시에 黨中央委員會의 한 기구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軍隊內에 黨組織이 설치되게 된 이유는 1950년 12월21일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였다. 즉 “일반병사들에게 싸우는 목적과 이유를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당기관을 人民軍隊內에 융합시켜야 한다”고 하는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서 장병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人民軍에 당조직과 정치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黨·軍의 융합체계와 金日成의 영도체계는 權力世襲化過程과 관련 동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職業軍人의 경력이 없고 또한 金日成에 비해서 軍의 지지도가 얕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軍內에서 金正日支持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 人民軍 “忠誠의 宣誓” 첫째項에 “우리들은 生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충성할것을 맹세한다.”로 되어있다.

○ 師團級以上 軍隊內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金日成思想研究室에 金正日思想研究室을 부설하였다.

○ '85.4.13 金正日의 친위그룹인 오극렬上將 외 7人을 大將으로 승진시키고나서 黨·軍關係가 밀착되었다고 선언한 사실.

이상의 이상화실태는 黨을 主導하는 金正日과 軍部와의 關係를 밀착시키는 政治戰略이었음이 분명하다.

또 '80년 6차당대회에서 黨組織을 一部 변경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黨中央委內에 黨軍事委員會를 설치하여 軍의 최고 지휘관들을 망라하여 委員을 구성한것을 보면 金正日의 등장으로 黨·軍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것이다. 즉 당내에 軍을 지도할수 있는 지도부를 설치하여 金日成에서 金正日에로의 權力승계 과도기에 나타날수 있는 취약점과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당·군관계는 金日成의 革命1世代가 주도했던 시대에 黨·軍이 혼연일체라고 하면 金正日의 世代가 주도하는 黨과의 關係는 機能的 關係로서 상부상조가 가능 할것이지만 만일의 경우 軍部の 요구사항이 만족하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기능적 關係는 갈등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黨이 革命의 武裝力을 어느정도 장악하느냐가 黨의 指導力을 발휘하는 정도와 관련된다. 만일 黨이 軍部の 支援을 절대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黨의 指導력이 약화되며 이것은 곧 金正日의 指導력 약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政權機關의 構造와 役割

북한의 정권기관은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조직되었다. 그러나 헌법이 黨規約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黨의 理念과 目標에 따르고 있다. 원래 사회주의 헌법은 1972년 12월27일에 채택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정권기관의 운영은 김정일 등장 이후 權力世襲體制와 관련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權力機關의 동태도 그러한 각도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가. 最高人民會議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입법기관이며, 헌법상 最高主權機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은 형식적이며 주로 당정책 결정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표시해서 전체 북한주민의 의사로서 대표성 및 정당성을 필요로 할때 활용되는 기구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는 1986년 11월2일 실시된 제8차 대의원선거에서 당선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수도 655명이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을 단위로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단일후보를 100%투표에 의해 당선된 사람들이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지며 정기회의는 1년에 1회내지 2회 개최된다. 최고인민회의가 休會하는 기간에는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가 업무를 수행한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상설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겸임한다. (1989년 1월 현재 議長 : 양형섭, 副議長 : 손성필, 여연구)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종래 最高人民會議의 權限이 사회주의헌법에서 상당히 축소 조정되었으며, 많은 중요권한이 主席의 지도·통제하에 있는 中央人民委員會에 이양되었다는 것이다.²⁹⁾ 즉 주민을 대변한다는 최고인민회의 권한은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독재의 상징인 주석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舊憲法에서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대외적 國家首班의 역할을 하였고 內閣의 首相은 대내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당시의 내부의 갈등과 불화가 어느 정도였는가

29) 鄭鎮淵, “憲法構造의 變化”, 「北韓의 오늘과 내일」 p.32.

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연설속에 잘 나타나 있다.

“과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당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의 통제밖에 있었기 때문에 金料奉은 자기가 대통령이니 왕이니 하면서 상임위원회는 당보다도 더 높다는 등 못하는 소리가 없었으며 무법천지를 만들어 놓았다.”³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김일성의 1인독재에 어느정도 방해요인이었던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헌법개정은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명실공히 金日成唯一獨裁體制를 제도화한 것이다.³¹⁾

최고인민회의의는 우리 국회와 비교할때 명목적으로 立法的 機能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같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혀 다르다.

첫째, 代議員의 地位가 다르다. 대의원은 로동당이 지명한 단일후보자들이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100%투표에 100%찬성을 규범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겸직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1년에 한두번 회의가 있는 때만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최고인민회의의는 로동당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최고주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수가 없다. 최고인민회의산하 諸委員會는 黨政治局 및 秘書局委員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셋째는 최고인민회의의의 중요권한을 中央人民委員會에 이양하였다. 즉 헌법의 해석, 행정부와 사법부의 일상업무의 감독, 행정부 각 部長의 임명, 조약의 비준 및 폐기, 외국에 주재하는 大使, 公使의 임면 및 소환등을 중앙인민위원회에 이양하였다.³²⁾ 결국 사회주의의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의는 종래보다 더욱 상징적이고 종속적인 기관

30) 「김일성저작선집」 5권, p.402.

31) 姜求真, 전계서 pp.76-80.

32) 鄭鎮淵, 전계서, p.34. 또는 “北韓權力構造에 관한 연구” 연세행정논총, 제6집 참고.

이 되었다.

나. 主 席

이 主席制는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설된 제도로써 임기는 4년이며,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다.

헌법상 主席의 地位는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주권을 대표하는 외에 대내적으로 中央人民委員會의 首位이며, 人民軍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委員長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절대권력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또한 主席은 잘못이 있어서 파면된다는 헌법조항이 없다. 그러나 副主席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파면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主席制는 金日成1人獨裁를 정당화하려는 제도적 장치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의 「방계문」은 주석제의 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수령을 직접 국가의 수반으로 모시고 수령께서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도를 실현하도록 보장하는 국가기구적 제도인 주석제를 새로 제정한 것은…프롤레타리아독재를 실현하는 국가활동의 고유한 특성에 가장 정확히 부합되는 국가기구건설 방침이다.”³³⁾

그는 상기와 같이 主席制의 제정을 찬양하고 있으나 기실은 金日成 獨裁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중국의 국가주석제와 비교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임기 5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북한은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조항이 없다. 또 主席이 사고가 생기면 부주석이 그 직위를 계승하도록 되어있으나 북한에서는 계승조항이 없다. 따라서

33) 방계문 「…우월한 사회주의국가기구 체계」(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논문집 1973) p.182.

북한 국가주석제의 독재적 성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다. 中央人民委員會

중앙인민위원회는 「社會主義憲法」에서 신설된 것으로 國家主權의 最高指導機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主席을 首位로하고있다. 따라서 이 기구는 主席의 直接 指揮 統制하에 운영되도록 되어있는 만큼 김일성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임을 짐작할수 있다.

그 구성원은 國家主席·副主席·中央人民委員會書記長및 委員들로되어있는바 이들은 勞動黨政治局員 또는 秘書局秘書들이다. 이들 위원들이 당과 정권기관의 중요직을 겸직하고 있는것을 보면 黨·政 協議體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主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기구이다. 勞動黨내에서 정치국이 권력이 집중된 곳이라 하면 행정부쪽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바꿔말하면 저들의 통치기구조직의 원칙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구현한 것이다.

현재 中央人民委員會委員은 '86년 12월29일 최고인민회의 8기1차 회의에서 선거하여 재구성되었으며, 주석, 부주석을 포함한 14명중 5개市·道黨責任秘書가 참여한것이 이채롭다. 이들 市·道黨責任秘書가 경제건설및 산업기지가 있는 市·道黨責任秘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中央人民委員會는 政令, 決定, 指示등을 채택하여 내리는 등 입법적 기능뿐만 아니라 재판·검찰기관의 지도권한까지 갖고 있는 만큼 3權分立이 아닌 3權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權力獨占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임을 알수있다.

라. 政務院

政務院은 행정집행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엄격한 지도와 통제밑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1988년 말 현재 정무원은 總理(延亨默) 1人, 副總理 8人이 있으며 政務院組織은 15委員會 21部 1院(科學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88년 2월에 經濟部署長을 중심으로 자리바꿈을 한데 이어 다시 '88년 6월에 경제부서통폐합을 단행, 기구개편을 하였다. 즉 건설건재공업위원회를 건재공업위원회와 건설부로, 화학및 경공업위원회를 경공업위원회와 화학공업부로 각각 분리, 독립부서로 개편했다. 그리고 '88년 11월26일에는 合營工業部를, 12월16일에는 電子自動化공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렇게 자주 개편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행 3차7개년계획이 당초 목표대로 순조롭지 못함을 반영한 것이며, 새로 신설한 부서의 성격으로 보면 북한은 이제 최첨단기술에 눈을 뜬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總理는 주석의 재의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고 소환될 수 있다. 그러나 구헌법규정과는 달리 총리의 직위는 북한정권의 중심이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고위관료이며 주석과 행정부를 이어주는 교량역할만을 하도록 되어있다.

마. 司法機關

북한의 헌법 제133조에 의하면, 「재판소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가 있다」고 되어 있다. 또 헌법 제143조에는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구역, 군 검찰소및 특별검찰소가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에서 사법및 검찰기관은 “당과 국가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규정되고 있다.

“법이란 정치의 외부적 표현에 불과하다…우리의 국가정책은 당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일군이 될자격이 없다……여러분이 법을 해석·적용할때 우리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 관점,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트독재의 관점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다.우리의 법자체가 우리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실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만큼,법을 정확히 집행한다는것은 곧 당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한다는 것이다.”³⁴⁾

결국 북한에서는 노동당의 사법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곧 진정한 사법기능이라 하겠다.

재판기관체계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및 특별재판소로 이루어진다. 인민재판소는 2~3개시군에 1개소씩 설치된다.

中央및 地方裁判所의 判事와 人民參審員은 최고인민회의와 해당 지방인민회의에서 각각 선출되며 그 임기는 인민회의와 같다. 직할시(도) 인민회의 임기는 4년이며, 시·군인민회의 임기는 2년이다.

裁判은 판사1명(특별한 경우 3명) 인민참심원2명이 수행하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은 중앙재판소가 모든 재판업무를 감독한다.

검찰기관체계는 중앙검찰소,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검찰소로 구성되어 사법기관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檢事의 임명및 해임은 판사와는 달리 중앙검찰소가 한다. 그러나 중앙검찰소가 主席과 中央人民委員會의 지도를 받는 만큼 당·국가에 통일적 지도를 받는 점은 같다고 하겠다.

결국 북한의 司法機關은 제도적으로 黨·國家의 指導監督을 받도

34) 「김일성저작선집」 5권, pp.451-2.

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中央人民委員會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三權分立의 原則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司法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북한에는 「전국법무일군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법무일군」이란 사회주의법무지도위, 사회안전부 등 사찰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민들의 법무생활강화를 촉구하며, 법무생활 강화를 위해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을 벌이도록 촉구하고 있다.³⁵⁾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조직뿐아니라 사회주의법을 통해서도 점차 통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權力承繼와 政策 및 政權方向

가. 權力承繼의 배경

공산주의체제의 권력승계는 선거제도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되는 민주주의체제와 달리 공산당의 權力 上層部의 制限的 범위내에서 폐쇄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점에서 공산주의체제의 권력승계는 危機를 동반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⁶⁾ 그러나 최근 공산국가의 정권승계는 점진적으로 安定된 모습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소련 및 동구에서 비교적 安定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산체제의 權力承繼 변화와는 달리 북한은 더욱 폐쇄적으로 父子間에 권력을 인수 인계받는 특수한 사례를 낳고 말았다.

북한은 김정일의 權力世襲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가?

35) 내외통신, 562. 1987. 11. 6

36) 廉弘喆, “最近 北韓의 權力構造變動에 따른 政策方向研究”, 「北韓權力構造와 金正日世襲體制研究」(국통조-87-7-47) 참고.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革命繼承論” “血緣繼承論” “金日成化身論”등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⁷⁾

○ 革命繼承論 :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야 완수될 수 있음.

○ 血緣繼承論 : 수령의 핏줄을 이어 받은 자가 후계자로 되어야 함.

○ 金日成化身論 : 김일성의 사상과 이론을 완벽하게 체득한 지도자 이어야 함.

북한이 이와같은 세습논리를 내세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金日成은 소련이나 중국에서 前任統治者의 格下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올바른 후계자를 내세우지 못한데 있는것으로 지적하고 있다.³⁸⁾ 金日成은 死後에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金正日을 후계자로 선택했을 것으로 본다. 또한 金日成은 스탈린 死後 墓까지 파헤치고 銅像을 끌어내리는 등 전임자에대한 모독적인 행패에 대해 心理的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다.

둘째는 수령의 혈통을 계승하는 후계자는 누구보다도 인민대중의 기대와 신뢰를 받으며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게 된다.³⁹⁾

이상에서 확인할수 있는 것은 김정일의 등장은 金日成이후 체제적 불안정과 심리적 두려움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思想改造 革命方式을 계속유지 하기위한 것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路線을 부정하고 등소평이 모택동의 革命路線을 거부한것 같이, 만일 김일성의 후계자가 김일성 노선과 업적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결국 김일성을 格下 하는 것이 되며 그로 인해 김일성의 思想이나 革命偉業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37) 「北韓 및 共產圈動向」, (국통조 87-7-44) p.37.

38) 朝總聯 「學習資料」 1977. 2.

39) 內外通信, 「北韓後繼體制的 實相」 p.12.

나. 金正日의 權力基盤

金正日의 權力世襲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두 時期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第1時期(1973-1979) : 權力世襲基盤 構築期

金正日의 등장을 위해 뒷받침한 세력과 조직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⁰⁾

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혁명1세대들, 예컨대 김일, 최현, 오백룡 등을 들 수 있다.

②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이다. 이들은 金正日이 權力基盤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은 이 학원의 제1기생으로 1953년 졸업을 했는데 그후 오늘날 까지 2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냈으며, 졸업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거나 고급간부로 등용된다. '82년 당시 인민군 총참모장인 吳克烈은 만경대혁명학원은 “조선로동당의 핵심 및 인민군대의 골간으로 키우는 혁명가 유자녀교육기관으로서…… 졸업생들은 백두산 영봉에서 시작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가는 혁명전사”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만경대혁명학원의 역할과 사명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이 학원 출신을 당중앙위에 20%, 당중앙위 정치국에 30%, 당중앙위 군사위에 32%를 기용하여 막강한 지지세력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오극열(前, 인민군총참모장), 백학립(사회안전부장), 김환(부총리), 김두남(당군사부장) 등이 이 학원 출신들이다.

③ 朝鮮勞動黨 조직은 김정일의 공식적 권력기반이다.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의 조직담당비서직을 맡은 후 정치위원회 후보 및 정위원으로 지위를 높여가면서 그의 영향력을 강화하여 나갔으며, 이

40) 柳錫烈, 「남북한 관계론」(서울, 정음사, 1985) 권력세습편.

것이 6次黨大會에 이르러서 政治局常務委員會를 만들어 黨의 最高位職에 오름으로써 權力構造上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④ 3大革命小組는 金正日의 親衛隊로서 그의 權力기반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小組는 1973년 2월에 조직되었는데 黨의 核心青年들과 大學生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기능은 名目上으로 思想改造와 技術改造에 주력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世代交替와 肅清을 아울러 수행했기 때문에 구세대들의 반발을 샀다. 金日成이 1975년 3월에 행한 연설에서

“3大革命은 黨의 지도하에 수행될수도 있지만 黨조직과 협조를 맺고 있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黨중앙(김정일)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간부들을 무조건 도태시킬 것이 아니라 그 운동을 통해 개조시켜야 합니다.”

라고 한것으로 미루어 보아 3大革命小組는 기존정치기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3大革命小組운동이 金正日의 黨內 權力基盤구축과 엘리트의 세대교체라는 이중적과제를 담당하였음을 알수있다.

특히 1984년 9월25일 약 11년만에 2次大會를 개최하면서 3大革命小組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3大革命小組는 黨중앙의 지도가 하부말단에 제때에 정확히 구현되도록 아래를 도와주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3大革命수행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들은 사상·기술·문화혁명에서 黨중앙의 지도밑에 활동하는 지도역량이며 각급 黨조직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방조자입니다.”⁴¹⁾

또 3大革命小組가 1973년 이래 '87년 2월까지 약 27만여명의 소조원이 전국 각지의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보건기관에 파견되어

41) 로동신문, 1984. 9. 26~27.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84년이후 2년반동안 16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86년11월이후 '87년 2월까지 1만여명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⁴²⁾ 이것은 김정일의 정책집행을 강화하는 정도와 비례하고 있고, 또한 김정일의 실무지도 회수와 폭이 커지는것과 관련되고 있다. '88년 2월에 3大革命小組 결성 15주년 기념식에서 “黨의 모든 노선과 정책을 신념화하고 그 관철에서 무조건성·절대성의 혁명적 기풍을 발휘하도록 힘쓸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면 3大革命小組가 김정일세습체제 정당화와 효율화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⑤ 1973년 5월에는 黨內 國家政治保衛部가 새로 만들어 졌고, 1975년에는 國家檢閱委員會가, 그리고 1977년에는 社會主義法務指導委員會가 만들어져 관료주의를 타파한다는 미명하에 관리들을 통치하는 기구로 활용하고 또한 세습체제를 유도하는데 기여토록 했다.

2) 第2時期(1980-현재) 世襲權力 強化期

이시기는 6차당대회에서 政治局常務委員이며 秘書局 秘書, 軍事委員會 委員으로서 黨內에서도 지위가 급상승하여 黨內 지지기반이 강화되는 때이다. 대내적으로는 外廓團體의 지지모임이 확산되며, 軍部改編作業, 住民들의 불평불만 해소를 위해 食·衣·住문제에 관련된 정책에 역점을 두게 된다.

黨內 組織基盤의 핵심이 당중앙위원회인데 6次黨大會때 당중앙위원 248명(정위원 145명, 후보위원 103명)이 선출되었는데 이들중 56%에 해당되는 139명이 5次黨大會(1970)이후 새로 선출된 위원들이다. 그리고 1980~88년 11월(당6기14차전원회의)까지 당중앙위원회 정·후보위원은 103명이 교체 또는 충원되었다. 黨中央委員會가

42) 내외통신 (4937), 1987. 3. 10.

당내 지지기반의 기본이 되는 만큼 103명의 교체 및 충원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김정일권력세습체제 출범이후(6차당대회) 두번에 걸쳐 최고 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있었다. 하나는 1982년 2월28일 615명을 선출한 제7차대의원선거이며, 다른 하나는 1986년 11월2일의 655명을 선출한 제8차 대의원선거 였다.

1983년 3월6일과 1987년 11월에 市·郡人民會議선거도 있었다. 그들이 이러한 代議員選舉의 의의를 “수령이 세우고 당중앙이 영도하는 혁명주권을 꾸리는데” 두고 있음을 선전하는 만큼, 이러한 代議員 선거 때 마다 人員擴充과 40%以上の 代議員 交替는 金正日의 支持基盤의 강화로서 분석된다.

그리고 金正日의 권력기반이 취약했던 軍部쪽에도 만경대혁명학원 出身인 吳克列(당시 人民軍總參謀長)을 중심으로 한 7人의 上將을 大將으로 승진시켰다. 즉 인민무력부장 吳振宇를 次首, 吳克列以外 백학립(사회안전부장), 金斗南(당군사부장), 제1부총참모장 이을설, 제2군단장 주도일, 人民武力部 副部長 金奉律, 포병사령관 金光鎮, 제4군단장 이두익 등 이들 上將을 大將으로 승진시켰다. (1985.4) 이렇게해서 金正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實勢로 내세우는 작업을 벌인 이후 黨·軍關係를 밀착시켜 나갔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金正日의 支持問題는 이상의 공식적 지지기반만 가지고는 설명될수 없다. 아직도 권력세습이 制度的으로 완결되지 않고 있으며 黨內에도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다음의 내용에서 감지할수 있다.

① '88년 2월20일 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김일성은 「전체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역사는 반혁명세력의 공세가 우심해질 때마다 정반대되는 두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혁명에 대한 신념이 약하고 비

겁한자들은 혁명을 배반하고 적들에게 투항하는 길로 나가지만, 참다운 혁명가들은 혁명의 가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적들의 공세를 맞받아나가며 혁명을 보다 큰 양상으로 이끌어 나간다.”⁴³⁾

이것은 '87년에 김만철가족의 집단탈출(1.17)과 김현희 KAL 폭파사건(11.17) 이후 '黨긴급회의'에서 나온 내용이란점에서 당내 분위기를 대강 읽을 수 있다. 북한은 권력승계문제와 겹쳐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이 분명하다. 더우기 김정일은 현재 북한의 처지를 “뒤떨어져 있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⁴⁴⁾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끝난후 바로 金正日의 측근인 오극열 인민군총참모장이 사임하고, 강성산 당비서가 함경북도 도당책임비서로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

② '87년 1월에 “수령의 혁명위업계승의 필연성”에 대한 북한 “중앙방송의 대담방송”에서는 혁명의 代가 바뀔때마다 당과 국가의 지도권을 탈취하려는 야심가, 음모가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혁명위업계승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들을 철저히 응징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내부의 저항이 있음을 알수 있다.

③ 1980년 5월 방북했던 독일의 알브라이트 라인(Albreiht Lein)박사에 의하면 김정일은 50대이상의 군 指揮官들, 특히 전투사령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하며, 북한 군부에서는 김정일이 군에 복무한 일이 없어 군사문제에 門外漢이고, 외부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이유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④ 유고의 「NIN」잡지는 북한의 권력세습화현상을 보고 “김일성이 권력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족에게 권력을 인계하는 창피스런 일을 저질렀다”고 통렬히 비난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의 성공여부는 확실히 단정할수는 없으나 상기

43) 로동신문, '88. 2. 21.

44) 김정일, 로동신문, '87. 7. 15.

한 부정적요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 金正日의 偶像化 實態

북한은 金正日을 「미래의 수령」으로 만들기 위해 金日成을 우상화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支配權威를 조작하며 근거를 날조하고 있다.

북한은 70年代에는 「黨中央」으로 표현하였으나 80年代 들어와서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접두사를 썼으며, 이때 약자로 ‘친지동’으로 통칭하였으며 ’85년 4월에는 「黨·國家首位」, ’85년 7월에는 “金正日時代” 등의 용어들이 나타났으며, ’86년부터 점차 金正日權威의 절대화에도 찬양논조가 증가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화에 사용되었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 용	김 일 성	김 정 일
이름에 ‘日’字	金聖柱 → 金日成 : 민족의태양	金正一 → 金正日 : 미래의태양
‘별’과 연결	백두산의 장수별	향도의 별 또는 백두星
혁명사적지·전적지	‘보천보’, ‘삼지연’ 전적지	‘장자산’, ‘어은혁명사적지’
꽃	김일성花(인도네시아로부터)	김정일花(조총련으로부터)
백두산과 연결	장군봉	정일봉
출생지	만경대(평양)	백두산밀영으로 조작

김정일우상화와 관련 최근에는 백두산에 한 봉우리를 “正日峰”이라 명칭을 붙이고 기념식을 벌이며, ‘구호나무’(나무에 김정일 찬양글을 새긴것)를 조작하여 선전하는 등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出生地까지 날조하고 있다. 즉 1942년

2월16일에 소련 사마르칸트에서 출생했음에도 白頭山密營에서 출생한것으로 선전하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순례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個人 偶像化는 공산주의 일반이론에서 용납될수 없다. 예컨대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격하할때도 “스탈린이 폭력과 테러에 의해서 그의 생각에 절대 복종시키는것은 레닌적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규탄하였다.

또 中國의 「人民日報」(’80.17~19)에서도 “인민들이 모두 봉건황제에 충성하듯이 프롤레타리아 수령에게 충성할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정치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우상화 방법을 통해서만 통치를 할수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의 정치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김정일권력세습체제도 金日成首領에서 金正日首領으로 연속되는 가운데 체제가 유지되어야함으로 그 모순과 불합리성은 계속된다고 보겠다.

라. 金日成이후 指導體系와 政權方向

북한은 김일성이후에도 계속 首領體制를 유지하여 나갈것을 金日成의 講義錄(86.5.31)에서 밝혔다. 金日成은

“黨의 위업을 계승해 나가는데서 기본은 정치적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다... 후계자문제는 정치적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하는 문제이며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은 그 후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어야한다... 우리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라고 하였다.

또 朝總聯學習提講에서 나타난 權力世襲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正式化는 레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레닌主義에 대한 正式化는 스탈린에 의해 내려진 것처럼 首領의 革命思想의 正式化는 首領의 후계자에 의해서만 내려질수 있다. 노동계급의

가장 완성된 혁명적 學說인 金日成主義를 正式化하는 역사적 위업은 오직 수령의 革命思想, 革命理論을 완전무결하게 정통하고 있는 金日成主義思想 理論家인 金正日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북한에서 金日成死後의 지도체제는 적어도 金正日에 의해서 權力承繼가 이루어진다면 首領體制의 계속과 더불어 主體思想을 인계받아 이를 토대로 金正日의 正統性을 주장하게 될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체제에서 正統性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의 해석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金正日의 權力掌握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金正日이 主體思想敎養에 관한 논문들에서 主體思想의 위치와 主體思想의 교양을 통해서 목적인바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글이 나오게된 시점등을 놓고 볼때 이런 현상은 김정일의 정통성확보를 위한 정치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金日成死後 金正日에 의해서 權力이 主導되었을 때에 權力構造의 성격을 진단하여 본다면 다음의 몇가지를 생각해볼수 있다.

우선 변화된 측면은 革命1世代의 權力界에서 퇴진과 더불어 공백을 新進엘리트그룹에 의해서 메꾸어진다. 그 後續으로 나타난 그룹이 革命遺子女그룹이다. 현재 알려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金正日 : 金正淑의 아들
- 姜成山 (함경북도 도당비서) : 姜健(前 軍司令官)의 아들
- 吳克列 (前 人民軍總參謀長) : 오중흠(전 빨치산일원)의 아들, 인민군부대에서 “오중흠따라배우기운동”을 벌인바 있음
- 최안용 (사로청위원장) : 崔賢(前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 孫成弼 (北赤十字委員長) : 康良焜(전 부주석)의 사위

以外 현직 고위층 자녀들이 거의 중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꿔말하면 현 김일성체제에서 혜택을 받는 子女

들이 자리를 메꾸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 金正日 등장 이후 새롭게 充員되는 엘리트를 대체로 테크노크라트로 간주하는데 이들을 經濟重視그룹과 政治重視그룹으로 나누어서 분류될 수 있다. 姜成山을 중심으로한 그룹을 經濟중시그룹이라고 하면 李根模 前總理를 중심으로한 그룹이 政治重視 經濟팀이라고 부른다.

'88년 12월 12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李根模總理의 病故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延亨默으로 교체하였다. 延亨默은 과거에 금속기계공업('86.2)과 '88년 11.28. 당 6기 14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에 관해서 보고한 사람이다. 북한내에서 현대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해서 남다른 조예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수령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치감각도 갖춘 사람이다. 즉 '85년 10월에 수령과 인민의 관계를 “혈연적 관계”라고 주장한 글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延亨默은 기술·개방에 편향된 姜成山과도 다르며, 남포갑문건설에서 보인바와 같은 대중동원적 전통적 경제관리 방식을 주로 하는 李根模와도 다르다고 본다.

현재 金日成, 金正日是 革命性을 늦추지 않고 건설을 병행하는 정치·경제전략을 유지하는 만큼, 지금의 권력구조와 정책방향에서 延亨默의 총리기용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金正日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그의 업적을 경제적 측면에서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재 공급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전하고 있다. 3大革命의 지속적 추진과 관련 3大革命小組의 활동을 강화시킴으로써 김정일체제의 저변확대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요인이 있음에도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데 대한 여러가지 장애요인 또는 不安要因이 없지 않음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바 있다.

최근에 革命1世代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모습에 비추어 김정일의 측근은 하나둘 권력중심에서 탈락되어 주변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革命1世代인 오극열(인민군총참모장) 후임에 崔光이 재등장했으며 과거 김일성의 경호책임자인 全文燮이 人民武力部 副部長에 또 김종린이 당비서에 재기용 되었으며, 朝總聯의 議長인 한덕수가 權力引繼를 중지했다는 것, 그리고 軍部の 元老들도 재등용되고 있다는 등의 權力內部의 사정에 비추어 앞으로의 金日成死後를 전망하는데 만만치 않은 變化要因들이 나타나고 있다.

北韓에서 金日成이 사망한후 새로운 지도체제의 형태를 다음 세가지로 가정해 볼수 있다.⁴⁵⁾

첫째, 金正日의 승계가 안정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그의 1人支配體制가 확립되는 경우, 둘째, 金正日이 權力을 장악하기는 하지만 여러 반대세력들이 부상하여 이들이 金正日과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하는 경우, 셋째, 權力鬭爭에서 金正日이 패배하고 다른 人物 또는 다른 정치세력이 權力을 장악하는 경우 등이다.

첫째경우는 이제까지 설명되었으므로 더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88년도에 김정일의 權威를 높이려는 偶像化열도가 가열화되고 正統化作業이 主體思想의 재해석이란 측면에서 강화되는 추세이니 만큼, 金日成의 在任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金正日의 권력기반은 공고화될 것이며, 金正日의 體制는 지속될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集團指導體制이다.

集團指導體制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基本指導體制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集團指導體制를 강력히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首領體制를 고수하였으며 金正日에게까지 인계하

45) 廉弘喆, 전제논문 참고.

려고 하는 점은 이미 밝힌바와 같다. 만일 북한에서 金正日의 唯一體制가 不分明할 경우 집단지도체가 이루어질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 현재 권력 상층부도 軍部엘리트와 經濟엘리트의 비중이 높아진 이상, 이들의 영향력에 비추어 金正日을 포함한 權力分配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이들이 權力分配를 합의하여 集團指導體制로 移行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김정일이 권력승계에 실패할 경우,

金日成이 살아있는 동안 金正日承繼體制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金日成의 統治體制全般에 대한 이념적·정책적 도전이 여러 세력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 김정일승계체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北韓統治全般에 걸쳐 커다란 변화가 생길 것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개방화 압력을 과거보다 더 크게 받고 있다. 중국·소련이 개방화 이후, 북경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스탈린시대 희생자들의 위령제를 요구하며, 소수민족이 저항하는 현상으로 미루어 보면 북한에서 억압과 통제의 사슬이 풀리게 되면 의외의 저항요인들이 돌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인민 자유동맹” 그룹이라는 反體制그룹이 움직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북한의 국제환경의 대처와 관련 내부의 불만·저항요인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權力層內部에서 60代, 50代와 金正日의 40代사이의 갈등, 軍部和 技術官僚중에서 金正日에 의해서 소외되어 있거나, 革命世代에 속하는 軍部 및 開放化政策을 지지하는 技術官僚들이 불만, 저항세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소외 및 불만계층에 의한 集團指導體制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비교적 實用主義와 開放政策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적 성격 자체가 큰 변화를 이룰 것 같지는 않다.

以上에서 기술한 승계체제의 세가지 유형 중에서 金正日의 1人支

配體制의 공고화가 현재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형태라고 생각한다.

7. 結 語

이제까지 북한공산체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金日成·金正日權力體制的 특징인 政治優先主義를 기초로한 主體思想과 勞動黨의 權力構造와 黨·軍關係 그리고 政策의 執行을 맡은 政權機關, 그리고 權力承繼 및 政權의 向方을 정리하였다.

북한은 원래 스탈린의 팽창주의정책의 副産物로서 非主體, 非正統體制이며, 首領體制的 연속선상에서 金日成體制에서 金正日權力世襲에로의 정착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體制에 있어서 문제의 屬性은 共產化 類型중에서 “外部로부터 강요된 革命” 즉, 소련에 의해 틀잡혀서 金日成에게 인계된 체제라는 점에 있다. 때문에 출발부터가 非正統非主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다른 것은 權力의 人的 構成體가 ‘빨치산集團’이므로 과격하고 호전적이다. 이러한 속성적 요인이 首領體制인 강경한 경직체제로 물고 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이룬다. 이 單線的 唯一體制는 위로부터의 敎示·敎導體制이며 밑으로 부터의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가 ‘개방화’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에게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개방화의 장애요인이 된다.

이것이 비록 김정일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수령체제를 고집하는 한 개방화는 저들의 계산된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社會的 욕구도 점점증하겠으나, 國際環境의 해빙무드와 共產圈內 開放化추세라는 外壓에 의해서 변화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사는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세에

맞추어 우리들의 對北韓認識도 달라져야 하지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過去의 지나친 敵愾心 또는 對決意識에서 벗어나 北韓을 民族共同體의 틀속에서 協力하고 同伴하는 對象으로 인식해야 될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는 안보적차원에서 北韓의 對南態度에 대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할수 없다. 最近「Military Balance」(1988~1989)에서 나타난 그간의 北韓의 軍事力 增強實態는 軍事力の 질적 개선과 강화를 위해서 歩兵을 車輛化하고, 機械化師團을 增編하고 戰車를 輕量化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뿐만아니라 우리 内部의 左傾-暴力勢力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저들의 “韓國民族民主戰線”을 앞세운 우리 내부의 혼란에 편승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對北韓觀 定立에서 균형있는 감각을 유지하면서 南北和解의 돌파구를 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II. 南北韓 經濟力量 比較

李 浩 (國土統一院 研究官)

1. 序 論

제2차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蘇聯을 軸으로 한 社會主義 세력의 확장추세로 인하여 東·西간에는 理念의 장벽이 높아지고 兩體制는 상호 적대적 경쟁 속에서 각기 자기방식대로의 經濟發展을 도모해 왔다.

따라서 資本主義이건 社會主義이건 간에 두 體制는 그동안 확고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支配되어 왔으며, 비록 各體制가 內部的으로는 약간의 改革과 修正作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스스로의 支配이데올로기의 테두리안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두 體制 중 보다 더 이데올로기 支配的이라고 할 수 있었던 社會主義 諸國에서 폭넓은 改革과 開放의 움직임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최근 東·西간에는 理念의 장벽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이제 大轉換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國土의 分斷과 전쟁을 통하여 理念의 대결이 지구상에서 가장 尖銳化되어 있는 南北韓의 경우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추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장차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과는 달리 아직도 經濟·社會의 開放과 體制改革을 집요하게 외면함으로써 理念的 경직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근의 政治的 民主化 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폭발적인 經濟·社會的 요구와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전개되어온 北方外交政策의 착실한 進展 등 대내외적 상황의 급변으로 일부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支配 이데올로기에 대한 葛藤과 가치관의 混沌 현상마저 심하게 표출되고 있다.

우리가 平和的 民族統一을 至上의 課題로 생각하는 것은 한 민족

이기 때문에 하나의 民族國家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외에도 분단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民族의 항구적인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統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社會主義와 資本主義란 두 理念·體制를 신중하게 검토 論證하고, 높아진 이념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代案을 모색해보는 것은 세계경제의 변화추세와 통일을 위요한 국제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本稿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南北韓이 서로 다른 理念과 體制下에서 성취한 결과로서의 經濟力을 比較·分析함으로써 장차 우리 民族이 統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합의하고 공동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한편, 지금까지와 같은 南北間의 理念對決的 競爭關係를 청산하고 民族成員 모두의 이익과 항구적인 번영을 위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내용의 구성상 본론인 제3장에서 검토할 經濟力量比較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제2장에서 한국의 市場經濟와는 현격히 다른 경제질서 속에서 운영되는 북한의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와 政策의 특징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 부문도 남북한 비교차원에서 서술하여야 마땅하나 가급적 지면을 줄이기 위해 한국의 市場經濟體制 및 政策에 관한 서술은 생략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리고 마지막 제4장에서는 앞장에서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남북한 경제의 向方과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北韓 經濟體制 및 政策

가.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경제체제에 대한 개념은 分析者에 따라 각기 다르게 定義되고 있으나, 경제체제는 인간이 經濟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人的·物的 諸資源의 配分方式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표시하는 말로서 이는 인간이 可用한 生産手段을 사용하는 하나의 組織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體制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個體로서 인식되며, 그것은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형성되고 變容되어 가는 것이다.¹⁾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인 시각에서 볼 때 경제체제 역시 일정한 모양으로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諸國家는 각 나라마다 經濟生活을 영위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이들 국가의 社會組織은 資本主義, 社會主義, 全體主義, 個人主義 등 諸理念(ideology)에 의해 支配를 받는다. 그러나 理念이 같은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각국이 처한 현실적 여건이나 歷史的 배경에 따라 경제체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엄밀히 말해서 지구상에 현존하는 경제체제의 종류는 그 經濟社會의 수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²⁾

經濟體制를 구분하는 방법과 경제체제의 構成 要素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주장되고 있다.

「좀바르트」(W.Sombart)는 경제체제 구성의 세가지 요소를 첫째,

1) 조용범, 「經濟體制論」 한울, 1985. pp.19~20

2) 金榮奉「經濟體制論」, 博英社, 1987. p.29.

경제주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이념과 행동원리(經濟精神), 둘째, 경제주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일정한 방법(技術), 셋째, 個個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고 있는 組織 또는 秩序라고 하였으며, 「마르크스」는 경제정신, 생산수단의 소유형태, 경제적 配分の 결정기구라 하였다.

보편적으로 경제체제를 공업화 방식의 특징에 따라 구분할 경우에는 첫째, 공업화를 주도하는 主體, 둘째, 공업화를 수행하는 動機, 셋째, 공업화를 수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資源配分機構 등을 그 기준으로 들 수 있고, 이 세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오늘날의 세계 경제체제는 크게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 혼합주의체제로 大分 될 수 있다.

그러나 分析의 대상을 社會主義國家로 좁혀 볼 경우 각국은 경제 운용과 자원배분 방법에 따라서 ① 관료적 중앙집권화 모델(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② 중앙집권적 계량계획 모델(The Planometric Centralist Model) ③ 부분적 분권화 모델(The Selectively Decentralized Model) ④ 보완적 시장 모델(The Supplemented Market Model)로 세분 될 수 있다.³⁾

북한의 경우 이상의 모델 중 가장 경직된 체제라 할 수 있는 官僚的 中央集權化 모델에 속하며 학자에 따라서는 封鎖共產主義(Siege Communism)에 근접한 예외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⁴⁾

1) 社會的所有와 計劃經濟

북한은 生産手段에 대한 私的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는 社會的 所有制度를 택하고 있다. 북한이 1972년 12월에 개정한 소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제2장 제18조부터 제22조까

3) J.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82, p.47 참조.

4) 金榮奉, 「經濟體制論」博英社 1987, pp.59-60.

지가 소유제도에 대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生産手段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동단체의 소유대상으로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토지, 역축, 농기구, 어선, 건물 등과 중소기업, 기업소로 한정하고 있으나 同 헌법 제21조에서는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全人民的所有(국유)로 전환시킨다는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것이 특징인데, 이 점은 1986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8기 1차회의에서의 金日成 시정연설을 통해 다시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주민들이 재산을 私有할 수 있는 범위는 근로자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임금 또는 협동농장원이 자기 몫으로 분배받은 생산물과 그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재에 국한되고 있다. 북한 헌법 제2장 제22조에 의하면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며, 이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협동농장원들의 菜田에서 생산된 생산물이나 개인부업으로 생산된 생산물은 개인소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토지법」(1977. 4. 29공포)도 제2장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 제9조에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규정한 후 제13조에서는 소유권과는 별도로 토지를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고,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다만 이를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농장원들은 협동농장 규약에 의하여 20~30평의 터밭(채전)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9조에서 토지는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협동농장 상호간에도 토지의 매매는 불가능하다.

體制나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 모든 經濟社會가 직면하는 기본적

經濟問題는 ① 무엇을(生産物의 構成問題) ② 어떻게(生産方法問題) ③ 누구를 위하여(分配問題)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이것이 市場과 價格機構에 의해 매개되고 調整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의 均衡은 우연적인 것이며, 반복되는 불경기와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경제의 발전속도가 느릴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失業이 발생하게 되고 이 失業을 자본가들이 노동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生産手段의 社會化를 기초로 하여 생산, 분배, 소비를 전면 계획화함으로써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48년 9월 정권수립과 동시에 내각에 國家計劃委員會를 설치하고 計劃經濟體制의 확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 하였으나, 1958년 생산수단의 국공유화가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실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의 원리에 따라 일정기간을 단위로 한「人民經濟計劃」을 작성하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모든 경제활동을 組織·運用하고 있다. 북한은, “人民經濟計劃이란 사회주의 국가가 객관적 경제법칙들의 인식 및 이용에 기초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의식적으로 설정한 인민경제부문들의 발전방향 및 발전단계들에 대한 지령적 과제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⁵⁾

현재 북한이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의 항목을 大別하면 ① 물질적 생산부문 ② 사회생산물의 유통부문 ③ 생산과 유통과정의 공통부문 ④ 비생산적 부문 등으로 구분되며, 첫째 부류에는 공업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등이 속하고 둘째부류에는 물자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양정계획, 무역계획 등이, 셋째부류에는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등이, 넷째부류에는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이 속한다.

5)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경제사전(2), 학우서방, 1973.9. pp. 834~835 참조.

물론 이러한 계획항목들은 다시 세분되어 수없이 많은 구체적인 지표들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들 항목과 지표들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黨이 제기하는 정치경제적 과업과 經濟發展 정도에 따라 변하게 된다”고 한다.

북한과 같이 硬直된 計劃經濟體制 하에서는 計劃業務의 過多와 불충분한 計劃指標 등으로 경제부문간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 소위 「計劃化事業에서의 一元化, 細部化 원칙」이다.⁶⁾ 이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중앙계획당국이 작성하는 경제운용계획과 이를 집행하는 하급부서 및 생산부서의 실행계획이 상호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자수급 차질을 피하고 부문간의 불균형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와 같이 生産, 分配, 消費 등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경제체제는 計劃이 없이는 단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⁷⁾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계획에 의해 經濟를 運用한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계획에 의해 모든 經濟活動을 적절히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결과 북한은 지금까지 經濟運用 과정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반복해 왔으며, 이러한 문제는 經濟發展을 制約하는 社會主義 經濟體制的 일반적인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2) 中央集權的 管理

북한에서는 經濟管理의 성격을 “노동과정에서의 指揮者와 生産者 또는 生産者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협조관계”로 보고 있으며, 經濟管

6) 북한은 김일성이 제시한 계획작성에서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따라 1965.9 이후 省(部·委員會), 中央機關, 道人民委員會, 道農村經理委員會 등 각급기관과 공장·기업소의 계획부서를 國家計劃委員會의 하부단위로의 개편을 시도하였고, 당시의 경제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였던 10,000여종의 계획지표중 최소한 5,000여개까지는 계획지표화 할 것을 강조한바 있다.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참조)

7)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1권 p.223.

리는 “社會的 생산과정에 대한 지휘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리고 經濟管理의 목적과 성격, 기능은 사회제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⁸⁾

북한의 경제관리는 그것이 包括하는 대상의 범위에 따라 公業관리, 농업관리 등으로 구분되고 관리대상의 單位에 따라 部門管理, 工場管理 또는 企業管理 등으로, 관리의 經濟的 내용에 따라 機械設備에 대한 관리, 資財관리, 노동관리, 재정관리 등으로 구분한다.

북한이 경제관리를 “사회적 생산과정에 대한 지휘기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관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社會主義 국가들이 資本主義 市場經濟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고도의 중앙집권적이고 행정적인 방식에 따라 경제가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경제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적용되고 있다.

첫째, 黨委員會의 集體的 指導인데 이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各급 경제기관은 물론이러니와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위에는 各급 黨委員會가 조직되어 있어서 經濟計劃의 수립으로부터 계획의 집행과정 전반을 黨이 직접 통제하고 있다.

둘째, 政治事業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은 經濟活動에 있어서의 利潤動機를 부정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生産性的 저하를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를 고취시킴으로 만회하려는 것인데, 이 원칙에 따라서 북한은 시종일관 각종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 전개되어 왔으며 현재 진행중인 제3차7개년계획 기간중에도 소위 「200일 전투」란 경제동원 캠페인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셋째, 中央集權制 원칙이다. 社會的 所有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경제는 국가의 統一的인 指導가 경제관리에 있어서 필수적인것으로 보

8) 북한 사회과학연구소, 경제사전, 1970, p.74 참조.

고 있는데 “黨의 路線과 政策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생산단위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지에 복종시키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경제를 唯一的으로 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에 의해 북한 경제의 모든 下部 생산단위는 경영의 자율성과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며 그 결과 창의성을 상실한 소극적인 경제운영이 불가피하게 된다.

넷째, 獨立採算制 원칙인데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국가로부터 필요한 物資와 資金(貨幣資源)을 받아서 生産活動을 조직하며, 생산에 대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工場·企業所에 어느 정도의 收益性を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 절약을 통해 生産性を 향상시킨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計劃目標와 生産要素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등 제한된 조건속에서 工場이나 企業所가 독자적으로 意思를 결정 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제도로 되고 있다. 獨立採算制의 근본목적은 공장·기업소 등의 경제활동이 지시된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를 資金會計 측면에서 統制하는데 있으며 그들은 이것을 「원」에 의한 통제라고 한다.

다섯째, 群衆路線의 원칙 혹은 「위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中央集權化의 강화로 야기되는 대중의 창의성 상실과 관료적이고 행정지향적인 경제관리로 인하여 나타나는 상급부서와 하부 생산단위간의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된 관리원칙이다.

결국 北韓의 經濟管理는 로동당의 集體的인 지도와 政治事業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정권기관의 唯一的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관리는 인민경제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社會主義的 경제관리제도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성은 市場經濟秩序 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다.

나. 북한 경제정책과 운용

經濟政策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국민경제생활의 개선과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社會的行動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경제정책은 국민경제규모의 외형적 成長 뿐만 아니라 經濟社會의 發展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國民福祉의 지속적인 증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이 추구하는 目標은 國民所得의 증대(成長), 所得分配의 衡平性, 經濟安定의 확보 등 세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分配와 安定은 成長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物質的 뒷받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成長은 경제정책의 기초적인 과제로 대두된다.⁹⁾

북한에서는 “경제정책은 일반적으로 지배계급 또는 그의 당이 일정한 경제적 및 정치적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가를 통하여 사회의 경제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施策”이라고 定義하고 있는데,¹⁰⁾ 이는 한마디로 경제정책 결정이 政治的 목적과 계급적 편파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 經濟政策의 기본방향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해 온 經濟政策은 소위「自立的 民族經濟」의 건설로 표방되는 폐쇄적인 自力更生路線을 기반으로 한 重工業優先策과 「國防·經濟」並進策으로 대변할 수 있다. 북한이 말하는「자립적 민족경제」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부단히 향상되며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될 뿐만 아니라, 자체기술과 자체의 원료·연료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

9) 국토통일원, 「남북한 비교총서」 경제분야(延河淸 논문) 1988, pp.50~51.

10) 북한 사회과학연구소, 경제사전, 1970, p.94

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먼저 발전시킨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경공업이나 농업부문의 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國防·經濟」並進策은 1962년 로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함으로써 표면화 되었고 1966년 10월 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金日成이 당시의 中·蘇 이념분쟁과 쿠바사태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경제발전을 다소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물론 1970年代 이후의 6개년계획(1971~1976)이나, 제2차 7개년계획(1978~1984)에서는 기본과업으로 중공업우선이나 「국방·경제」병진책을 직접 내세우고 있지는 않으며, 6개년 계획에서는 技術革新을, 제2차7개년계획에서는 「인민경제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最優先的 과업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의 시종일관된 주장이다.

기간중 북한의 豫算構造를 보면 1966년 10월 「로동당」 대표자회의가 개최된 이후 군사비의 지출은 예산총액의 30%이상으로 급증하였고, 1971년 이후에도 예산발표상의 군사비 비중은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은 여전히 예산총액의 3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기본건설 투자 내역을 보면 제1차7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총투자액의 57%가 공업부문에 투자되었고 그 중 80%가 중공업부문에 투자되었으며, 1970년대의 6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공업총투자가 83%를 차지하였다.¹¹⁾

현재 추진중인 제3차7개년계획에서는 주민들의 衣·食·住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輕工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3차계획의 1차년도인 1987년의 세출예산을 보면 住民生活와 직접연관이 있는 輕工業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저조하다. 이에 반해 金屬·化學 등 重化學工業은 자금배정에 있어서 우선을 두고 있는데, 특히 화학섬유, 비료 등 주민들의 衣生活 및 식량생산과 관련된 화

11)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비교」, 각년도별 참조.

학공업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2) 經濟開發戰略과 運用

社會主義經濟의 理念과 理想이란 측면을 염두에 둘 경우 北韓의 경제개발과정은 경제의 量的成長보다는 주민들의 福祉·厚生에 政策의 우선을 두고 安定과 均衡分配에 치중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經濟政策 基本方向 검토에서 그 윤곽이 드러난 바와 같이 北韓의 經濟開發戰略은 오히려 不均衡成長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초기 단계에서는 重工業建設에 필요한 자금을 輕工業과 農業部門에서 조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1947년과 1959년에 각각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주민들의 遊休貨幣資金을 경제건설 자금으로 회수하였다. 또한 5개년계획(1957~1960)¹²⁾기간중에는 농민은행을 국가은행으로 개편하여 농업 부문에서 중공업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한편 稅制면에서는 제1차7개년계획(1961~1970)¹³⁾기간 중 소비재에 대한 거래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주민의 소비억제를 통해 경제건설자금을 동원하는 등 재정·금융상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북한 不均衡成長 전략은 '8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예로서 북한의 국민총생산을 1차분배면에서 분석해 보면 1960년에는 消費와 蓄積의 構成比가 약 8대 20으로 나타났으나 1984년에는 58대 42로 소비의 구성비가 개발초기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주민의 消費抑制를 통해 필요한 경제건설자금의 동원을 극대화 시키고, 농업과 경공업부문의 희생을 통해 중공업 건설에 자금을 집중투입해 왔으며, 千里馬운동과 같은 각종 社會主義

12) 5개년계획은 1957년부터 5개년 간으로 계획되었으나 계획목표를 조기 달성한것으로 발표하고 1960년에 종료되었음.

13) 제1차7개년 계획은 목표미달로 3년간 연장하여 1970년에 종료되었음.

勞動競爭運動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주민의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 하는 등 산업간 불균형성장전략을 추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이상과 같은 기본경제정책 방향과 開發戰略을 채택한 결과 오늘날 북한경제는 다음과 같은 세 문제점이 역기능적으로 악순환하는 모순에 봉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자급자족적 폐쇄경제로 국제협력이 불원활함으로써 해외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곤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술개발 능력도 부족하여 전반적인 산업기술 革新이 부진하였다.

둘째, 따라서 경제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술이 낙후하여 생산성 향상이 부진하였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國際競爭力을 상실하게 되었다.

셋째, 또한 수출산업의 未育成과 전반적인 산업생산력의 부족은 수출의 부진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석유를 비롯한 해외자원 획득의 곤란으로 생산원자재 부족이 만성화 됨으로써 경제발전을 제약하였다.

넷째, 중공업의 우선적 건설과 군사력 강화과정에서 농업과 경공업 발전의 경시 및 개발자원 동원을 위해 주민복지의 극한적인 희생이 강요됨으로써 勞動生産性的 저하를 가속화시켰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경제가 능률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인당 GNP가 6,000불이상, 인구는 5,000만 이상의 국가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북한경제침체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함께 경제정책의 誤導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社會主義經濟의 變化와 北韓經濟

1) 社會主義經濟의 變化

1970年代 후반부터 소련·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게 된 문제는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추세로 요약할 수 있는데 1980年代에 들어오면서 특히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은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고도성장과는 달리 負(一)의 成長까지도 기록하게 되었다.

(表 1) 社會主義諸國 經濟成長 推移

(單位：%)

國家	期間	61-65	66-70	71-75	76-79	1980	1981	1982	1983
	平均	平均	平均	平均	平均				
불 가 리 아		6.5	5.1	4.7	2.0	-3.1	3.0	3.3	0
체 코		2.4	3.4	3.3	2.1	0.5	-0.6	1.5	1.7
東 獨		3.0	3.1	3.5	2.4	2.1	2.1	0	2.0
헝 가 리		4.0	3.0	3.3	2.3	1.0	0	1.4	-0.4
폴 란 드		4.5	4.0	6.5	1.5	-2.4	-5.3	-0.6	3.8
루 마 니 아		5.3	4.9	6.7	5.4	-1.7	0.5	2.4	1.1
蘇 聯		3.6	6.6	4.3	2.6	1.2	1.8	2.0	3.2
유 고		6.9	6.3	6.1	6.5	2.3	1.4	0.7	-1.2

출처 :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4)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하였음.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 경제가 초기 발전단계를 벗어나면서 성장율이 점차 둔화된 공통적인 요인은 다음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는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産業構造가 복잡화되어 가는 후기 발전단계 즉 산업조정단계로 들어서면 計劃指標의 數가 計劃機關이나 企業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불어나게 되어 消費와 蓄積, 그리고 生産部門間의 均衡을 保障할 수 없게 되며, 결국은 資源의 效率的 配分이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經濟活動을 刺戟하는 利潤動機(Incentive Mechanism)가 미흡하여 변화된 經濟社會 여건 속에서 새로운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供給 측면에서는 생산의 부족현상이 유발되고, 需要 측면에서는 消費財의 부족과 消費統制로 인한 노동자의 불만이 증대되어 노동생산성이 더욱 저하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한편으로는 物質的 刺戟의 결여가

企業의 技術革新 및 科學技術의 發展을 阻害함으로써 技術 낙후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軍事費의 과다지출인데, 과다한 군사비의 지출은 자본투자 및 소비재 지출간의 불균형적 자원배분과 전반적인 기술진보의 희생아래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¹⁴⁾

일부 東歐의 社會主義國家는 전통적인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결함을 인식하고 1960年代부터 경제개혁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社會主義 宗主國인 소련, 중국에서도 經濟開放과 改革이 본격화 됨으로써 세계경제는 드디어 理念의 장벽을 넘어선 듯한 변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社會主義國家들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형화 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결함으로부터 출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유재산제도의 부분적인 도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인데, 소규모의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관련 시설을 국가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私企業을 허용하거나 농업의 청부제도나 자영농지의 확대 등은 실질적으로 농지나 생산수단의 사적 사용권 인정을 바탕으로 점차 私有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⁵⁾

둘째는 경제 조정에 市場經濟의 原理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意思決定의 分權化, 가격통제조치의 완화, 기업이나 민간주도형 경제정책의 장려, 기업의 자율권 확대, 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의 축소는 물론 최근 중공에서 제정한 企業破產法 등은 사실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포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이며, 체제개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社會主義 諸國은 經濟改革의 추진과 함께 對外開放을 확대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되고 있다.

2차세계대전후 소련의 영향권으로 편입된 共產國家들은 초기의 社會主義經濟 건설단계에서 대부분 스탈린식 자급자족 경제(Autarky)

14) 국토통일원, 「소련 및 동구제국의 경제개혁과 중공경제개혁의 비교연구」(임양택 교수논문), 1986. 12. pp.19~20.

15) 헝가리의 경우 1989년 1월부터 시행될 새기업법에 의하면 고용인원이 500명 미만인 기업은 사유물 가능케 했으며, 이와함께 개인의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체제를 구축하고, 理念의 장벽속에서 域內 무역과 협력을 위주로 경제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 體制的 모순과 함께 장기적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일부 동구국가들은 1960年代부터 부분적인 경제개혁과 병행하여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본도입과 교역확대를 시도하였으나 경제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對西方 外債의 증가란 새로운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1980년을 기준으로 한 대서방 무역수지 현황은 소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¹⁶⁾ 소련 및 동구제국 전체의 최근 外債총액은 1986년 1, 131.6억불에서 1987년에는 1, 286억불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¹⁷⁾ 이 중 1986년 현재 소련의 대서방 외채는 총 376억불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채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국가들은 西方企業과의 합작이나 합영형태를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資本·技術의 도입을 추구하고, 經濟開放조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고르바초프」 및 鄧小平 집권 이후 中·蘇의 변화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2) 北韓의 經濟狀況

북한의 經濟成長 과정을 검토해 보면 북한경제 역시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장추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1970년대이후부터 나타나는 성장둔화의 근본적인 요인도 역시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민경제 5개년계획」이 종료된 1960년까지의 북한경제는 전후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中·蘇의 경제원조와 내부자원 및 노동력의 강제동원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의 제1차7개년계획 기간으로 부터 中·蘇의 원조감소와 군사비 지출의

16) US.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7.

17) OECD 특별보고서, 1988. 3. 4

증대 등 재정적 요인과 체제적 요인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북한의 實質成長率은 6개년 계획 기간(1971~1976)에는 年平均 5.9%, 제2차7개년계획 기간(1978~1984)에는 年平均 4.5%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¹⁸⁾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기본틀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있으나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를 계기로 對外貿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1984년 9월에는 대외자본과 기술도입을 목적으로 한 「合營法」을 발표함으로써 경제개방을 위한 정책변화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 역시 최근 세계경제의 변화추세를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만은 없는 내외적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3. 南北韓 經濟力量 比較

가. 經濟力 評價의 基準과 制約

한 나라의 經濟力은 그나라 국민의 衣·食·住 생활과 후생·복지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財貨와 用役을 조달하는 기반이며, 政治·外交·軍事力 등 국가의 자주독립을 유지 강화하는데 기본적인 힘이 된다. 그러나 일국의 경제력을 실제로 측정하는 일이나 국가간에 이를 비교평가하는 일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특히 南北韓 사이에는 서로가 추구하는 經濟理念과 體制 및 전략적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시각에서 보거나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전

18) 국토통일원, 「社會主義諸國 및 北韓經濟 狀況 變化와 韓半島 統一與件」, 1986, p.27 및 각년도별 남북한경제력 비교참조.

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클라인(Ray. S, Cline)은 “經濟力이란 전체적인 成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에 기여하는 경제생활의 상이한 국면들을 여러가지 관점에서 고찰할때만이 파악이 가능한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하였다.¹⁹⁾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가장 포괄적인 지표로서는 국민소득을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국민총생산(GNP)이 사용된다.

국민총생산액의 크기와 성장에는 한 국가의 물질적인 생산은 물론이고 생활의 質에 영향을 미치는 用役과 經濟組織 및 技術能力, 나아가서는 經濟發展에 지향되는 두뇌의 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종합적인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NP는 總量概念에 의한 측정방법으로서 부득이 한 나라의 경제적인 특성 및 구조까지는 감안할 수 없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²⁰⁾때문에 GNP의 크기만으로 경제력을 평가하는 데는 制約性이 다르며, 특히 안보나 군사전략 등 經濟外的인 목적에서의 경제력 평가지표로 이용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GNP에 의한 경제력 평가상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Cline은 그의 「국력분석론」에서 GNP와 함께 에너지의 自給度, 非燃料 鑛物資源이나 工業生産力, 食糧自給度, 對外貿易의 존도 등을 추가로 검토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나. 總量 및 財政 規模

1) 總量 規模

人口와 國土面積은 國力評價의 중요한 要素가 되며 勞動力과 市場의 규모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므로 經濟力量 比較를 위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87년 현재 南北韓의 人口를 보면, 한국이 약 4,208만명으로 북한의 2,069만명에 비해 약 2배가 되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人口增加率は 南

19) Ray S.Cline, 「국력분석론」, 국방대학원역, 1981, p.57.

20) 前掲書 p.60.

北韓이 공히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동년 한국은 1.21%, 북한은 1.7% 수준으로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여성의 취업율이 높아 산아율이 감소됨으로써 전체 인구성장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國土面積에 있어서는 북한이 全國土 面積 22만여km²중 55%에 해당하는 12.2만여km²를 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9.9만여km²를 점하고 있어서 人口密度는 1km²당 북한은 약 170명, 한국은 425명으로 매년 증가 일로에 있다. 남북한은 공히 국토면적의 확장을 위해 해안 간석지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되는 면적은 아직도 미미하며 매년 국토면적에 관한 통계를 수정할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다.

人口가 많다는 것은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오히려 인구부양이나 교육, 공해 등 각종 경제문제의 근원이 된다. 인가와 국토면적은 북한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북한은 전체면적의 80% 이상이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농업이나 수송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表 2〉 南北韓 總量指標 (1987)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인 구	千명	42,082	20,690
면 적	千km ²	99.2	122.1
인구밀도	명/1km ²	425	170
국민총생산(GNP)	億 \$	1,186.0	193.7
1인당 GNP	\$	2,826	936
실질경제성장율	%	12.0	3.3

출처 :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8.8 및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1987년도 南北韓의 國民總生産 規模는 韓國이 1,186억불로 推計된 데 비해 北韓은 193.7억불로 推計되고 있어서 북한의 경제력은 대략 한국의 16.3%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1인당 GNP는 한국이 2,826불로 높아진 반면 북한은 936불로 한국의 33.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같은 해의 經濟成長率은 한국이 전년도에 비해 12%의 실질성장율

이러한 반면 북한은 3.3%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경제가 1986년도의 성장을 2.1%로부터 성장추세를 약간 회복하게 된 것은 1987년도는 현재 추진중인 제3차7개년계획의 착수년도로서 인적·물적 자원을 기본건설에 총동원한 결과로 보여진다.

북한 GNP 평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외 각 연구기관의 추정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여기에서 본의아닌 오해를 유발하게 된다. 이미 잘 알려진바와 같이 사회주의국가에서 총량지표로 사용하는 國民所得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총생산(GNP)과는 그 개념이 상이하므로²¹⁾ 북한의 GNP를 추정하는 방법이나 추정과정에서 이용되는 기초통계의 선택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對美달러 환율은 기본환율과 상업환율(무역환율)간에 2배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선택에 따라서는 북한의 GNP 추정결과가 최소한 2배 이상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²²⁾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비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6년의 1인당 국민소득(사회주의 개념)은 2,400불이라고 주장되고 있는데²³⁾ 이를 그대로 믿을 경우 1987년도 북한의 1인당 GNP는 한국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北韓當局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統計資料를 거의 발표하고 있지 않는 까닭에 그들의 단편적인 주장은 신빙성을 결

2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총량지표는 주로 사회총생산액(Gross Social Products)과 국민소득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회총생산액의 개념은 일정기간에 공업, 농업, 기본건설, 화물수송 등 생산적 부문에서 창조된 물질적 생산의 총체를 화폐가치로 표시한 것으로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이 제외되고 연료, 원료등 중간재가 이중 계산되고 있다.

국민소득은 사회총생산액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충한 나머지 부분, 즉 그해에 새로 창조된 가치액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공식화하면 사회총생산(GSP) = C + V + M, 국민소득 = V × M으로 된다. 따라서 서방국가에서 사용하는 GNP, NNP, NI 등의 개념과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공식중 C는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액, V는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액, M은 사회적 잉여가치 임)

22) 북한 국민소득 추계에 대해서는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에서 1988.6 발행한 「북한 GNP 추계 방법과 해설」을 참고하기 바람.

23) 方脫柱, 조선개관, 평양의국문출판사, 1987, 10.

여하고 있다. 더우기 북한이 발표하는 예산규모는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허위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2) 財政規模

財政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공공단체의 경제라고 정의되며, 經濟主體로서의 국가기능과 간섭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재정的重要性이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추세이다. 특히 한국에 비해 북한의 재정은 그 역할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재정은 그 범위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정부예산은 물론이고 소위 「사회주의적 공장·기업소」 재정²⁴⁾ 및 각종 보험과 신용 등 金融의 기능까지도 재정 속에 포함되고 있다.

1987년 南北韓의 국가예산 규모를 보면 한국은 일반회계 부문의 歲出總額이 전년도에 비해 16.4% 증가한 195.3억불이며 북한은 전년비 5.9% 증가한 140.6 억불로 발표되었다.

GNP에 대한 국가예산의 비중 즉, 재정부담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GNP의 16.5%인데 반해 북한은 72.6%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북한경제체제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재정부담율이 한국에 비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총액에 있어서 한국의 약 72%에 불과한 것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북한을 6배이상으로 앞서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북한의 재정부담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경제를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범위가 그만큼 강력함을 의미하므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경제력을 집중 동원하는 데있어서는 한국의 민간주도형 경제보다 효과적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24)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공장이나 기업소 경영에 소요되는 투자 및 운영자금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국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1987년 세출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韓國은 세출총액의 9.4%가 일 반행정비이고 방위비 30.6%, 개발비 45.5%, 나머지가 지방재정교 부금과 채무상환 등의 기타 세출로 되어 있다. 반면 北韓의 세출항 목별 구성비는 인민경제비 66.4%, 사회문화비 18.9%, 군사비 13. 2%, 기관관리비 1.5% 등으로 발표되었다.

북한의 세출예산 내용중 항상 문제가 되는 부문은 군사비 지출이 다. 1966년 10월 「국방·경제 병진책」이 발표된 직후인 1967년 부터 1971년 까지의 기간 중 북한이 공식발표한 세출예산가운데 군사비의 비중은 30.4~32.4%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 후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력은 질적 양적인 면에서 계속 증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 이후 예산상의 군사비 비중은 오히려 17%이하로 급격히 낮 아 졌다.

'80년대 중 북한의 신형 軍事裝備 도입내용을 보면 MIG 21, 23, 25, 29전투기, AN-2 수송기, YAK-18 훈련기, NI-2 및 500MD 헬 기 등 다량의 군용기와 SA-3地對空, SCUD-B 地對地, SILK WORM 등 미사일 및 OSA 급 유도탄정 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군사장비 도입 실적으로부터 북한의 실질군사비 지출규모는 예산상 의 군사비규모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의 상황들을 감안하여 분석하면 1987년도 북한의 실질군사비

〈表 3〉 南北韓 財政規模 (1987)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재정규모(세출)	億\$	195.3	140.6
재정부담율(재정/GNP)	%	16.5	72.6
실질군사비	億\$	59.8	42.2
군사비부담율(군사비/GNP)	%	5.0	21.8
1인당군사비	\$	142	204

출처: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8.8 및 경제기획원, 「중요경제지표」 1988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는 예산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약 42.2억불 정도가 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군사비의 지출증대 능력이 한계에 달함으로써 그 규모가 같은 해 한국의 방위비 59.8억불 보다 작아진 것이 특징이며, 이같은 상황은 이제 북한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 主要産業別 生産力

1) 食糧生産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경제적으로 資源, 技術, 貿易 등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식량,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자원은 종종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戰略手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자원으로 세계인구가 증가할수록 더욱 무서운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로 되고 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農耕地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식량의 총생산량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며 주곡인 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70년대 중반 이후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1987년도 한국의 農耕地 면적은 총 214.3만 ha이며, 그 중 논은 135.2만 ha, 밭은 79.2만 ha로서 총 경지면적의 63.1%가 논으로 水稻作 중심의 農作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1987년도 穀物 총생산량은 精穀기준으로 668.7만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쌀은 82.1%인 549.3만톤을 생산하여 주곡의 自給水準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영단위의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해 낮고 인구의 증가는 물론 소득증대에 의

해 국민 식생활의 패턴이 고급화, 다양화 됨으로 식료품 원료용, 사료용 곡물수입이 늘어나 전체적인 식량자급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도 중 식료품의 가공수출을 위한 원료용, 사료용을 포함한 한국의 양곡도입 실적은 국내 총생산량을 능가하는 약 1,015만톤이나 되어 국가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表 4〉 南北韓 營農基盤과 食糧生産量 (1987)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경지면적	千ha	2,143	2,140
(그중 논)	〃	(1,352)	(644)
(그중 밭)	〃	(792)	(1,496)
농가호당 경지면적	ha	1.15	1.38
곡물 생산량	精穀千톤	6,687	4,952
(그중 쌀 생산량)		(5,493)	(2,034)
단보당 쌀 생산량	kg/단보	436	316

출처 :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88. 8 및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북한 역시 식량문제는 경제정책의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 제1차7개년계획 기간인 1964년 2월에는 金日成이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고 농촌의 水利化, 電氣化, 化學化, 機械化 등 소위 四化運動을 전개하여 營農基盤의 강화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食糧問題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인민경제계획을 보면 1950년대 말 5개년계획에서도 “인민의 食·衣·住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과업목표로 제시되었으나, 30년이 지난 후의 현행 제3차7개년계획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기본과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1987년도의 북한 耕地面積은 총 214만 ha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는 예산총액의 30%에 해당하는 약 42.2억불 정도가 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군사비의 지출증대 능력이 한계에 달함으로써 그 규모가 같은 해 한국의 방위비 59.8억불 보다 작아진 것이 특징이며, 이같은 상황은 이제 북한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 主要産業別 生産力

1) 食糧生産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경제적으로 資源, 技術, 貿易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식량,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자원은 종종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戰略手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식량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자원으로 세계인구가 증가할수록 더욱 무서운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로 되고 있다.

한국은 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량생산의 기반이 되는 農耕地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식량의 총생산량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으며 주곡인 쌀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70년대 중반 이후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1987년도 한국의 農耕地 면적은 총 214.3만 ha이며, 그 중 논은 135.2만 ha, 밭은 79.2만 ha로서 총 경지면적의 63.1%가 논으로 水稻作 중심의 農作體系를 형성하고 있다.

1987년도 穀物 총생산량은 精穀기준으로 668.7만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중 쌀은 82.1%인 549.3만톤을 생산하여 주곡의 自給水準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경영단위의 영세성으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해 낮고 인구의 증가는 물론 소득증대에 의

해 국민 식생활의 패턴이 고급화, 다양화 됨으로 식료품 원료용, 사료용 곡물수입이 늘어나 전체적인 식량자급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도 중 식료품의 가공수출을 위한 원료용, 사료용을 포함한 한국의 양곡도입 실적은 국내 총생산량을 능가하는 약 1,015만톤이나 되어 국가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表 4〉 南北韓 營農基盤과 食糧生産量 (1987)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경지면적	千ha	2,143	2,140
(그중 논)	"	(1,352)	(644)
(그중 밭)	"	(792)	(1,496)
농가호당 경지면적	ha	1.15	1.38
곡물 생산량	精穀千톤	6,687	4,952
(그중 쌀 생산량)		(5,493)	(2,034)
단보당 쌀 생산량	kg/단보	436	316

출처 :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88.8 및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북한 역시 식량문제는 경제정책의 주요과제로 되고 있다. 제1차7개년계획 기간인 1964년 2월에는 金日成이 「社會主義 農村問題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고 농촌의 水利化, 電氣化, 化學化, 機械化 등 소위 四化運動을 전개하여 營農基盤의 강화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食糧問題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의 하나인데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인민경제계획을 보면 1950년대 말 5개년계획에서도 “인민의 食·衣·住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과업목표로 제시되었으나, 30년이 지난 후의 현행 제3차7개년계획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기본과업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1987년도의 북한 耕地面積은 총 214만 ha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논 면적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64.4만 ha에 불과하고, 대신 밭의 면적은 149.6만 ha로 田作 중심의 營農體系로 되어 있다. 연도 중 穀物生産量은 精穀을 기준으로 총 495.2만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쌀은 전체 곡물생산량의 약 41%인 203.4만톤이고 나머지는 옥수수를 비롯한 잡곡과 薯類이다.

북한은 부양인구 수가 한국보다 적으며 강력한 식량소비 통제로 인해 인구 1인당 곡물생산량이나 식량자급도는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점은 북한경제의 강점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이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은 못되며, 다만 外貨부족으로 인해 쌀의 일부를 수출하고 대신 잡곡을 수입해 수요를 충당해 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社會主義的 集團農業體制의 고질적인 폐해인 농민들의 생산의욕 침체, 일기불순 등 諸要因으로 인하여 흉작이 계속된 결과 1987년 중에는 소련,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쌀과 옥수수 등 식량을 緊急導入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食糧增産을 위해 30만정보의 간석지 건설이란 목표를 세우고 農耕地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2) 地下資源 및 에너지 生産

韓半島에 매장되어 있는 鑛物의 종류는 무려 30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韓半島는 세계 鑛物의 標本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²⁵⁾ 韓半島의 地質 형성상의 특징은 북부에서 남부지역으로 내려올수록 비교적 새로운 지층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 지하 자원의 매장량도 지질형성 연대가 오랜 북부지역이 풍부하다. 그러나 鑛物의 실제 생산량은 북한이 그 실적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鐵鑛石이나 石炭을 제외하고는 남북간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5) 국토통일원, 「북한의 산업지리」, 1977.

1987년 한국의 철광석 생산실적은 전년도 보다 4만여톤 증가된 57만톤에 불과하고, 1,570만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무산, 은율등 대규모의 광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간 980여만톤의 철광석을 생산할 수 있는 施設能力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철광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속광물 자원을 輸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나 북한은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주요한 금속광물의 自給率이 매우 높고, 정책목표에 있어서도 원료·연료의 자급율을 70%로 설정하고 있다.²⁶⁾

그러나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자급율이 한국에 비해 높다는 것은 경제구조상 하나의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자력갱생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생산비의 國際比較優位를 무시한 자원정책을 고수해온 결과 공업부문에서의 원료부족, 가동율저하, 생산비의 증대 등 경제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원의 해외의존에 따른 需給 不安要因 등 취약점을

〈表 5〉 南北韓 主要地下資源 및 에너지 生産量 (1987년)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철광석 생산량	萬톤	57	980
석탄생산량	„톤	2,427	3,900
발전설비용량	萬 kw	1,902.1	637.7
(그중수력)	„	(223.2)	(367.7)
(그중화력)	„	(1,107.3)	(270.0)
(그중원자력)	„	(571.6)	(—)
※원유도입량	萬배럴	21,600	2,212

출처 :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1988, 8),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1988) 및 상공부, 동자부 통계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26)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경험」,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1983, p.89.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주요자원의 海外開發 輸入에 정책비중을 높이고 있다.

에너지산업은 공업화의 원동력이 되는 基幹産業으로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南北韓의 立地條件을 비교하면 단연 한국에 비하여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 북한의 石炭 매장량은 유연탄과 무연탄을 합쳐서 총 147.4억톤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한반도 전체 매장량의 91% 이상이 북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山勢가 험하고 계곡이 많아 수력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包藏水力도 북한은 1km²당 72.4Kw 나 되어 한국보다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치인 28Kw에 비하면 2.6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은 공히 국내 石油探査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성 있는 油田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製鐵用 코크스나 화학공업 원료인 瀝靑炭도 매장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鑛物資源은 전량 輸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1987년도의 南北韓 石炭生産量을 보면 한국은 연도중 총 2,427만톤의 무연탄을 생산하였으나 화력발전에 필요한 석탄을 비롯하여 총 2,928만톤을 輸入하였다. 반면 북한은 3,9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여 그 중 일부는 輸出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간접적으로 발표한 선전책자에 의하면 1986년에 이미 7,80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²⁷⁾ 이는 북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가정 취사용으로 개발 이용할것을 주장하고 있는 超無煙炭이나²⁸⁾ 低熱炭 등을 생산통계에 포함시킨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南北韓의 發電施設容量을 비교해 보면 1987년 현재 한국은 수력이 223.2만 kw, 화력 1,107.3만 kw, 원자력 571.6만 kw 등 총 1,902.1만

27) 方駝柱, 조선개관, 평양의국문출판사, 1987.10.

28) 초무연탄이란 무연탄이 생성되기 훨씬 전인 고생대나 원생대 시기에 형성되었다는 의미에서 超無煙炭이라 하며, 발열량이 낮고 회분이 많아 가정용 연료로만 쓰일 수 있다. 북한은 에너지 부족으로 수년전부터 이를 개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는 초무연탄 연합기업소를 설치하여 대량채굴을 기도해 왔다.

kw의 시설용량을 보유하게 되는데 반해, 북한은 수력 367.7만 kw, 화력 270만 kw 등 총 637.7만 kw의 시설용량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북한 電力 生産構造上의 특징은 한국은 화력과 원자력의 비중이 수력보다 높아서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전력공급의 安定이 보장되나 북한은 수력 위주에 원자력발전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결과로 계절에 따라 電力공급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電力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제3차7개년계획 기간 중 소련의 설비와 기술지원에 의해 44만 kw 급 4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건설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에너지 자원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石油은 남북한이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1987년도의 原油 도입 실적은 한국이 2億1,600萬배럴인데 반해, 북한은 2,212萬배럴로 한국의 원유도입량은 북한의 10배정도가 된다.

남북한 에너지 소비구조상의 특징은 한국이 석유 依存的인 반면 북한은 석탄 의존적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은 에너지 공급의 해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으나 북한은 풍부한 석탄자원을 바탕으로 에너지의 자급도가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화학공업이 석탄화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화학공업 원료용 석탄수요가 많아 원료, 연료의 부족이 북한경제의 만성적인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工業生産力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經濟圈이 남북으로 각각 분리됨으로써 40여년간의 경제개발 과정을 통해 각기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하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의 일차적인 관심은 낙후된 공업건설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채택한 공업화의 戰略은 매

우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국은 국민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경공업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점차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내자본을 축적한 후 중공업과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었다. 반면, 북한은 日帝가 건설한 산업시설과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 이용을 통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 후 축적된 기술과 자체 자원, 자체의 설비로 경공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공업화 전략의 차이로 개발초기에는 북한의 공업생산력이 한국을 능가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공업생산력발전은 가속화 된 반면, 북한은 질적, 양적 면에서 성장속도가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 模型은 소련이나 중국의 경제개발 모델로서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鐵鋼生産은 電力, 시멘트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이나 工業化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철강은 자동차, 기계, 선박, 전자, 전기 등 중공업의 기초소재이며 군수산업의 근간이 되므로 세계 각국은 일정수준의 자급을 유지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1987년의 남북한 철강생산능력은 한국이 銑鐵 1,167만톤, 粗鋼 1,830만톤, 壓延鋼材 2,192만톤으로 전년도 보다 각각 200만톤 이상이나 증대되었다. 한편 북한은 銑鐵 513만톤, 鋼鐵 481만톤, 壓延鋼材 356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북한의 강철생산량은 673만톤에²⁹⁾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87년도 소련년감에 의하면 1985년의 북한 강철생산량은 380만톤으로 오히려 국내에서 추정한 실적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 북한 鐵鋼工業의 생산구조적 특징은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생산능력이 작아지고 있는 점인데 그 원인은

29) 方脫柱, 조선개관, 평양의국문출판사, 1987.10.

선철이나 강철 등 一次加工製品 단계에서 생산품의 일부가 수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부족에 따른 설비도입 차질로 '70년대 후반 이후 계획되었던 壓延施設의 擴張이 부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 6〉 南北韓 主要金屬製品 生産能力 (1987년)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銑	鐵	萬톤	1,167	513
粗	銅	〃	1,830	481
壓 延	銅 材	〃	2,192	356
亞	鉛	〃	18.8	27.5
	銅	〃	15.0	9.0

출처 : 韓國은 상공부자료, 北韓은 국토통일원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남북한 鐵鋼工業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단위공장별 시설규모나 기술수준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점인데 한국은 최신 설비로 일관생산공정을 갖추고 있어서 생산성이 선진 공업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앞서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은 아직도 시설규모가 작고 자동화 및 일관공정체계가 미비된 상태에있다.

北韓은 1980년에 발표한 80년대 10大 展望目標에서 1980년대말까지 鋼鐵생산목표를 연간 1,500만톤으로 설정한바 있으나 1987년에 발표된 3차7개년계획에서는 이를 1,000만톤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철강공업의 시설확장에 필요한 자본확보, 철광석 공급 능력 등 극복하기 어려운 제반 난관에 봉착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鐵鋼과 함께 機械 및 建材工業의 素材로 이용되는 非鐵金屬工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한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7년 한국의 主要 非鐵金屬製品 생산능력은 鉛 11.5만톤, 亞鉛 18.8

만톤, 銅 15만톤, 알미늄 1.8만톤 등이며, 북한은 鉛 7.8만톤, 亞鉛 27.5만톤, 銅 9만톤, 알미늄 2만톤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需給면에서 볼때 한국은 생산량의 대부분이 국내산업의 素材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상당량이 輸出商品化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非鐵金屬을 輸出戰略産業으로 중점개발해 왔으며, 그 결과 최근 아연과 연은 鐵鋼製品과 함께 북한의 主要 外貨획득 원천이 되고있다. 특히 2차7개년계획 기간 중 검덕광산의 選鑛施設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亞鉛 생산량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한편 무역적자와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金을 비롯한 귀금속 증산을 위한 시설확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북한은 1987년 초에 在日 朝總聯系의 동락상사와 합작으로 雲山金鑛開發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운산금광의 再開發을 추진하고 있다.

機械工業은 重工業의 가장 핵심적인 生産部門이다. 그러나 南北韓 機械工業의 생산력 비교는 단순한 量的 비교만으로는 미흡하며 제품의 정밀도나 기술수준, 設計能力, 素材生産能力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나 자료의 부족으로 기계제품의 수출능력과 연관하여 검토 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의 主要 機械製品別 生産시설 能力을 비교해 보면 1987년 현재, 한국은 연간 자동차 146.9만대, 造船 300만톤(G/T), 工作機械 5만대, 농기계(트랙터, 경운기 등) 36.4만대 등으로 생산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

<表 7> 南北韓 主要機械工業 生産能力 (1987년)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자 동 차	萬대	146.9	2
조 선	萬톤(G/T)	300	21
공 작 기 계	萬대	5	3
트 랙 터	"	36.4	3.2

출처 : 한국은 상공부자료, 북한은 국토통일원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고 있다. 반면 북한의 기계공업 생산능력은 연간 자동차(트럭) 2만대, 조선 21만톤(G/T), 공작기계 3만대, 농기계 3.2만대 등으로 장기간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나, 제3차7개년계획 착수이후 승리자동차공장의 일부 확장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희천공작기계공장이 소련의 지원으로 확장중에 있다.

오늘날 기계공업의 발전방향은 電子工業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고도로 정밀화, 자동화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 초기에서부터 기계공업 육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대부분의 공작기계와 재래식 설비 등을 내수용으로 자체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電子工業의 낙후 등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국제수준과는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서 국제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기계공업을 비롯한 重化學工業의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선진기술의 도입에 주력함으로써 짧은 기간내에 수송, 전자, 통신, 공작기계 등 주요 기계제품의 생산기술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들 제품이 수출의 주종상품으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化學工業 역시 경제개발 초기에는 金屬, 機械工業과 같이 북한이 우위에 있었던 산업이다. 그러나 1987년 현재 남북한의 주요 化學工業 製品의 生産能力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한국이 대부분 앞서가는 입장에 있다. 다만 化學肥料의 생산량은 최근 북한이 한국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이를 질소, 인산, 칼리 등 화학성분함량으로 분석하면 한국보다 생산량이 오히려 적다.

남북한 화학공업의 특징은 이미 에너지산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은 石油化學系列 중심으로 개발된데 비해 북한은 자체 원료자원에 의존하는 石炭化學系列로 발전해 왔으며, 이점은 북한 화학공업이 갖는 하나의 강점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1987년 현재 한국의 주요 화학 및 건재공업 생산현황을 보면 일일 精油 能力은 79만배럴에 달하고 실제 정유량은 3,558만톤이었다. 화학비료는 311만톤을 생산하였고 주요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185만톤에 이른다. 시멘트는 2,600만톤을 생산하여 생산능력 2,986만톤에는 생산이 다소 미달되었다.

반면 北韓은 일일 7만배럴의 정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351만톤, 합성수지 10만톤, 시멘트 932만톤 등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차7개년계획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의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와 관련된 일부 화학공업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건설대상으로는 비날론 10만톤의 생산능력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순천비날론공장과 사리원카리비로 공장 등을 들 수 있다.

輕工業 부문은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업부문으로서 특히 북한과 같이 自力更生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폐쇄사회에서는 경공업의 생산능력은 주민들의 소비생활 수준을 가늠하는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 공식발표하였던 어떠한 실적자료에서도 織物 이외의 생산통계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인데 이것은 북한 경공업생산 능력의 낙후에 기인된 것이다.

〈表 8〉 南北韓 化學 및 主要 消費製品 生産能力 (1987년)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정유능력(일산)	萬배럴	79	7
화학비료	萬톤	311	351
주요합성수지	"	185.4	10
시멘트	"	2,986	932
TV 수상기	萬대	1,250	24
냉장고	"	350	12.6
직 물	億m ²	70	6.5
신 발	百萬足	470	60
손목시계	萬個	1,200	10

출처: 한국은 상공부, 북한은 국토통일원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1987년 현재 한국의 주요 消費財工業 생산능력은 TV 수상기 1,250만대, 냉장고 350만대, 직물 70억㎡, 신발 470만족, 손목시계 1,200만개 등이나, 북한은 TV 수상기 24만대, 냉장고 12.6만대, 직물 6.5억㎡, 신발 60만족, 손목시계 10만개 정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소비재공업은 수출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높으며 가전제품의 경우는 사회주의국가들에도 널리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인해 실제 생산량은 생산능력을 대부분 하회하고 있으며, 특히 제품의 질적 수준은 다른 공산품보다 더욱 조악한 처지에 있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의 공업생산력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품의 종류, 기술수준, 디자인, 포장 등 종합적인면에서도 이제 남북간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 貿易 및 國際收支

1) 貿易

韓國은 1960년대의 경제개발 초기에서부터 국내자원과 자본 및 기술의 부족이란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본, 기술, 자원을 도입하여 경제를 건설하고 狹小한 국내시장의 제약을 해외시장을 통해 보완하는 이른바 對外指向的 開發戰略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무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수출 증가로 인한 국내경제의 성장, 고용, 소득유발 효과가 지대함은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술의 개발, 관리능력의 제고 등 선진산업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

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경제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北韓은 소위 「自立的 民族經濟의 건설」이라는 이념적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自力更生 원칙을 추구함으로써 대외무역은 어디까지나 自給自足 경제의 補完的 手段으로 간주되어 왔다. 따라서 輸出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설비나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의 輸入을 위한 외화 획득수단으로 간주됨으로써 국내산업이 국제경제와 연관되지 못하는 결함을 초래하였다.

1987년 현재 한국의 무역규모는 수출 472.8억불, 수입 410.2억불로 수출입 총액은 883억불에 달한데 반해, 북한은 수출 16.7억불, 수입 24.0억불로 수출입 총액은 40.7억불에 불과하여 무역규모는 한국의 4.6% 수준에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貿易依存度를 보면 한국은 무려 74.5%로 높게 나타나 국제경제 동향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높을 수 밖에 없으나 북한의 貿易依存度는 21%에 불과하여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가진 이러한 강점은 낮은 所得水準, 저조한 經濟成長 등 값비싼 희생의 代價를 치루고 얻어진 것이며 최근에는 그것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북한이 1980년 6차당대회 이후 계속해서 수출의 증대에 관심을 쏟고 있는것을 보면 그들의 낮은 무역의존도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들은 이제 무역의존도를 높이는 한이 있더라도 수출증대에 의해 經濟成長을 촉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편 수출상품의 구조적인 면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수출총액의 92.1%가 공산품이며 공산품 수출액의 54.9%가 重化學工業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국의 공업생산력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對日 수출상품구조를 분석한결과

42.2%가 1차산업 제품이고 57.8%가 공산품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산품 중에서도 연, 아연, 철강 등 가공도가 낮은 1차금속제품이 수출의 주종상품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表 9〉 南北韓 貿易現況 比較

(1987년)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무역총액	億\$	883.0	40.7
(수출)	"	472.8	16.7
(수입)	"	410.2	24.0
무역수지	"	62.6	7.2
무역의존도	%	74.5	21.0
외채총액	億\$	356.0	52.1

출처 : 한국은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 북한은 국토통일원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2) 國際收支

국제경제협력이 긴밀해지면 긴밀해 질 수록 자원, 자본, 기술,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량은 더욱 많아지게 되며, 오늘날 세계경제의 일반적 추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념의 自立經濟는 단지 자국경제의 국제적 고립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경제자립의 기준은 국제수지 均衡의 여부가 될 것이다.

국제수지의 기초가 되는 남북한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1987년 현재 한국은 62.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반해 북한은 7.2억불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한의 무역추세에서 보면 한국은 1986년 이후 대규모의 무역흑자국으로 전환된 반면, 북한은 1970년대 부터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赤字幅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국은 무역수지의 흑자 이외에도 관광수입 등 무역외 수지의 호조로 1987년의 經常收支 흑자는 약 98.5억불에 달함으로써 경

제개발 과정에서 누증되어 왔던 외채규모가 감소되는 추세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70년대 후반이후부터 외채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최근에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 8월에는 북한에 차관을 제공했던 서방은행단이 북한에 延滯 사실을 공식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을 파산국으로 선언한바 있다.

1987년말 현재 南北韓의 外債 현황을 보면 한국은 총외채액이 356억불로 북한의 외채 52.1억불과 비교하면 6.8배나 많은 실정에 있다.³⁰⁾ 그러나 경제역량 평가의 측면에서 볼 때 외채의 절대규모보다는 오히려 외채의 상환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채상환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원리금 상환부담율(Debt Service Ratio), 對外信認度(Country Risk), 借入金利率수준, 연체위험도 등이 이용된다.³¹⁾

최근 국제금융기관이나 금융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잡지사들이 발표하는 국제신용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신용도가 점차 상위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최하위에 기록되고 있는 실정이다.³²⁾

북한은 1970년대에 추진한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서방제국 및 서방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과 무역신용의 이용등 외채를 도입하였으나, 경제운영과 관리의 미숙으로 약속된 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에 이미 제1차 연체과동을 겪었으며, 이때 지불연기³³⁾였던 연체액의 상환마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1987년 또다시 제2차 외채문제를 유발하게 된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직접 상환

30) 한국의 외채총액중 외환보유고와 해외투자분을 제외할 경우, 1987년 순외채액은 약 250억불 수준임.

31) 경제기획원, 「외채백서」 1986.

32) 미국 금융월간지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誌의 조사에 의하면 1988년 3월 현재로 조사대상 세계 112개국 중 한국은 24위, 북한은 최하위로 랭크되었음.

부담을 지지 않고 외자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1984년 9월에는 소위 「승營法」을 발표하여 서방기업의 대북투자를 유치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투자여건의 취약, 국제신용의 실추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무역이나 국제수지 측면에서 본 한국의 經濟力量은 이제 확고한 경제자립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은 주민들의 극한적인 내핍생활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와는 달리 자립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대외의존도에서 볼때는 국제경제의 변동에 따른 국내경제의 파급효과가 낮은 북한이 보다 안정적이라 할 수 있다.

마. 주민생활 與件

「갈브레이드」는 “가장 훌륭한 經濟體制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체제”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分配制度가 아무리 훌륭하게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분배에 사용할 경제적인 財富나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그 나라의 제도는 장식물에 불과하며, 설령 경제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소비생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체제일 때는 이를 훌륭한 경제체제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간 생활수준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1인당 국민총생산을 그 기준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總量概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배분의 균등과 같은 질적인 면을 나타낼 수는 없으며, 나라마다 購買力이 상이함으로 1인당 GNP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수준은 같다고 할 수가 없는 제약이 따른다. 특히 남북한 비교의 경우 각각 조세제도, 임금및 가격결정 방법, 유

통제도, 교육 및 의료제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비교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남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1인당 GNP 중 군사비 부담액과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분을 제외한 후 실제로 주민들의 소비에 돌려지는 몫을 계산해 보면 한국은 1,922불, 북한은 451불로 나타난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의 실질 소비생활수준은 1인당 GNP 를 기준으로 한 격차보다 더욱 심화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여건을 검토해 보면 첫째, 租稅制度에 있어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稅金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공유재산제도로 인해 근로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전액 국가기관이 흡수한 후 그 일부를 임금이나 협동농장의 분배 및 교육·의료제도를 통해 분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은 모든 稅金을 源泉에서 사전에 징수해 버리고 있다. 따라서 北韓住民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며 납세자로서의 권리도 요구하지 못한다. 둘째, 유통체제를 보면 소비품의 가격이 시장경쟁가격이 아닌 國定價格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기초소비재는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재는 생산비의 數倍 혹은 수십 배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다. 여기서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이 곧 세금이며 이것이 국가세입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기초소비재의 경우에도 구입한도를 배급량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나 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를 供給者經濟體制라고 한다.

셋째, 주민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에 있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고 승진의 기회마저 출신성분이나 당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소득분배체계 역시 제도적으로 차등화 되어 있다.

넷째, 敎育은 고등중학교 과정까지는 11년제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기회가 비교적 균등하게 주어지나 대학 이상의 전문교육은 진학의 기회가 역시 출신성분에 따라 좌우되므로 차등화 되어 있으며, 의무교육 기간중에도 교과서 및 학용품은 북한의 공식적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다섯째, 의료제도는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되어있으나 의료기구, 치료약품의 부족으로 의료의 질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서도 당원이나 관료들과 일반주민간에는 차등적 대우를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북한주민의 생활여건은 제도적으로는 균등과 형평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급정책에 따른 차등대우를 받고있으며, 경제력의 미약으로 공급부족이 고질화 되어있는 「결핍의 계급사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과정에서 야기된 계층별, 지역별 富의 偏重과 소득배분의 불균등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도 소득의 균배를 비롯한 주민들의 복지·후생을 실현한 선진국의 예로 보아 향후 한국도 성장의 기초위에 형평의 조화를 倍加 할 경우, 양과 질이 동시에 보장되는 복지국가건설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 하겠다.

4. 南北韓 經濟展望과 發展을 위한 課題

가. 남북한 경제의 綜合的 評價

韓半島는 분단 직후 自由友邦國家와 共產國家들이 각각 남북한을 지원하는 가운데 6.25의 격전을 치름으로써 2차대전 이후 분단된 국

가들 중 理念의 對決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 되어왔다. 더우기, 좁은 지역에서의 장기전으로 인해 산업시설이 철저히 파괴되어 버린 폐허 위에서 한국은 資本主義 市場經濟 질서를, 북한은 社會主義 計劃經濟 질서에 따라 각각 새로운 경제건설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오늘날 남북한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는 양체제의 우위를 저울질 할 수 있는 比較尺度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韓國은 사유재산제도와 자유경쟁을 통한 市場經濟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國際協力을 중시하는 對外指向的 개발정책을 추구한 결과 1987년 현재 GNP는 소련과 일부 東歐國家를 제외한 세계 17위를 기록하였고, 1인당 GNP는 36위, 교역량은 10위, 국제수지(경상수지기준)는 세계 4위의 흑자국으로 부상하였다.³³⁾

이와는 대조적으로 北韓은 사회적 소유제도(國共有財產制度)를 바탕으로 한 경직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의 非效率性和 金日成 主體思想으로 미화된 閉鎖的인 自力更生の 對內指向的 개발정책을 추구한 결과 1987년 현재 GNP는 한국의 16.3%, 1인당 GNP는 33.1%, 수출은 3.5%등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만성적으로 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된 결과 1970년대 말 이후 국제사회에서 악성채무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北韓經濟는 산업배치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고 군수공업을 핵으로 하여 중공업이 계열화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통제경제에 익숙해져 있어서 規模의 경제성 상실, 기술혁신의 지연, 생산성의 저하 등 제문제점을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경제의 집중동원이 용이한 장점도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주민복지와 소득분배면에

33) 한국은행 발표, 「세계속의 한국경제」 1988. 1. 4.

서 보면 한국은 경제규모의 증대로 총량적인 소득증대는 달성하였으나 지역별·산업별·계층별 격차문제가 社會葛藤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빈곤의 균등이 제도화 되어 있고 당원이나 행정관료 등 소위 엘리트 계층은 새로운 사회주의 귀족계층을 형성, 각종 경제적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情報 및 社會統制로 계층간의 葛藤이 표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근로대중에 있어서 빈곤의 균등화와 소비생활의 지나친 억제는 경제 관리면에서의 물질적 인센티브 결여와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한국은 經濟規模면에서의 성장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나 경제의 質的 發展이 과제로 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경제규모의 증대와 질적 발전이란 두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지 못한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私有財産制度和 社會的 所有財産制度를 단순히 경제적 성과면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은 政治的 自由가 오직 私有財産制度 위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국가기관 또는 기업의 피고용자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산당에 도전하는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 개인은 쉽사리 제거 될 수 있다. 자신과 가족이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한 공산당에 도전할 수 없으며, 공산당에 도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한 自由民主主義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政治的 自由는 오직 私有財産을 인정하는 經濟的 自由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나. 經濟發展 展望

한나라의 경제가 국제화되고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

라의 경제적 장래를 구체적인 지표로 정확히 예측해 내기는 더욱 어려워지며 위험한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최근 3년간 한국의 경제상황은 원貨價値의 급속한 상승, 석유가격의 하락, 국제수지 흑자의 가속화 등 국제적 요인의 급변으로 1987년 부터 착수된 제6차5개년계획(1987~1991)은 매년 계획지표와 정책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韓國은 제6차5개년계획에서 能率과 衡平의 조화, 經濟의 先進化, 國民福祉의 증진이란 기본 목표하에 ① 경제안정기조의 정착 ② 적정성장과 고용증대 ③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절감 및 자력성장 능력의 제고 ④ 산업구조의 조정과 개선 ⑤ 과학기술의 개발 촉진 ⑥ 지역간 균형개발과 지방경제의 활성화 ⑦ 국민복지의 증진과 형평의 제고 ⑧ 시장경제의 創達과 정부기능의 재정립 등에 정책 중점을 두기로 하였으며, 기간중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7.3%의 實質成長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87년의 실질경제성장율은 12%를 기록하였고 88년에도 12.1%로 잠정추계 되는 등 당초계획지표의 上向調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巨視經濟운영상의 정책우선은 물가안정 및 흑자관리 등 경제안정과 국민복지의 확충을 마찰없이 동시에 성취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물론 경제전망에는 항상 낙관론과 비관론이 병존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로 한국경제가 성장할 경우 목표연도인 1991년의 1인당 GNP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5,500불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산업구조, 기술수준, 국민복지 등 전반적인 면에서 성장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先進國型 경제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北韓은 1987년부터 제3차7개년계획(1987~1993)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본과업으로는 로동당 6차대회(1980.10)가 제시하였던 「社會主

義 經濟建設 10大展望目標」³⁴⁾의 달성과 주민들의 「食·衣·住」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物質·文化生活에 새로운 轉換을 이룩한다는 것등을 제시하였다.

기간중 경제성장 목표는 연평균 7.9%로 책정하였으나 1987년 실적은 겨우 3.3%의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그 결과 1988년 2월에는 주민들의 「食·衣·住」 문제 해결과 관련된 基幹産業施設의 건설추진을 위해 소위 「200일 전투」란 노력동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목표시점인 정권창건 기념일이 되는 「9.9節」까지 대부분의 건설계획 추진실적이 부진하였던 결과 1988년 9월부터 「새로운 200일전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북한이 제3차7개년계획의 성장목표인 연평균 7.9%의 실질성장을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1991년도 북한의 1인당 GNP는 1,452불에 불과할 것이며 현재의 북한경제 성장추세를 고려하면 더욱 비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다. 經濟交流와 協力の 가능성

남북한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相互補完要素가 많으며 경제역량면에서 보더라도 자본과 기술의 상호협력이 민족적 이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民族經濟의 實利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34) 북한은 제3차7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1980년 10월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발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를 일부 수정하였는데 수정된 목표를 보면 발전량 1,000억 kwh, 석탄생산 1억 2,000만톤, 강철생산 1,000만톤(당초 1,500만톤), 유색금속생산 170만톤(당초 150만톤), 시멘트생산 2,200만톤(당초 2,000만톤), 화학비료생산 720만톤(당초 700만톤), 직물생산15억 m, 수산물생산 1,100만톤(당초 500만톤), 간석지개간 30만정보 등임.

이는 당연히 정치·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이 지출하고 있는 연간 100억불 이상의 군사비와 100만명 이상의 노동력을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그 경제적 효과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은 물론 정치적 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 될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民族共榮을 추구하는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1988년 「7.7大統領 特別宣言」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10월 7일에는 同 宣言의 경제부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民間商社의 북한물자교역 허용 ② 민간상사 북한물자중계 허용 ③ 북한으로 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原產地 표시와 상표부착 허용 ④ 남북간 直·間接 교역물자에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⑤ 남북경제인의 상호접촉·방문 허용 ⑥ 北韓船籍 商用船舶의 入港 허용 ⑦ 남북경제교류 관련 法制의 補完 등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이 제의하는 人的·物的交流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근본적 문제인 政治·軍事問題의 해결을 회피하는 분열주의적 입장이라고 罵倒함으로써 일단은 否定的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 경제교류문제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 쌍방에 의해 수 없는 제의가 있었으며,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해 구성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합의서에서는 경제분과위원회의 설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84년 북한이 제의한 대남 수재물자 제공을 한국이 받아들임으로써 개최되었던 남북경제회담은 제5차회담까지 진행되면서 물자교류와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서가 작성되는 단계에까지 진전되었으나 한·미합동군사훈련(팀스피리트)을 구실로 북한이 경제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보아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이 단시일내에 전면

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7·7大統領 特別宣言」과 10월7일 발표된 「經濟부문 후속조치」는 북한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실현이 가능한 내용들이며, 이미 우리의 민간상사들에 의해 북한상표가 부착된 일부 상품들이 제3국을 통해 수입되어 선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달성한 경제성장의 결과를 북한동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북한도 이러한 여건을 현실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북한내부 경제사정이나 中·蘇의 경제변화는 북한 지배계층에게는 강력한 內外壓力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 되며, 북한이 경제개발에 필요한 西方의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우선 南北間 긴장완화와 交流·協力の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북한은 1988년 11월 26일 政務院 기구개편을 통해 「合營工業部」를 신설하였고, 12월 12일에는 로동당중앙위 6기 15차 전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의 8기 4차 회의를 긴급소집하여 정무원 총리 이근모를 연형묵으로 교체하였는가 하면, 12월 16일에는 낙후한 산업기술의 향상을 목적으로 정무원에 「전자자동화 공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추진중인 3차7개년계획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經濟開發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서 1989년 부터는 북한도 보다 적극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金剛山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남북한이 공동개발하는 문제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경제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의외로 빨리 가지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하나, 이러한 개방은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III. 北 韓 의 社 會

尹 東 鉉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근래에 해외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見聞한바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우리도 南北赤十字會談과 故鄉訪問團 등 극히 제한된 조건에서나마 남북한간의 대화와 왕래가 실현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달라진 면이 있고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도 잘알게 되었다.

더우기 북한이 최근에 國際行事와 觀光事業 등으로 부분적인 開放이 불가피한 특정지역의 환경을 정비하는 등 展示效果的인 사업과 선전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狀況適應을 위한 그들의 외형적인 변화양상은 당장에 허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얼핏 지나치면 그들의 실상이 잘못 전달되거나 오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들이 북한의 현실과 새로운 상황변화에 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異質化와 不信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북한의 유례없는 閉鎖政策과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는 집단주의 情報管理 정책 및 반복되는 思想事業이 사회분야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社會主義革命을 완수하고 공산주의사회를 指向한다는 북한에서 封建身分社會的인 特異한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주요한 검토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양상보다는 實相에 관한 몇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2. 住 民 生 活

가. 住民生活 施策

북한의 宣傳資料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국가가 人民의 生活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들의 生活을 골고루 급속히 向上시키면서 生活水準의 격차를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人民의 衣食住문제를 골고루 원활하게 해결하는 일에 국가의 깊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住民들이 生活를 각기 자율적으로 영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全住民集團의 世帶主가 된 셈이다.

또한 노동자, 사무원은 무료나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받고 있는데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1kg당 60전에 收買한 쌀을 노동자, 사무원에게 8전으로 공급하고 있어, 이것 만으로도 매년 1세대당 평균 560원의 추가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季節따라 간간히 學生들과 幼兒들에게 供給하는 衣服들도 그 費用의 大部分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에게 定期的으로 制服과 作業服 및 勞動保護物資들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住宅을 통해서도 莫大한 追加的 惠擇을 받고 있는데, 住宅은 정부의 資金으로 建設되어 모든 勤勞者들에게 提供되고 있으며 노동자, 사무원의 住宅使用料는 生計費의 0.3%에 지나지 않으며, 光熱費 및 그밖의 여러가지 使用料등을 포함하여도 3%안팎이고 농민의 경우에는 그것도 무료라고 한다.

북한의 商業은 본질에 있어서 住民에의 供給活動이며 주민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地域別, 階層別, 季節別의 需要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생산된 상품

들은 전국의 商業網에 계획적으로 할당되며 勤勞者들에게 균등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住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都市와 勞動者區, 農村은 말할것 없고 山間僻地에도 상점이 있어, 동일商品은 동일價格의 원칙에 따라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수요가 많은 一般消費物資의 가격은 저렴하게 策定되고 있는데, 특히 어린이 用品들은 원가와 거의 같은 싼값으로 팔리고 있고, 상품의 가격은 해마다 系統的으로 인하되도록하며 一般消費物資가 특히 싸다고 선전하고 있다.

公共給食사업과 편의서비스 사업도 크게 伸張되어 그러한 施設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婦人들의 家事부담을 덜어 주어 적극적으로 職場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에서는 「金日成主席」의 人民的施策에 의하여 失業者도 乞人도 없으며, 누구나 다 衣食住問題로 신경을 쓰는 일 없이 넉넉하고 文化的인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¹⁾

이러한 선전을 살펴보면 북한의 住民生活은 集團主義원칙에 따른 黨의 計劃的統制와 組織的 배려로 個人的 선택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黨과 政府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선전을 참작하면서 북한주민들의 基本的인 生活相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衣食住 生活

1) 衣生活

일반주민들은 최근까지 통상 근무복(작업복)에 의존하여 왔다. 衣類의 需給面에서도 특히 직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輕工業製

1) 「朝鮮概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國上統一院 翻譯資料, 1988, pp.150~156 참조.

品에 대한 高物價政策으로 임금에 비해 값이 비싸기 때문에 求得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규격화된 기본적인 作業服과 內衣 정도는 여름과 겨울의 계절에 따라 공급되고 있으며 다소 염가로 제공된다.

따라서 신사복 등은 특수층 이외에는 입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특히 고급의류 구입에 대한 통제정책은 특별공급 혜택이 없는 일반 주민들에게 획일적인 衣類生活을 부득이 하게 하였다. 그러나 外國人들의 출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야하는 평양 등의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생활 수준의 전시효과적인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근래에 특히 여성들에게 출퇴근 등 외출할 때는 필히 화장을 하고 양장 또는 색깔있는 화려한 옷을 입도록 지시할 뿐 아니라 구두도 하이힐을 신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여학생의 교복도 점차로 양장으로 교체하여 왔다. 남자들에게는 신사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장려하고 「짜짜이 색 의복」(콤비)을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은 고급 신사복은 구입하기가 어렵고 착용시에도 세탁 등이 불편하여 인민복을 계속 착용하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衣生活 改善에 대한 지시 또는 권장사항의 실천이 부실하게 됨에 따라, 특히 평양 시내에서 외출시 복장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니 이는 북한사회의 虛像과 實相의 괴리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옷차림에 대해 종전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평양과 각 직할시 및 도 등에 被服研究所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 낸 옷으로 전국적인 衣服展示會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 연구소의 사업으로는 형태연구·설계·가공·공업화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金正日이 주창하는 「人民生活向上運動」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사회주의생활문화>라는 ‘패션’雜誌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

그 발표내용은 머리모양이나 양복·양장의 유행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²⁾

그러나 輕工業分野에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북한은 최근 주민들의 「人民消費品(生必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경공업 전반에 걸친 質的改善을 반복 촉구하는 가운데 특히 의류, 신발 등 생필품의 원활한 공급을 독려하였다.

金正日是 1988년 10월 29일 이른바 ‘시대적 미감에 맞게’ 창안·제작된 의류도안, 신발도안 등 각종 生活用品 圖案과 製品 등이 전시된 輕工業展示館을 시찰하면서 “주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토록하고 경공업혁명을 계속 벌어나감으로써 질 좋은 여러가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것”을 지시하는 등 輕工業製品의 質的改善과 量産을 촉구한바 있다.

특히 이 전시회의 의류부문에서는 7백 80여점의 도안전시를 비롯해 男性用 양복, 잠바, 셔츠, 바지 등과 女性用 조선옷, 달린옷(원피스), 뜨개옷 등, 그리고 아동의류, 또한 신발류에서는 구두, 운동화, 샌들, 장화 등이, 모자류에서는 종이모자, 초물모자(밀집모자) 등이 主宗을 이뤘다고 한다.³⁾

한편으로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키겠다」는 방송논조를 통해 “지금 입는문제를 비롯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욕구는 점점 높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오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맞으면서 근로자, 청년들의 요구는 그 어느때보다도

2) 岡田聡, 「平壤の人民生活(上)」(現代코리아, 1988.5), pp.41~42 참조.

3) 内外通信(資料版 第614號), 1988.11.11.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1989년 여름의 祝典行事를 겨냥한 전시효과적인 주민생활수준향상에도 경제선동캠페인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

〈표 1〉 衣類供給基準

對 象	回 數	品目 및 數量	備 考
勞 動 者	年1~2回	作業服 1着	無 價
學 生	年2回	校服 1着	廉 價
技 士 · 教 員	3~4年 1回	洋服地 1着	廉 價
4 號 對 象 以 上*	2年 1回	洋服地 1着	半 額

※ 4號對象：市·郡地域의 黨秘書, 市·郡 人民委 副委員長, 2級企業所 以上黨副秘書, 支配人, 技士長級 等임

出處：國土統一院 分析資料.

2) 食生活

일반주민들의 식생활은 지금도 攝生 위주의 量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外國人들에게 ‘자부심’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북한은 밀려오는 개방의 물결에 대응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즉 主要都市의 整備와 建築物, 住民의 衣服 등에는 상당히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먹는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配給制度 때문에 각자가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형편이며, 영양과 식성 또는 기호에 맞는 식생활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부족분의 식량을 보충하려 해도 그 길마저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만약에 식량을 비공식으로 구득하고자 하는 경우, 쌀 1kg 배급가격이 북한화폐로 8전인데 암거래가격은 10원 이상이라고 하니 일반주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⁵⁾

4) 조선중앙방송(1988.10.31).

5) 국토통일원, 「북한현황」(1981), p.107.

북한주민은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가 발표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배급제도에 얽매어 살고 있다. 식량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되 有償이며 대상자의 신분과 직위, 지역, 시기 등에 따라 배급량, 쌀과 잡곡의 비율 등에서 差等配給이 실시되고 있다. 백미와 잡곡의 비율은 평양이나 직할시는 6:4이고, 지방은 3:7이라고 하나⁶⁾ 실제 비율은 作況에 따라 상이하고 2:8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農民(협동농장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연말 「결산분배」에 따라 식량을 할당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족의 1年分 식량(노동자의 1년 배급량) 이외에는 전량을 수매한다.

또한 1959년부터는 식량통제수단으로 糧券制度를 실시하고 있는데, 糧券(100~200g)은 공무출장과 여행할 때, 병원 입원시와 군인의 휴가기간 중 또는 도시주민들이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도 사용된다.

그러나 요사이 북한에서는 주민중 가족이 적은 가정은 15일간 먹을 식량배급을 받을 때 양곡이 아닌 양권으로 받는다 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 취사하여 식사하는 것 보다 밥공장의 '아침·저녁 매대'에서 양권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⁷⁾

양권을 발급받으면 다음 쌀 배급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배급받게 된다. 최근에는 1인당 100g 한도내에서 식량배급과는 관계없이 국수를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부녀자들의 직장진출과 관련해서 평양을 비롯한 각 도시에는 主食物을 가공하는 밥공장과 半製品 副食物 및 국거리를 배급하는 봉사 시설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북한의 실상」(1986), p.100.

7)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해외동포학자초청 간담회 결과보고서(1988.11.14), 참조.

〈표 2〉 食糧配給基準量

區 分	配 給 量 (1人/1日)	混食比率 (白米：雜穀)
黨 및 政權機關幹部	700g	10 : 0
特殊軍人(經步兵)	800g	7 : 3
軍 人	700g	3 : 7
重 勞 動 者	800g	3 : 7
一般勞動者·事務員	600g	3 : 7
大 學 生	600g	3 : 7
高 等 中 學 生	500g	3 : 7
人 民 學 生	400g	3 : 7
幼稚園以下兒童	300~100g	3 : 7
扶養家族等無職者	300g	3 : 7

出處：北韓概要, 1986.

이상은 일반적인 사항이나 최근 북한은 먹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다. 1988년 6월부터 9월까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쌀배급이 전혀 없었고 그대신 몽고로부터 수입한 밀을 배급하였다고 하며, 1988년 10월말 이후 「朝·中協定」에 따라 북한 쌀 1kg을 中國 옥수수 2.5kg로 교환하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있다.

3) 住居生活

북한에서 개인이 住宅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사회적 계층과 직위에 따라 等級別로 규격화된 독립 가옥 또는 아파트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할당받을 뿐이다. 따라서 일반주민의 주거생활은 대체로 아파트형 또는 연립주택형의 집단적인 주거양식이 대부분으로 생활공간도 공동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주거환경은 가정적인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집단합숙소와 같다.

이처럼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부대시설을 공동이용하는 경제적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조직적으로 통제하는데 용이하도록 하고, 규격화된 환경속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사고

〈표 3〉 住宅事情(平壤)

區分	住宅型	家屋構造	入 住 者
特號	獨立 高級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獨立式 단층 또는 2층住宅 ○ 庭園 ○ 수세식 변소 ○ 冷溫房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號	新型고층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 베란다, 冷溫水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문예인 간부 ○ 기업소 책임자
3號	中級 單獨住宅 및 신형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 ○ 부엌, 倉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2號	일반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마루방 1,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학교, 고등중학 교장 ○ 일반노동자 ○ 사무원
1號	集團公營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農村文化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斷層 聯立住宅 ○ 방2, 부엌, 창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원
	舊 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3개의 農村 既存舊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두리 농민

出處：北韓概要, 1986.

방식마저도 획일화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결혼을 하여도 쉽게 방을 배정받을 수가 없어 상당기간 신혼부부가 별거하는 경우가 있고, 1世帶用

아파트 또는 주택에 2~3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체로 주민들은 일단 배치받은 住居에서 平生 살기 때문에, 移徙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주택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人民生活水準 向上運動의 중요사업으로 住宅建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평양에서는 1986년 까지의 천리마거리 제2기 주택건설, 1988년까지로 계획한 광복거리의 재개발에 따른 주택건설 등이 선전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건설은 地方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都市型住宅은 5~10층형으로 1세대당 면적이 50~120㎡이고, 農村型住宅은 2~3층형으로서 1동에 2~6세대가 入住하도록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⁸⁾

한편 근래에는 海外同胞와 外國人에게 開放이 불가피한 主要都市에서는 전시효과적인 건물의 고층화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여, 1981년초부터 평양시내의 주요도로변에 10~40층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는 南浦, 元山을 비롯한 주요 지방도시에서도 고층 아파트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평양 등 주요도시의 都心 再開發事業은 金正日의 직접 지도로 추진되고 있다. 평양의 창광거리, 문수거리 등 주요한 도로변에는 ‘塔式住宅’이라는 전시용 고층아파트가 건설되어 왔다. 그러한 고층건물들이 주택으로서의 위치와 조건 등에 문제점도 있고, 경공업 사정으로 보아 내부시설 등도 빈약하나 평양을 잠깐 방문하여 案內觀光하는 외국인 등에게 북한을 선전하는 소재로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은 현재 정책적 需要때문에 관광자원의 開發을 적극 추진하면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제13차 世

8) 조선중앙통신(1987.10.8).

界青年學生祝典에 대비해서 평양의 광복거리 재개발, 「안골체육촌」을 비롯한 체육시설 건설, 관광호텔 증축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남포, 원산, 개성 등에 고속도로가 건설됐고 금강산, 묘향산 등 觀光地에는 고속화된 진입로도 완공됐다. 북한에는 이러한 토목 건축공사 등이 적극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평양, 개성 등 주요도시들에서 대대적인 都市美化事業이 진행되어 商店 補修, 建物外壁 칠 등에 주민들과 학생등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의 소감은 평양과 평양이외의 他地域과는 모든 시설과 환경면에서 他國이라는 異質感을 느낄정도라고 한다.⁹⁾

다. 職場生活

인간에게 「선택의 自由」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개인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자유와 권리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이것은 로동당 지배하의 사회가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이기 때문에 경제계획에 맞추어 노동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사정도 있으나, 북한에서는 특히 出身成分과 黨性 등을 따지는 철저한 계급정책때문에 일방적인 부당한 조치를 당해도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직업과 직장배치에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出身成分이다. 예를 들면 대학졸업자의 경우, 졸업을 한학기 앞두고 졸업예정자에 대한 「사로청」 위원장의 평정서와 학부장의 평정서 등 대학내의 각종 평정이 이루어지고 이 評定結果에 따라 中央級 大學의 경우 人文

9) 앞의 간담회결과보고서(1988.11.14) 참조.

系는 中央黨에서, 自然系는 政務院에서 직장배치를 정하며, 市·道級 大學은 黨의 方針에 따라 市·郡 行政 및 經濟指導委員會가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당간부의 자녀는 中央黨과 정무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되고 평당원자녀는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대개 지방의 기관 및 기업소 등에 배치된다.

따라서 자신의 適性이나 희망이 무시되어도 생활을 영위하기위해 당에서 지정하는 직장에 배치되어 대개 평생을 바쳐야 한다,

그런데 1984년 김일성 김정일 父子의 특별지시로 「평양제1고등중학교」라는 科學英才교육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신설, 9월 1일부터 개교한데 이어, 그 후 그 학교의 실적을 인정하여 1985년 9월에는 이러한 학교를 동평양과 각 직할시·도에 1개교씩 증설 개교하도록 하는 등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수한 인력양성에 부심하는 것은 3차 7개년계획기간 동안에 과학기술발전에 주력한다는 정책적 고려와 당성과 출신성분 위주의 간부 충원방식에서 오는 경제적 사회적 낙후성을 탈피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답습해온 思想優先을 절대시하는 人力活用政策에서 점차로 자질과 실력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⁰⁾

이러한 경향이 비록 현재는 주민의 일부 계층에 불과하지만 북한 사회체제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장기적으로 관찰할 만한 사항이다.

라. 餘暇生活

1) 餘暇活動

10) 'ピョンヤン 見たまま「現代 코리아」(1985年8~9月號) pp.28~29.

북한주민의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여가의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독서활동은 정서생활에 도움을 주고 知的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측면보다는 대개가 정치적, 사상적 信任을 얻기 위한 處世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을 방문했던 在美同胞 학자들은 「북한기행」이란 책에서 “북한주민들에게는 즐기 위한 오락이나 慰樂이라고는 없었다.”고 쓰고 있다. 이에 의하면 다만 평양시의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부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대성산에 있는 유희장에 나들이를 하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약 5만의 인파가 모여, 그곳에서 전동열차를 타기도 하고 「美제국주의」를 표적으로 하는 모의사격연습도 한다. 하지만 개인용 사진기를 휴대한 사람은 보기 드물었다고 한다.

그밖에도 평양시 주민들은 가끔 곡예공연, 영화, 연극 등을 보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아주 조용하게 관람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감각한 것같이 보였으나 김일성의 초상화나, 그의 출생지인 만경대 또는 경제건설의 목표를 상징하는 「천리마」가 화면에 나타날때는 거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쓰고있다.¹¹⁾

북한에서도 등산, 낚시, 사냥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와 오락은 大衆化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며 일반주민들에게는 集團活動으로 등산 등이 이루어지고 있을뿐이다. 등산은 학교, 공장, 직장 등에서 당의 승인을 얻어 단체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단순한 취미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 북한에서도 평양 대성산 부근에 평양골프장이 그간 조총련의 자금과 기술지원으로 1987년4월 20일 준공식을 가졌는데, 부지

11) 양성철의 편저, 「북한기행」(한울, 1986), p.30, pp.77~78.

총면적이 30만평이라고 하며 장차 각종 국제경기에 대비하는 한편, 외국인들을 위한 위락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본다.¹²⁾

2) 名 節

북한이 1946년 6월 발표한 노동법령에는 1월1일, 3월1일, 5월1일, 8월15일, 12월31일을 名節로 규정하여 공휴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절과 함께 주민들 속에서는 구정, 추석, 단오절과 같은 전래적인 음력 명절들이 그런대로 지켜져 내려오다가, 휴전 후 社會主義 改革이 본격화되자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1950년대 후반기에는 거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노동법령에서 규정한 명절중에서 3월1일, 8월15일과 그 후에 결정한 11월3일은 없어진 반면에 4월15일(김일성 생일로 2일간 연휴), 2월16일(김정일 생일), 9월9일(인민공화국 창건일), 10월10일(조선로동당 창건일), 12월27일(사회주의헌법절) 등을 새로운 명절로 정하게 되었고 공휴일로 지정했다. 한편 김정일 생일(2.16)부터 김일성 생일(4.15)까지를“민족의 봄의성절”이라 선전하며 요란한 기념행사와 주민동원이 계속된다.

그런데 북한은 1988년 9월 25일 민족명절인 추석과 관련, 이례적으로 추석을 지내는 평양시민들의 이모저모를 소개했다.

이날 평양방송 등 全 宣傳機關들은 추석을「조상전래의 민간명절」이라고 소개하면서 평양시민들이 추석을 지내는 모습을 “마을과 거리에는 명절옷 차림을 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들은 승용차·버스·기차로 조상의 묘를 찾아갔다.” 등으로 선전했다.

또한 이날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총리 이근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성산 혁명열사능」과 「애국열사능」에 김일성 이름으로 된 화환을 증정하는 행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같이 평양의 선전기관들이 추석날의 평양시민들의 모습과 행사소식을 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 국토통일원, 「북한 및 공산권 동향」(1987년 4월호) pp.107~108.

북한은 지난 70년대 이후 추석을 비롯한 전래의 歲時風習을 「낡은 풍속」으로 규정, 이를 인정치 않았으나 주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극히 간소한 성묘·차례 등은 묵인해 왔다.¹³⁾ 우리 民族傳來의 풍습이 억제는 되어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保健 醫療

북한의 보건의료 政策은 사회주의헌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무상치료제도의 공고한 발전, 예방의학적 방침관철, 의사담당 구역제 실시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보호와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선전하고 있다.

가. 無償治療制

1952년 1월 20일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 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노작발표」이후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2기7차회의에서 「보건사업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무의촌의 근절과 무상치료제 실시를 계획한 바 있다.

북한은 현행 헌법에서도 무상치료제를 明文化하고 이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 내막은 선전과 다르다. 일반주민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명목상의 월급으로 치료비나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매달 월급에서 미리 사회보장비라는 명목으로 1%씩 공제하는 등 여러가지 구실로 기본임금의 10% 이상이 공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셈이다.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무상치료제가 선전과 다르다는 가장 유력한

13) 내외통신(보도판, 5846호)1988.9.27.참조.

증거는 노동자 및 사무원의 부양가족으로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약값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치료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또 농민들이 도시의 병원으로 移送되었을 때는 치료비를 지불해야만 치료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간이진료소 또는 일반 진료소에서도 담당구역 이외의 주민들을 치료했을 때에는 치료비를 받고 있다.

더구나 월남자 가족 등 敵對階層은 아무리 重病에 걸려도 고가의 약품은 쓸 수 없으며 市·區域·郡 병원 이상의 보다 上級의 병원에는 입원할 수도 없다.¹⁴⁾

나. 豫防醫學的 方針

예방의학이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자는 것으로서 북한이 여기에 주력한 것은 1956년 경부터이다.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당시 劣惡한 사회보건의 환경에서 연유되었다. 휴전후 3년간이나 계속된 凶作으로 주민들은 영양실조가 되어 각종 질병이 만연되었다. 그러나 빈약한 의료시설을 가지고 고서는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이리하여 북한당국은 보건문제에 관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는바 보건위생의 기본방침이 예방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위생검열을 철저히 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保健管理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流失을 미연에 예방하려는데 1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당시 의사와 간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하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것이 었다.

14) 김만철(1987.1.15 청진항 탈출 월남) 증언.

현재 북한에서는 질병豫防事業이 보건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기본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⁵⁾

- 위생선전 계몽교양사업
- 위생일군의 체계적 양성사업
- 생활 및 노동환경조건 개선사업
- 위생법규의 제정 및 위생검열 지도
-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의 수립
- 담당구역제 원칙의 실현과 치료 예방원칙의 확대
- 예방의학적 방침에 따른 의학교육 등

다. 醫師擔當區域制

1964년부터 각 도시에서는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의사담당구역제와 탄광, 광산에서는 직장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는 예방의학적 방침과 관련된 것으로 각 의사가 자신이 맡은 책임 구역에 나가서 위생·보건·접종·건강진단 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이 담당구역 제도는 로동당 제4차대회(1961년)이후 실시하여 왔는 바 대개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 규모(200~300명)로 구역을 맡아 진료하도록 되어 있는 일종의 巡廻진료제도이다. 담당의사가 금요일까지 소속병원에서 근무하고 토요일 오후에 한하여 담당구역에 나가 치료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1명의 의사가 200~300명의 주민들을 한나절에 진료해야 되니 사실상 정상적인 진료는 어려운 실정이다.

15)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1983), pp.1000~1004.

물론 이러한 제도는 질병의 예방적인면에서 그 나름대로 利點이 있으나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의사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하여 질병발생을 은폐하려는 것 등으로 나타난다.

라. 東醫學

북한은 東醫治療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 동의치료를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은 휴전후부터이며 그 치료기관도 중앙에서 里까지 체계화 되어있다.

최근에는 병원마다 약초를 책임재배토록 하여 洋藥 대신 漢藥에 의한 치료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북한이 동의학 발전에 힘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부족한 의료시설과 의사를 대신하여 재래식 방법인 民間療法으로 건강관리에 효과를 거두자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토속적인 9천여건의 민간요법을 수집 정리하여 1965년 보건성 명의로 출판한 바도 있고, 이런 노력을 이룬바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主體的 의학방침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마. 醫療機關

직할시와 도단위에는 시·도 중앙병원인 대학병원 1개와 그외에 결핵병원 등 전문병원이 있다.

시·군단위는 산업지역인 경우 3급 공장 기업소 이상에는 産業病院(4급이하에는 산업진료소)1개씩을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 市(도시의 구역), 郡단위에는 시립병원(도시의 구역병원), 군인민병원등이 1개씩 설치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는 2~3개 洞마다 중

합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里단위 진료소를 里 인민병원으로 개편하였다고 1974년 11월 2일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1~2개 里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도 준의사 1~2명이 배치되어 外傷治療 등 초보적인 치료와 투약을 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각급단위의 「위생방역소」와 협동하여 공중위생지도 및 위생방역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평양에는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평양의과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평양시 제1병원 및 제2병원, 구강병예방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근대적 설비와 종합적 의료봉사시설을 구비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의료기관들이다.¹⁶⁾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이러한 보건의료시설면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바. 住民들의 疾病

일반적으로 위장계통의 질병이 가장 많고¹⁷⁾ 신경관절계통의 환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장병의 경우 勞動時間 초과 및 政治思想學習 등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사, 옥수수 등 잡곡위주의 식생활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관절염은 목표량 달성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동원, 노동보호물자 부족 및 직업환경의 불비 등에 기인되고 있으며, 정신병은 못 먹고 과로에 지친데다가 정치사상교육 등의 통제에 의한 스트레스 누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⁸⁾

또한 북한의 의학자료에 의하면 심장혈관계통 질병과 암성 질병

16) 「朝鮮概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국토통일원 번역자료, 1988.p.187.

17) 강원도 철원의 경우 주민의 70%가 위장병환자임(83년 귀순한 정범모 증언).

18) 북한 전지역에는 1~2개 시·군단위에 1개의 「49호 병원」(정신병원)을 설치 운영.

등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 이러한 질병들을 미리막고 제때에 진단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¹⁹⁾

특히 북한에서 「펠라그라」병은 옥수수를 主食으로 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서 이 질병은 영양실조로 손발이 까맣게 되고 살갗이 벗겨지는 특수질병인데 70년대 이후 1개 인민반(20세대)에 3~4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4. 宗教實態

가. 宗教政策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4조는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反宗教宣傳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교시를 信條化, 신앙화, 절대화하는 의무와 종교를 反對하는 선전의 자유만이 보장되고 있다.

북한의 종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 종교의 수난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한에서는 8·15이후부터 종교가 대략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면서 수난을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① 제1단계 : 制限期(8·15에서 1946년 11월 지방인민위원회 선거 시기까지)
- ② 제2단계 : 彈壓期(1946년 11월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 ③ 제3단계 : 抹殺期(6·25전쟁시부터 '70년대 초기까지)
- ④ 제4단계 : 逆利用期(1972년 남북대화 시기부터 현재까지).

19) 「주체의학」(1988년 3월호), 평양 의과학출판사, p.3.

8·15후 북한당국은 종교에 대해 빈틈없는 경계의 눈초리를 퍼면서 특히 북한 기독교의 공식기구인 「以北五道聯合會」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박해를 가하지 못한 것은 기독교의 세력이 워낙 강성하기도 했고 공산주의자들도 김일성의 이른바 「20개조 강령」에 표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김일성의 외종조부 강양욱(북한의 전 부주석, 사회민주당 위원장, 1983. 1. 9사망)이 전직 목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김일성의 外家가 기독교 家門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²⁰⁾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했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김일성이 자신에 대한 個人崇拜를 종교적 형태로까지 굳히는 조작의 소지가 되었으며, 강양욱으로 하여금 로동당의 어용기관인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위원장직을 맡도록하는 등 ‘가룟 유다’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와 공산주의, 그것도 북한과 같이 극단적으로 경직된 특이한 獨裁體制와의 병존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어서, 북한당국은 1946년 11월3일(일요일) 「主日選舉 拒否事件」을 계기로 본격적인 종교박해에 나서게 되었다.

북한당국이 지방인민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일요일인 11월3일에 실시하기로 한것은 교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책략이었다. 「主日聖守」를 전통으로 하고 있는 교회의 태도는 단호했다 「이북5도연합회」는 다음 5가지 조항을 결의했고 이를 지체없이 당국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 ① 主日에는 예배 이외의 어떠한 행사도 불참한다.
- ②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분한다.
- ③ 교회당은 예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④ 현직 교역자가 政界에 종사할 때는 교직을 사면해야 한다.
- ⑤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20)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북한의 종교실태」(1981), p.125.

이와 같은 통보에 접한 로동당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즉각 무자비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로동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黨 외곽단체인 「기독교도연맹」을 조직하여 기독교조직을 공산주의 선전에 이용하고 남한 비방의 선두에 내세울 뿐 아니라 김일성 절대지지를 표명하게 했다. 그리고 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성직자들은 6·25남침전까지 모두 투옥과 추방, 강제노동으로 수난의 길을 걸게 했다. 이것이 제2단계라고 할 수 있는 「탄압기」에 해당된다.

북한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종교탄압에서 宗教抹殺로 정책을 강화하였고, 전쟁중에는 기독교인들을 反動分子로 내몰아 무차별 학살을 강행했다. 교회당을 파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신앙인들을 가정에 軟禁하여 철저한 감시속에 두는 「杜門罰」제도가 시행된것도 이때의 일이다.

종교말살정책은 휴전이후 더욱 강화되어 1955년 社會主義集團化를 계기로 북한지역은 표면적으로 종교인과 예배당을 찾아볼 수 없는 종교의 不毛地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추세는 북한당국의 종교정책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라는 팜플렛이 1959년 「로동당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었고 1960년대부터는 로동당이 주민들의 成分調查事業을 더욱 구체적으로 반복 실시하여 주민들을 이른바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종교인과 그 가족들은 ① 천주교신자를 포함한 기독교인, ② 천도교 관계자, ③ 불교관계자, ④ 기타 종교인으로 세분하여 그들의 가족까지 敵對階層에 포함시켜 특수감시대상으로 구분, 내무성(현 사회안전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종교말살정책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정책에 의한 無宗教상태 조작과 비례해서 추진되는 「政治思想事業」이 혁명전통 교양과 김일성의 주체사상(김일성主義)에 대한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성을 요구하고 그의 사상과 교시를

唯一信仰으로하는 김일성 우상화·신격화 책동을 전개하였으며, 對南統一戰線 선동과 對外宣傳활동에서 국제적 連帶性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를 역이용하는 僞裝宗教活動을 전개하여 왔다.

다음은 북한을 방문했던 한 日本人에게 북한의 안내원이 그들의 종교실상에 관해 말 했다는 내용인데 金日成과 宗教의 關係를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본다.

“물론 평양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도 단 하나의 교회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산 속에는 몇개의 절이 남아 있지만 그것들도 곧 없어질 것입니다. 조선에는 기독교도 불교도 금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信仰의 自由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느님에게 정성껏 빌어 보았자 먹을 음식이나 살 집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김일성 수령님의 지도 밑에서 열심히 일한다면 양식, 의복, 주택의 걱정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²¹⁾

다음은 김정일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이 현실화되고, 그의 후계책동이 본격화된 북한에서 역사상 최대의 경축행사로 진행됐던 김일성 70회 생일(1982. 4. 15)에 즈음한 찬양 논조인데 김일성 신격화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한다.

“하늘에 태양이 없이도, 햇빛이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수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이다.”²²⁾

“저 푸른 하늘도 수령님이 열어주신 우리의 하늘이고 저 푸른 대지도 수령님이 가꾸어 주신 우리의 땅이다.”²³⁾

한편으로 김일성·김정일 세습왕조 구축을 위한 「神話」의 조작은 더욱 치졸한 면이 있다. 그 한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940년대, 백두의 창공에는 장군별이 유난히 밝았는데, 맨 앞의 장군별이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별이고 그 옆에 자애로운 빛을 뿌리는 여장군별이 항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여사의 별이고 그 가운데서 영롱한 빛을

21) 국토통일원, 「북한개요」(1984) p.168.

22) 로동신문(1982. 4. 15).

23) 중앙방송(1982. 4. 15).

반짝이는 별이 애기 장군별이었는데 오늘 주체의 향도성으로 높이 솟아 올라 민족과 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다.”²⁴⁾

이상과 같이 살펴 볼 때 聯想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日帝 軍國主義 말기에 일본인들이 그들의 天皇을 神格化해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고 그의 宮城을 참배하도록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망칙한 일이 북한에서 再現되고 있다.

나. 宗教團體 活動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극단적인 종교말살정책과 김일성 신격화 책동을 강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대남전략과 국제적 連帶性강화를 위해서 僞裝宗教活動을 전개하고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그러한 종교활동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 戰後世代들은 종교 그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종교단체 名義의 대외선전이나 대남 방송을 북한주민들이 내부에서 들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²⁵⁾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宗教團體는 「조선기독교도련맹」, 「조선불교도련맹」,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1988.6.30 결성)」 등 명목상 4개가 있으나 중앙기구가 있을 뿐이며 하부조직은 없다. 더구나 교역자나 신도 그리고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종전까지 일체 언급안했는데 이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종교단체들이 조선로동당에 의해 조직되고 조종되어 왔음은 물론이지만, 북한이 이러한 단체를 내세우는 시기는 南北韓關係의 변

24) 평양방송(1982.8.8).

25) 월남한 김만철에게 북한 종교단체들의 대남비방 방송에 대한 소견을 묻자, 종교단체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음.

화와 관련되어 왔으며, 종교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대응으로도 볼 수 있다.

8·15 직후에도 어용단체를 조직하여 統一戰線과 북한내의 종교인 탄압에 이용하다 1948년 남북정치협상에 들러리로 활용하기도 했다.

'60년대에 모든 위장종교단체들이 잠적하였다가 재등장하게 된 것은 '70년대 남북대화 시기인데, 이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활용정책을 모색하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그 시기가 국제적으로 베트남사태의 말기라는것도 우리에게 시사되는 바가 크다.

'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위장종교단체가 국제적 公認을 얻기 위해 세계교회협의회(WCC) 등 국제종교단체 가입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각종 국제행사에 대표를 참가시키는 등 국제적연대를 위한 적극적인 선전활동을 보여왔다.²⁶⁾

최근에는 북한기독교도련맹 대표단이 WCC 국제위원회 주관 세미나에 참석하여 WCC 주선으로 한국측 NCC 대표들과 2회(1986년 9월과 1988년 11월) 협의회를 가진바 있고, 1987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非同盟會議에 바티칸대표를 초청하였으며, 1988년 4월 부활절 미사에 북한 대표가 바티칸에 초청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다. 최근의 宗教宣傳 動向

북한이 외국인과 해외교포들에게 「안내관광」하는 모향산의 普賢寺를 보수하여 승려를 배치하고, 종교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80년대 중반부터는 성경과 찬송가를 출판하여 이를 외국인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宣傳用 圖書館이나 서점에 비치하는 한편 해외교포를 동원하는 선전모임에 대량 배포하고 있다.²⁷⁾

26) 윤동현, 「북한의 종교실태」, 통일연수원, 1988, 참조.

27) 내외통신(종합판 32호, 1987) pp.330~331.

한편 지난 '86년 여름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북한측의 안내로 평양의 「가정교회」라는 곳에서 예배에 참가했는데, 예배하는 곳은 벽에 김일성의 초상화가 장식되어 있을 뿐 특별한 것이 없는 보통의 아파트 방이었다고 한다. 북한 전도사에게 교회당 재건계획이 있느냐고 질문했더니,

“1953년 7월에 끝난 전쟁으로 많은 교회당이 파괴됐습니다. 그 때문에 家庭集會 형식의 예배가 定着하여 습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우리들에게는 적합하며, 신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독교도)련맹에서는 교회당 재건을 토의한 바는 한번도 없고 재건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대답을 듣고서 그 외국인은 자금부족때문이 아닌가 하여 외국의 교회로부터 지원받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그 전도사는 “신앙생활은 성서만으로 충분합니다. 외국의 지원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평양에는 이러한 「가정교회」가 40개, 전국에 500개가 있고 신도수는 약 1만명이며, 목사 30명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설명이고, 예배에 참가하는 인원도 8명이었다는 것이 공통적이었는데 그들의 가슴에는 모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었다고 한다.²⁸⁾

그런데 이러한 종교문제에 대하여 북한의 일반주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북한당국이 종교선전을 위해 당에서 사전에 훈련시킨 인원을 배치하여, 평양시내 고층아파트의 넓은 방에 「가정교회」를 수시로 조직, 선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특기할 사항은 1988년 5월23일 佛紀2532년을 맞아 묘향산 普賢寺 등 각지의 사찰에서 「記念法會」를 진행한것으로 알려졌다.²⁹⁾

28) 松本二郎, 「平壤の家の教會」, コリア評論(1987年8月號) pp.29-35 참조.

29) 내외통신(보도판, 제5651호), 1988.5.24.

북한정권 수립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 불교의식에서는 보현사법회와 관련하여 「법동 大禪師」가 “불타의 평등·평화이념을 이땅위에 꽃피우자”라는 제목으로 수백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설교했으며, 보현사 주지 「청운 선사」의 주관하에 좌담회가 열렸는데, 특히 그는 설교를 통해 이땅에 地上淨土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남조선통치를 끝장내야 하고, 조선반도를 반핵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을 대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87년 6월 교황청 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 바티칸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왔던 북한은 1988년 6월30일에는 「天主教人協會」를 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방송은 “지난 시기 공화국 북반부에 천주교인들의 단체가 없었던 것으로하여 천주교인들을 대변하는 데서나 교회의 발전을 이룩하며,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고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다”는 등으로 협회결성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협회의 결성을 계기로 향후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교인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며, 세계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진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북한은 4개의 종교단체를 존속시키게 되었다.³⁰⁾

또한 북한은 1987년에 각종 위장종교단체를 구성하여 해외 종교단체와 연계를 맺은뒤 해당 宗派에 각종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다.

이러한 자금지원 요청은 부족한 외화획득과 종교탄압정책의 糊塗를 통한 對外이미지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基督教徒聯盟 명의로 美洲 및 구라파지역 기독교선교단체에 서한을 보내, 教會設立資金을 요청하는 한편 각국의 기독교단체와의 연계활동까

30) 내외통신(자료판 제597호), 1988.7.15.

지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한바 있었다.³¹⁾

그후 1988년 7월 헬싱키에서 북한 고위당국자로부터 평양에 11월 완공 예정으로 聖堂과 改新敎 敎會를 건립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미국 LA 에 체류중인 高鍾玉(마타오)神父가 전한바 있는데,³²⁾ 그후 평양성당은 1988년 11월1일 장익(張益)神父(서울대교구 사목실장, 바티칸 파견사제 자격)의 執典으로 축성미사가 봉헌됐고, 평양교회는 1988년 11월6일 오전 헌당예배를 겸한 첫 예배가 있었고³³⁾ 그후 북한에서 40여년만에 성탄예배도 있었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5. 觀 光

가. 觀光事業 實態

일반적으로 공산체제가 閉鎖的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은 공산주의 이론의 虛構性과 공산당의 獨斷性 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는 冷戰體制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스탈린 死後에는 동구 공산권국가들은 급속히 開放化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동구 각국간에는 비자없이도 왕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거리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서방측 여행자들에게까지도 경제협력 또는 관광유치의 일환으로 문호를 크게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공산국가들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북한은 시대조류에 역행하여 「유일사상체제」의 장막을 고수하면서 사회개방을 거부하

31) 내외통신(보도판 5391호), 1987.11.29.

32) 중앙일보(88.8.20).

33) 동아일보(88.11.19).

여 왔다. 경제적 곤경과 과중한 外債問題에, 시달리면서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외국인들에게 자유롭게 개방하지 못하여 왔다는 것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반증해 주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허구적인 김일성 신격화와 「지상낙원」의 망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外來思潮와 外部文物의 침투를 적극 막아야 할 형편이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거주이전과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이 부모의 장례 등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여행하는 경우외에 여행하는 기회는 김일성 生家인 만경대를 참관하는 것을 비롯한 「혁명사적지」순례와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團體行動도 북한관 「관광여행」이라고 하겠으나 대체로 북한에서 종전에는 觀光이라는 개념이 모호했었다.

그러던 중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984년 9월8일 「合營法」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며칠후 대외적으로 공포했다. 그런데 북한이 합영법을 채택했다는 당일 오전에 남한에 「수재물자」를 보내겠다고 먼저 대남방송을 했다는 것은 이 두개의 카드가 우연한 시간의 일치가 아니라 양자는 전술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여하튼 5장 26조로 된 합영법의 주요내용은 합작가능 부문을 공업·건설·운수·과학기술·관광 등 5개 부문으로 지적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관광업이다.

왜냐하면 공산권의 다른 국가들이 대외개방을 시도할 때 先導的 사업이 관광업이었고, 북한의 기술수준이나 외국과의 資本協力문제 등을 고려하면 관광업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주력할 사업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북한지역에는 명승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으므로 外債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서는 관광서비스문제를 잘 보완하면 外貨稼得에도 효과적이고 이것이 북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검토할만한 과제이다.

본래 북한당국은 관광사업에 대해 “낭비적이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케 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아 왔는데 최근에는 관광사업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合營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킨 북한은 그것을 실험하는 듯 프랑스 항공사의 관련업체인 베르나르회사와의 합작으로 양각도에 관광호텔 건설추진(쌍방간 의견대립으로 한때 공사중단), 관광기념품 상점으로 조총련과 합작으로 낙원백화점을 개점하였고, 홍콩 민간인들의 관광유치 등의 움직임이 보이더니 '80년대 중반에는 일본 사회당의 「친선참관단」등 일본인 관광객의 대량유치와 일본 관광업체와 원산·금강산 일대의 관광개발을 모색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다.

본래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아왔던 북한이 관광사업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그 자체가 外貨를 획득하는 데 있어 가장 손쉬운 사업이라는 것과, 잘 운영하면 북한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附隨效果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비교적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그들을 자극한 것은 한국의 관광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외국인들의 관광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다는 점과 한국측이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남북한 관광자원 共同開發을 제의하고 있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관광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면에는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여건이 관광사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고, 對外개방화 조치를 대폭적으로 단행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관광을 허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허용할 정도로 住民統制를 완화시킬 수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

는 점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관광허용도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폭넓게 실시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자칫 외국인에게 북한의 인식을 잘못 심어줄 가능성이 있고 軍事活動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점과 현대적인 관광시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북한도 「觀光」을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명승고적·인민경제의 발전면모·역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⁴⁾

북한이 정치사상교육을 위해 소위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등을 개발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답사행군·순례·참배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굳이 관광이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초청하는 외국요인들의 關心을 사고, 목적하는 政治宣傳을 위해 금강산·묘향산·백두산 일대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것도 일종의 觀光施設이라고 말할 수 있어 북한이라고 해서 관광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나. 觀光資源

북한지역의 관광자원은 自然景觀으로부터 온천·약수·문화재·원시유적지·천연기념물 등 비교적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자연경관으로는 무엇보다도 금강산을 들 수 있는데 그 일대에 이름난 바위·계곡·폭포·호수가 있고 사계절이 뚜렷한 경관이 있다. 또한 묘향산 일대, 원산 송도원 일대, 백두산 일대, 철보산, 구월산,

34) 「현대조선말사전」(평양, 1981.12.30 발행), P.412.

개성 송악산, 황해도 장수산 등지의 秀麗한 자연경관이 있어 내부체제가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할 정도로 개혁된다면 북한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광열기는 남한지역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지역에는 주을, 용강, 성천, 삭주, 옹진, 외금강 등 과거부터 널리 알려진 44개소의 온천이 있고, 강서, 용담, 묘향산 등 이름난 약수터가 51개소나 있으며 文化財로서 국보급만도 벽화, 무덤, 쌍영총, 동명왕능, 보현사 8각13층탑 등 50개소, 보물급 53개소, 사적지 73개소, 고분벽화 38개소, 원시유적지도 52개소가 있으며, 평양의 화석립, 용강의 떡갈나무 등 천연기념물도 4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광개발 實態를 보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慰樂施設, 문화시설 등은 최근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으나, 순수 관광목적으로 찾아온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관광객의 호기심과 關心을 불러 이르킬 수 있는 시설 등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김일성 및 김정일家系의 偶像화를 위한 소위 革命史蹟地는 엄청난 투자를 하여 대대적으로 정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개발현황은 무려 33개소나 된다.³⁵⁾

그리고 금강산과 백두산 등 名山의 자연경관이 그러한 혁명사적지 개발을 위한 變造와 건조물 축조 등 「政治公害」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업적으로 선전하는 관광자원으로는 평양의 '정원'으로 불리는 모란봉과 동식물원이 있는 유원지인 大城山, 이른바 평양의 기념비적 건조물인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남포 근처에 있는

35) 내외통신(자료판 제548호) 1987.7.31.

「서해잡문」이 있다.

다. 觀光 서비스

북한의 해외선전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관광객은 보통 평양에 滯在하면서 묘향산, 남포, 개성, 원산, 금강산 그리고 백두산, 함흥, 청진, 해주지방 등을 관광하고 있고, 지금은 단체관광의 손님이 많으며, 그것도 10명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또한 관광객에게는 「세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의 고려호텔과 보통강호텔, 창광호텔, 평양호텔, 원산의 송도원호텔, 그리고 금강산호텔, 묘향산호텔, 개성의 자남산호텔 등 각지의 호텔(여관)들은 오락시설과 영화관, 상점 등이 있어서 특색있는 민속요리와 세계의 유명한 요리와 주류, 청량음료 등을 준비하여 봉사해 힘쓰고 있다고 한다.

북한지역의 관광시즌은 4월에서 10월까지이지만 희망에 따라 四季節을 통하여 관광할 수 있다고 하며, 새로운 관광지들이 계속 개발중에 있다는 것이다.³⁶⁾

또한 금강산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원산—고성간 여객선을 就航시키고 있는데, 본래 원산—고성, 금강산간에는 철도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 '86년 9월 운항을 시작했다는 것이다.³⁷⁾ 그리고 북한은 원산과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금강산지역을 잇는 관광지개발 계획을 수립,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래 북한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統制된 「안내관광」의 불편을 겪어왔으나, 최근에는 「영업용」택시가 운용되고 있어서 제한된 조건이지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는 평양을 비롯한 남포와 원산 등

36)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국토통일원번역자료, 1987, PP.342~343.

37) 내외통신(보도관5326호) 1987.11.10.

주요 도시에 모두 합해 4백대 정도가 있으며 이용객은 주로 북한
의 고급관리와 외국인 관광객인데, 요금은 평양시내를 한바퀴 돌 경
우에는 북한 고급관리에게는 2~3원(북한貨)을 받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2배정도 많은 5~6원을 받고 있는데 외화로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영업용 택시를 이용코자 할때에는
호텔에서 호출하거나 도로변에 설치된 택시승차장에서 대기하면 되
는 것으로 전해졌다.³⁸⁾

북한은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과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성
시 북부 자남산 기슭에 20동의 단층 기와집으로 된 「민속여관」을 건
설했으며 외국인용 야외무도장도 갖추어 놓았다고 한다.³⁹⁾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의 향토음식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니 관광상품으로 인삼주와 뱀술을 주로 자랑했던 것 보다는 바람
직한 일이다.

최근에 소련과 북한은 소련 極東의 하바로프스크를 경유해 북한
으로 들어가는 관광코스를 개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공동으로 「패키지
투어」를 만들 것에도 승意했다고 전했다. 이 합의는 특히 중국을 경
유해서 북한을 방문했던 일본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 소련의 극동과 북한을 경유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행코스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⁴⁰⁾

라. 觀光開放과 그 影響

관광사업 분야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先進
國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38) 내외통신(보도판 5951호) 1988.12.3.

39) 중앙방송, 1988.12.10.

40) 모스크바 방송, (1988. 9. 21)

관광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체제적 요인과 주민의 생활실태,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 자본의 여유가 없다는 사실은 북한의 관광사업과 개방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80년대 초부터 대외선전과 김정일의 「치적」을 부각시키기 위해 평양을 비롯해서 남포, 원산, 청진, 개성, 신의주 등 都市의 재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주체사상탑·개선문·능라도 종합경기장·남포의 서해갑문 등 대형 건조물과 토목·건축공사에 자본과 인력을 낭비하고, 한편으로 '87년 조총련 동포의 지원으로 평양에 골프장을 완공했으며, 당면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봉에 105층 규모의 대형 관광호텔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대비해서 건축중에 있다.

북한은 향후 주요관광지의 제한된 개방 등을 통해 대외개방화를 점차로 加速化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국제관광관리국장」은 해외선전 월간지(외국문)와의 회견에서 북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1989년 여름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⁴¹⁾

이렇게 볼때 觀光開放은 초기에는 어떠한 의도된 行事を 계기로 하여 북한과의 우호적인 국가, 정당, 인물이나 또는 북한과 연대관계에 있는 단체에서 추천한 소규모의 관광단을 유치하여 통제된 「안내관광」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展望되며, 따라서 북한의 일반주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극도로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사회의 꾸밈없는 참모습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사회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41) Foreign Trade of D.P.R.K(1987.6), PP.24~25.

그러나 북한보다 앞서가는 나라에서 오는 관광단을 영접·안내·접대하는 사람들이 비록 核心階層에 속하는 教化되고 훈련된 요원들이겠지만, 그들이 일반주민들과 다르게 외국인들과 대화하고 행동양식을 직접 목격하며, 일반인에게는 통제된 관광호텔과 외국의 고급상품이 진열된 「외화전용」백화점 등을 출입할 때 북한의 안내원과 점원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어떻게 느낄 것인가.

북한은 경제적 수요때문에 드디어 제한된 조건이지만 門戶를 개방하여 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전망하면 북한은 外來 文物에 대한 문호개방을 외면할 수 있는 명분을 점차 잃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外來文化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북한에서 외래문화 도입문제는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해외동포의 「조국진출」名分으로 시작된 제일동포 北送의 영향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계급정책에 따라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는 북송동포에 대한 조직적 統制와 監視, 반복되는 사상교육 등으로 귀환동포들이 전파하는 외래문물의 영향이 제약되고 潛在化되어 왔으나 새로운 환경변화는 장치 서로 相乘作用을 하여 意識構造와 社會的 變化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6. 結 言

가. 北韓社會의 特徵

自由民主主義를 理念으로 하는 南韓의 사회체제는 自律性, 多元性, 開放性을 존중하는 질서로 형성되고 있는데 비해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朝鮮勞動黨의 金日成 主體思想을 지도이념으로 한다는 북한사회는 김일성의 1人支配

體制 확립과 그의 권력세습에 부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방사회와는 크게 다른 체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공산사회의 경우보다 全體主義的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첫째, 集團主義原則에 입각한 조직적 統制社會이다.

북한헌법 제49조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를 떠난 개인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개인은 항상 전체의 한 세포로서 움직여야 하고 개체의 권익은 언제나 전체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이 모여 집단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와 반대로 전체 또는 집단의 구성요소중의 일부로 개인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 제68조는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사회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 정신의 최고표현은 혁명의 수령(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에 있다”고 교양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 개개인은 김일성을 정점으로하는 공산주의집단 전체를 위해 조직을 통해서 헌신 복무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 전체는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북한 로동당은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와 개인생활에 대한 절대적 간섭을 강행하고 있다.

물론 자유사회에서도 조직 또는 집단생활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생활의 시간과 조건이 상대적,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사회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둘째, <唯一思想體系>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思想的 劃一社會가 형성되어왔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여 왔으며,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一色化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들은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주체사상이 절대적 가치기준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어떠한 다른 사상이나 신앙이 있을 수 없고, 金日成의 思想만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全黨과 全人民의 意志”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敎示’는 절대성과 무조건성이 부여되며 信條化하도록 강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법률이나 정책에 우선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군사 등 모든 활동과 생활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모든 전통 종교는 말살되어 왔고 김일성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신앙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라는 敎理가 절대시 되는 神政體制的 사회로 되었다.

셋째, 북한은 出身成分과 黨性에 따라 身分을 철저히 차별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

8·15이후부터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반복하여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核心階層, 動搖階層, 敵對階層 등 3대 계층으로 분류하여 차별대우와 통제를 하여 왔으며, 근래에는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과 경력에 따라 사회성분을 심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로동당원 특히 로동당, 정권기관, 군대, 사회단체 등의 간부들이 特權階層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가족들을 포함하여 「핵심계층」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신분상으로는 대우면에서 일반주민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있다.

본래 마르크스·레닌主義가 무계급사회를 표방하고 기존의 사회

구조를 계급적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상, 특히 남북한 사회를 비교하는 경우 사회계층과 계급의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 영역이다. 그런데 북한사회가 추구한다는 「平等」 이데올로기와 가장 상반되는 현실적 모순은 바로 계층화현상과 그 경직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헌법 제6조에 “북한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북한사회에서는 계급차별이 없고, 계층간에 대립도 없는 理想社會인 <인민의 낙원>이 성취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사회에 비록 地主나 資本家 계층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분분류에 따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관계를 규제하여 온 새로운 계층서열의 구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넷째, 4大軍事路線으로 구축된 戰時體制的인 兵營社會가 형성되었다.

모든 주민들은 각종 조직에 종속되어 통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직장과 학교가 군대식 편성으로 下向式 명령체계를 확립하고 <全國의 要塞化>와 <全民의 武裝化>라는 기치아래 군사훈련을 받으며, 항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긴장된 軍事動員態勢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병영사회에서 출생한 북한주민들은 유치원의 유아시기부터 총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붉은청년근위대(고등중학교 고등반 남녀학생), 교도대(17~40세까지의 대학생 및 군제대자), 17~60세(여자는 35세)까지의 일반주민들로 구성된 勞農赤衛隊 등으로 편성되어 모든 주민들은 군사훈련에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다섯째, 북한은 인간의 思想意識을 黨의 요구에 맞게 改造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情報를 통제하는 閉鎖社會이다.

북한정권은 권력의 세습화를 강행하면서, 주민에게 “인민의 낙원”이라는 虛像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관리와 폐쇄정책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기만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대외적 정보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당하고 있다. 외국의 방송·신문 등을 접할 수 없음은 물론 외국인과의 접촉은 상상도 못한다. 북한을 공식 방문하는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들과 접촉하는것은 인가된 특수계층이 사업상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북한전지역의 일반인들에게 유선방송의 보급과 라디오의 다이알 고정이 실증하는 것처럼 로동당의 통제와 조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어진 정보 이외에는 다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의 거주이전과 여행 및 통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평양, 휴전선지역, 군수공업지대 등은 특수여행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폐쇄정책은 남북한 사회의 相互開放과 交流를 거부하게 되고, 민족의 異質化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不信으로 대립을 조장하여 민족화합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다.

나.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앞에서 대략 살펴 본바와 같이 集團主義原則에 입각한 조직적 통제사회의 硬直化되고 劃一化되어온 북한사회의 일반적 실상과 또 한편으로는 종전과는 달리 어느면에서 보여주는 변화의 양상을 엿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民族共同體의 회복, 발전과 평화적 統一을 지향하는 視角에서 북한사회가 여전히 逆機能的인 상태를 고수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충격에 의해서 어느정도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

인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관심사항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주변의 공산권을 포함한 國際環境의 변화와 과학문명의 발달은 북한으로 하여금 前近代的인 신분사회적 階級政策과 철저한 「情報管理政策」을 바탕으로 하는 극단적인 폐쇄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

② 北韓의 상상을 초월한 韓國의 發展과 국제사회 진출은 북한주민을 묶어온 이른바 남반부는 '인민의 지옥'이고, 북반부는 '인민의 낙원'이라는 허구적인 固定觀念(complex)을 붕괴시켜 북한당국이 더 以上 주민들을 기만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③ 점차로 覺醒하여 가는 북한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生活水準의 향상이라는 현실적으로 긴박한 정책수요 때문에 경제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기술혁신 및 자본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社會開放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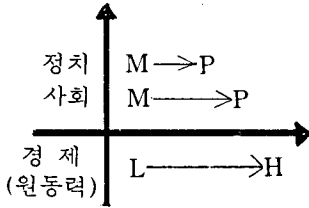
④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대외적 情報交流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인텔리화」는 점차로 물질적·정신적 欲求水準의 上乘과 産業化에 따른 사회계층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북한과 같은 單元的인 획일사회도 비록 제한성은 있으나 多元化·開放化의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⑤ 産業化에 따른 專門化가 더욱 진행됨에 따른 다양한 테크노크라트 계층의 진출이 더욱 증가되어 정치체제와 사상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은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방향을 도식화해 본 것이다.⁴²⁾

42) 국토통일원, 「소련의 사회실태」-세미나 결과 보고-(1976), PP.16~19 참조

경제 · 사회 · 정치의 연관도식



- L : 저개발 단계 (후진성)
- H : 고성장 단계 (선진화)
- M : 단원적 경향(폐쇄적)
- P : 다원적 경향(개방적)

유형	경제	사회	정치	상황
A	L	M	M	정태적 안정
B	L → H	M → P	M	동태적 불안
C	H	P	P	발전적 안정

위의 도식에서 고찰해 보면 社會類型 A는 전근대적인 봉건사회나 종전의 북한과 알바니아 등의 상황에 해당될 것이며, B유형은 대체로 체코를 비롯한 공업화가 진행된 공산국가들의 고민과 갈등을 겪고있는 불안한 상황인데, 과거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희망했던 체코의 두부체코가 自由化(C유형 지향)를 추진하려다가 소련군에게 유린당했던 것이다.

우리사회를 포함한 모든 開發途上國家들의 사회는 B유형과 유사한 경험을 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북한체제가 가장 우려하고 기피하려는 관문이 될 것이다. C유형은 선진적, 개방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社會變動은 북한체제의 속성으로 보아서 심각한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고 초기에는 충격을 제어하기 위해 사회적·문화적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지만⁴³⁾ 내외적 상황적응을 위한 사회

43) 내외통신, (보도판 5953호) 1988.12.5. 참조.

개방과 획일적 이데올로기의 修正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의 關心事는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관광개방 전망과 종교정책의 수정방향이다. 사회체제적 요인과 주민생활통제, 경제적 사정등은 여러모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獨斷과 異質性을 金正日이 “우리식 으로”하자고 강요하고, 북한의 落後性과 경제적 困境을 ‘自力更生’이라고 호도하여 왔으나, 현재 북한에도 東歐와 中國 등의 영향이 비록 제한적이거나 나타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日本 등 서방국가들의 문화가 스며들면서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북한사회 내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戰術的 보완조치로서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거나 선전적인 표면적 變容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체제의 수정적 변화로 誤認하거나 速斷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IV. 北韓의 教育 · 文化

任 鍾 燄(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원래 敎育이란 그 語源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素質 또는 잠재력을 계발하여 향상발전 시키는것이다. 이러한 人本主義思想에 기초하여 自然의 상태를 理想의 상태로 끌어 올리고 社會와 國家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敎育의 궁극적 목표를 두고있다.

그러나 解放이후 북한땅에 共產政權이 수립된이래 북한공산집단은 革命의 手段으로서의 敎育, 政治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敎育을 강조하고 敎育의 社會主義的 성격을 더해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敎育의 이러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우리民族의 同質性은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그리하여 북한주민의 民族觀은 물론 意識構造, 價値觀, 思考方式과 행동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것과는 현저히 달라져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것은 북한공산집단이 金日成과 그의 家系 偶像化, 우리 民族史의 날조와 왜곡을 일삼고, 거기에다 資本主義, 帝國主義를 증오하도록하는 敎育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韓國에 대해 그릇된 認識과 反感을 갖도록 함으로써 民族의 異質化를 심화·확대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같은 민족구성원간에 적개심을 고취하는 북한공산집단의 증오敎育 등 일련의 政治思想敎育은 우리의 비상한 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아닐수없다.

한편 우리民族은 南北分斷이전 동일한 言語와 같은 사고방식, 같은 감정, 같은 生活樣式을 가지고 單一民族으로서 하나의 共同體를 이루었고 同質性과 連帶性을 그 특징으로 하고있었다.

그러나 분단이후 한민족의 동질적인 民族文化는 異質的인 政治理

念과 相異한 社會體制를 추구하는 가운데 異質化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더우기 북한은 한민족의 傳統文化에 이질적인 政治思想(共産主義)體制를 강제로 이식하였고, 그 理念과 체제에 맞는 정책을 강력한 政治的 힘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리하여 북한에서는 한민족의 전통문화가 자취를 감추게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政策, 教育制度, 教育內容과 方法, 그리고 文藝政策과 活動 및 實相을 차례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2. 教育理念과 目標

共産主義者들은 教育을 계급투쟁의 수단 또는 도구로 보고 教育자들은 職業革命家 또는 政治的 宣傳煽動員으로 간주하며, 학교는 共産主義理論과 그 전파의 先導機關으로 정의하고있다.

이러한 教育관에 입각해서 教育의 目標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기초하여 共産主義社會建設과 나아가 世界革命에 필요한 人材를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즉, 이는 赤化統一革命課業을 똑바로 가르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표방 하는 教育理念과 目標은 북한주민을 ① 革命化 ② 勞動階級化 ③ 共産主義化 하여 이른바 “共産主義的 新人間”을 육성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된 “共産主義的 新人間”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로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社會主義教育學에 대하여 (1973)」를 텍스트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共産主義는 놀고먹는 社會가 아니므로 勞動을 사랑하며,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사람

② 個人主義, 낡은사상, 資本主義思想을 철저히 뿌리뽑고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무장된사람

③ 自己個人的 이익을 돌보지않고 오직 社會全體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④ 共產主義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革命的 樂觀主義를 갖는 사람

이렇게 볼때 적어도 이 네가지 條件을 갖추어야만 “共產主義的 새人間”이 될수있는것이다. 그렇다면 이 네가지 조건을 갖춘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 人間의本性, 個人的 최소한의 욕구마저 억제된, 다시말하면 개인의 모든것이 말살되고 희생된 인간이 다름아닌 “共產主義的 새人間”인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1968년 3월14일 金日成이 “學生들을 社會主義, 共產主義 건설의 參된 後備隊로 교양하자”라는 연설을 통해서 教育學의 존재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全朝鮮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만큼 教育학도 그에 복종하여야한다.”¹⁾

이러한 金日成의 발언에서 명백해지는 바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에 있어서는 그들의 教育과 남조선혁명을 떼어서는 생각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여러가지 사실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여기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의도하고있는 공산주의적 새인간 이라 함은 이른바 “共和國北半部에서의 社會主義建設과 南朝鮮革命에 필요한人間”을 말하며 이를 위해 金日成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人材를 의미하는것이다.

1)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북한로동당출판사, 1973) p.314.

3. 教育政策

가. 社會主義教育의 形成背景과 變遷

북한에서는 8·15解放직후 여타의 모든 분야에서 소련식을 모방했듯이 教育分野에서도 「소비에트 교육학」을 직도입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는 「소비에트教育學」에 대한 반발과 함께復古的인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教育理念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에 있었던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철저한 구현을 넘어서서 이른바 북한 나름의 「社會主義教育學」이라는 修正主義를 채택했으며, 1977년 9월5일에는 이 사회주의 교육학을 이념적 배경으로 하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제정, 공포되었다.

북한에서의 장기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교육의 종합지침서로 되어 있는 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오늘날 北韓教育의 모든것을 통제, 규제하고있으며 또 이것을 일컬어 그들은 공산권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독창적인 교육총서”라고 자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교육의 理念과 政策은 필요에 따라 변천과정을 거쳐왔는데 그것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第1期：共產主義思想 도입 및 6·25南侵期(1945-53년)

金日成은 북한에 社會主義政權을 수립하기 위하여 憲法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구와 체제를 소련의 共產主義原理에서 모방 하였다. 따라서 學制와 教育行政, 教育理念도 마르크스·레닌主義的인 기본노선과 내용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主義는 당시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식계층에게까지도 어렵고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고 할수있다.

그리하여 學校教育과 成人教育을 통하여 共產主義理論의 기초지식을 널리 보급시키는 한편, 문맹퇴치교육에 치중하면서 日帝 식민 통치교육에서의 탈피라는 세가지 教育目標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1946년2월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제정한 20個 項강속에 잘 나타나 있다.

1947년에는 北朝鮮임시인민위원회 제41차 회의에서 學制改編案이 제시되었고, 1950년 6·25동란 당시에는 “후대교육은 가장고귀한 革命課業의 하나로, 그리고 모든것은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학교교육을 군사훈련을 위한 연병장으로 삼았으며, 1953년7월에는 人力動원의 필요상 初等教育(人民學校)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의 북한교육은 문맹퇴치와 식민지교육의 잔재속청, 공산주의이론의 보급에 그주요목표와 내용을 두었다고 할수있다.

2) 第2期：戰後再建 및 共產主義 確立期(1953-60년)

이 시기 北韓教育政策의 초점은 전후의 재건을 서두르고 새교육체제로 정비하여 더욱 확고해진 金日成 獨裁下에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데 집중되었으며, 社會教育및 通信教育을 확충하였다.

1953년이후 金日成은 “모든것은 전후인민경제 복구에로”,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는 기치아래 한층 더 소련식의 共產主義 思想教育과 이념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1955년 4월에는 勞動黨中央委員會 전체회의에서 「계급투쟁강화에 대하여」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신무장과 경제건설에 學校教育의 목표를 설정하였고, 1956년말에는 學制改革을 통해 4年制 初等教育을 의무교육으로 하였으며, 1958년 11월에는 中學校3年과정을 포함하여 7年制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명목상의 선진국 교육형태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를 복구하기 위하여 年間義務勞動

時間을 人民學校10일, 中學校 2-4주, 技術계고등학교 5개월, 大學3개월로 정하고 學生들의 노력봉사를 강요하였다.

3) 第3期：生産技術教育 및 革命傳統教養 確立期(1960-66년)

이기간의 학교교육은 주로 패전에 따른 政治·經濟·文化面에 있어서 폐허와 퇴보, 그리고 思想침체를 복구하고 회복하려는 데 역점을 두었으므로 學生들의 勞力動員과 生産技術教育의 강화, 革命傳統教養이라는 이른바 주입식 사상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심과제였다고 할수있다.

1961년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는 몇가지의 基本原則을 각급학교에 시달하여 教育의 目標와 內容으로 삼았다.

① 교육목적은 자라나는 세대들을 다방면으로 발전된 새로운형의 人間으로 育成하는데있다 ② 이론과 실천의결부, 教育과 生産의 結合을 강화한다 ③ 기술교육을 일층 強化한다 ④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한다 ⑤ 文化革命의 수단으로 成人教育을 강화한다 ⑥ 교육부문에서도 천리마운동을 강화한다 ⑦ 학원에 대한 共産黨의 지도를 강화한다.

그리고 1966년 11월에 公布한 「전반적9년제 기술의무교육제」와 「黨의 中央集權的 권력의 강화」, 「共産主義教養」, 「계급교양」 「勞動精神教養」 등의 온갖 政策決定과 구호가 나타났다.

4) 第4期：唯一思想確立期(1966-80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교육은 科學技術의 제고와 思想教育強化에 그역점을 두고 있다.

1966년 11월23일자 로동신문에 보면 첫째, 中等學校 수준에 대한 기술교육의 강화로 初·中級의 기술자든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나 근대산업운영에 필요한 質높은 고급기술자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기술교육일변도에서 오는 문화 정서수준이 너무낮다. 셋째,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1970년대에 이르면 북한의 各級學校에서는 소위 ‘혁명전통교양’

이라는 명목아래 주로 金日成의 항일투쟁 전적지를 순례하고 黨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고조시켜 나갔다.

그래서 혁명전적지행진, 명산고적답사, 수학여행, 대열행진등을 교과목으로 도입했다.

1970년 「勞動黨第5次大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내용을 결정하기도 했다.

- ① 학교에서 기술자, 전문가를 대량 양성하는것이 중심과업이다.
- ② 학교의 물질적인 토대구축, 교원대열의 정비,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성인교육과 취학전 교육의 강화, 청소년의 革命化와 로동계급화에 노력한다.
- ③ 청소년교양에서 부르주아사상과 봉건사상 그리고 自由放任思想을 제거하고 社會主義 文化建設을 위한 사상혁명이 급선무이다.

그런데 이기간에 북한의 政治, 社會, 文化, 經濟, 教育의 전반에 걸쳐서 주류를 이룬것은 이른바 金日成에 의한 「主體思想」과 黨의 「唯一思想」으로서 이는 북한이 소련및 中國과의 外交關係에서 중립적인 독자노선을 견지하고 자주성을 표방하는것이였다.

5) 第5期：人間改造教育 運動期 (1980-현재)

「人間改造」라는 개념은 共產主義教育學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필수적인 일반 어휘이지만 北韓「社會主義憲法」제39조에서부터 규정되고 있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原理를 구현하여 後代들로 하여금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革命家로 知·德·體를 갖춘 共產主義的 새人間으로 키운다”

또 1977년에 발표한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에서도 “……社會의 主人인 人民을 共產主義的으로 교양 개조하여 共產主義社會建設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人間改造는 본질에 있어서 思想改造이며, 共產主義的人間을 키우는데 있어 기본은 共產主義思想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여 그 의미와 目的을 설명하고 있다.

「人間改造論」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방법은 1985년에 나온 「人間改造 이론」(조선로동당 창당 40돛기념 강운빈 저)이라는 책에서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人間改造論은 主體革命理論의 重要부분의 하나이다. 인간개조문제는 自主性を 위한 혁명투쟁,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에 이론·실천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문제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이책이 金日成의 교시에 의존하고 있지만 金正日의 지적사항이라는 전제하에 수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어서 최근의 권력세습문제와 함께 오늘날 北韓의 學校教育과 教育理論에서도 金正日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북한은 教育理念과 教育政策은 각 시기의 필요에 따라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나 이들 과정이 일관해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바 그것은 ① 교육에서의 政治思想教育의 최우선 ② 교육과 「全朝鮮革命」과의 不分離이다.

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의 특징

北韓의 현행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한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발상은 앞에서 인용한 1968년 3월 북한의 교육부문 일꾼들 앞에서 한 金日成의 연설에서 유래되고 있는데 위 연설에서 “北韓社會에 共產主義에 敵對되는 사상인 낡은사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부르주아 資本主義思想이 특히 교육부문에 만연되어 있다”고 규탄하고 그러한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적대사상과 낡은 부르주아적 教育方法이 그냥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힐책하면서, 教育事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학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른바 “社會主義教育學의 原理”라는 것을 제시하였는바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個人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 되도록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는것이 곧 社會主義社會에서 教育學의 原理이며 기본이다.”

그러던중 1971년 12월 27일에 개최된 「全國敎員大會」에서 金日成은 敎育事業에서 「社會主義敎育學의 原理」를 철저히 구현함에 대하여 라는 연설을 통해서 이번에는 북한 특유의 독창적인 社會主義敎育學을 창조하고 이를 완성하여 敎育에 적용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그는 북한에서 독창적인 社會主義敎育學을 만들어야한다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다.

①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적용하고있는 敎育學은 어느나라의 것을 막론하고 사상혁명에 철저히하지못한것이기 때문에 믿을수 없다는 것이며 ②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먹기를 좋아하며 資本主義制度和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동경하는 修正主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6년 4월29일 취학전 아동敎育(탁아소와 유치원敎育)을 법으로 규정한 「어린이 보육敎育법」이 나오고, 1977년 9월 5일에는 북한의 소위 장기사회주의 敎育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敎育강령이 공포되었는바 그것이 바로 「社會主義敎育에 관한 테제」인것이다.

이 사회주의敎育에 관한 테제는 5個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金日成이 그간 敎育문제와 관련하여 행한 연설, 敎示와 명령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第1章: 「社會敎育의 原理」, 第2章: 「사회주의敎育의 內容」, 第3章: 「사회주의敎育의 方法」, 第4章: 「사회주의敎育의 敎育制度」, 第5章은 「敎育기관의 임무와 역할, 敎育事業에 대한 지도와 방조」로 되어 있다.

이 테제에 나타나 있는 敎育政策의 基本方向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이념과 목표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북한주민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여 「共產主義的 새人間」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위해 견지하여야할 원칙으로서 ① 黨性, 勞動階級性的의 구현, ② 주체의 수립, ③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④ 社會主義國家의 교육사업에 대한 組織, 進行, 責任을 제시하고 있다.

이 테제가 나오기 이전의 教育政策과 비교할때 同 테제에 나타나 있는 교육정책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政治思想教育을 여타의 교육보다 최우선시 하면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그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둘째, 教育理念과 目標, 教育의 內容과 方法, 教育制度 등 교육의 모든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획일화함으로써 個人과 學校別로 발생할수있는 差異 發生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의 公布이후 북한에서는 同테제를 가리켜 “金日成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주체의 교육강령이며 共產主義的 革命人材教育에 참다운 길을 명시한 교육강령 또는 교육에 관한 이론, 실천적문제에 科學的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이며 「교육총서」²⁾”라고 찬양하며, 同 테제 公布日을 「教育節」로 제정하고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있다.

4. 教育制度

가. 教育制度上的 특징

북한의 교육제도는 北韓共產集團이 의도하고 있는 教育理念과 目標를 구현하기위한 제도적장치, 바로 그것이다.

2) 北韓研究所編, 「북한총람」, 1983, p.125.

그런데 北韓教育制度上 특징적인것은 ① 취학전 아동에대한 早期教育의 強化, ②黨에 의한 철저한 統制, ③學生들을 의무적으로 무보수 勞力動員 ④군사훈련의 強化 등을 들수있다.

1) 早期教育의 強化

政治思想教育은 교육심리학적으로 보아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는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共產主義思想 주입과 集團主義精神 함양은 早期教育에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수있기 때문에, 1976년에 제정 공포된 어린이 保育教養法에 따라 일부 黨·政 특수층 子女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어린이들은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에 집단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탁아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철저하게 金日成父子偶像化, 反美思想과 對南敵對意識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 한마디로 탁아소는 유치원과 더불어 金父子偶像化를 위한 교육장이다.

한편 유치원은 2年制로서 낮은班 1年과 높은班 1년으로 나누어지며, 만4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유치원 높은반 1년부터 義務教育年限에 포함시켜 人民學校4年, 高等中學校6年, 도합 11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취학전 아동의 早期教育에 역점을 두고있는것은 아주 어렸을때부터 어린이를 가정으로부터 격리하여 金日成父子를 무조건 따르도록 조건반사적인 세뇌교육을시키며, 婦女子의 勞力動員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教育的 次元보다는 政治的 次元에서 조기교육에 역점을 두어 탁아소및 유치원의 확장을 서둘러왔으며, 여기에서 對南및 國際的 宣傳效果를 노린 저의도 간파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집단은 11년제의무교육과 무료교육을 크게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生産手段이 모두 國有化되고 私有財産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條件에서, 다시 말하면 최저의 생계유지와 勞動力 재생산

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않는 北韓體制下에서는 無料教育의 艱박에 없는것으로서 11年制 義務教育과 無料教育을 자랑하는것은 세금이 없다는 宣傳만큼이나 허위적인 것이다.

2) 勞動黨에 의한 統制

북한의 教育은 黨이 完全히 장악하여 독선적인 통제와 감독을 하고있다.

그 전담부서는 「勞動黨中央委員會 科學및 教育部」로서 이곳에서 教育政策을 수립할 뿐만아니라 그 정책수행 과정에서도 指導라는 이름으로 統制를 가하며, 그 밑의 관할지역당이 또 일일이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있다.

이 이외에도 黨의 統制를 강화하기 위해 大學의 경우 「學校黨委員會」가 組織 設置되며 同委員會는 黨의 외곽단체인 「社勞靑」, 「職業總同盟」, 「女性同盟」등의 組織을 통하여 2중 3중으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統制와 監視를 하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大學黨委員會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³⁾

- ① 唯一思想體系를 확립하는 사업의 조직및 수행
- ② 幹部 後備隊의 육성과 組織的인 훈련
- ③ 교직원과 학생을 黨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
- ④ 初級黨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키는 지도사업
- ⑤ 大學內의 사회단체의 組織 強化, 事業方向과 方法의 제시와 감독
- ⑥ 大學行政 및 教育事業의 지도
- ⑦ 大學教導隊의 軍事訓練과 전투태세의 완비, 군사동원사업의 보장

이상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大學黨委員會의 權限은 막강하며, 대학당위원회의 責任秘書는 副學長이자 대학내 군사조직의 지휘관으로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

3) 學生勞力動員

學生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勞力動員은 무보수노동인데도 1日

3) 李正九, “교육행정 二元化를 형성한 政治組織體系”, 「북한」, 1984년 11월호

작업량이 부여된다. 그리고 노력동원의 범위는 인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망라되어있다.

북한에서는 共產政權수립직후 부터 學生勞力動員이 강제로 실시되어 오다가 1959년부터는 「學生社會主義義務勞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 되어있어 대학생은 연간 12주, 고등전문학교학생은 연간 10주, 고등중학교학생은 연간 4-8주, 人民學校 학생은 연간2-4주의 義務勞動을 하도록 되어 있다.⁴⁾

그러나 긴급을 요하는 課業을 해결한다는 名目으로 학생들을 수시로 동원함으로써 규정상의 의무노동시간을 언제나 훨씬 초과하게 마련이다.

북한은 1959년부터 全學生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에서는 11年制義務教育은 무료교육이라고 규정하여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수업료의 면제가 1959년의 「學生社會主義義務勞動制」⁵⁾의 실시와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으로보아 이 수업료면제는 사실상 學生들의 勞力動員의 代價임을 알수있다.

北韓憲法에서도 “……一般教育和 技術教育, 生産勞動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라고 규정하여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의 制度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⁶⁾

4) 軍事訓練

북한에서는 靑少年들에 대한 군사훈련을 계속 강화하여 金日成父子에 대한 충성심, 복종심을 기르도록하는 한편,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軍의 幹部化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人民學校때부터 전쟁놀이, 남조선달리기 등의 국방체조를 강요하고있다. 특히, 高等

4) 國土統一院, 「南北韓 社會文化現況 66輯」, 1985, p.26

5) 1959. 3.2, 北韓의 내각결정 제18호

6) 北韓의 「社會主義憲法 第40條」

中學校 高等班 이상의 각급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에 있어서는 정규군 못지않는 訓練을 실시 하고 있다.

大學의 경우 1-2학년은 주당 7-8시간, 3-4학년은 5-6시간의 校內 訓練 이외에 매학기말 1-2주의 野外 訓練을 실시하며, 大學4年間に 校內 訓練 960시간, 入營 訓練 1,780시간 도합 2,740시간에 달하고있다. 그리고 卒業前에 실시되는 40여일의 入營 訓練에서는 예비군소위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卒業狀을 받을수있다.

高等中學校 高等班에는 「붉은청년근위대」가 組織되고, 1959년 1월에 발족한 「大學노동적위대」는 1974년에 「교도대」로 개편 되었다. 그 편성에 있어서도 學校單位는 聯隊, 學部(全學年)單位는 大隊, 學級單位는 小隊로 편성되고 지휘관은 各級學校 黨委員長이 맡는다.

그리고 大學別 특성과 전공에 따라 軍種과 兵科가 부여되는데, 예컨대 金日成綜合大學은 보병, 金策工業大學은 포병, 원산수산대학은 海軍 등으로 분류된다.

나. 教育行政 및 學校教育體系

북한의 教育體制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勞動黨의 완전한 통제와 감독하에 놓여있다. 즉, 教育政策의 수립과 총괄적指導, 統制는 「勞動黨中央委員會」의 科學및 教育部에서 하고, 「政務院」산하의 教育위원회는 정책집행과 教育행정을 총괄한다.

그리고 教育委員會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으며, 전자는 一般大學을, 후자는 사범대학과 敎員大學을 포함한 그밖의 초·중등및 성인교육을 담당한다.

學制는 4-6-4(6)制로서 人民學校 4년, 高等中學校 6년(중등반 4년, 고등반 2년), 大學은 4-6년으로 되어있다.

大學은 綜合大學(金日成綜合大學 1個), 單科大學, 敎員大學의 3

종류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단과대학은 원칙적으로 4年制(단, 의학대학은 6년, 교원대학은 3년)이며, 직업전문학교인 3年制의 高等專門學校가 있다.

최근 북한교육에서 주목할것은 高等教育部門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구호아래 고등교육기관을 크게 신설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1984년 한 해 동안에만 40개의 單科大學과 8個의 工場大學을 새로 설립하였다.⁷⁾ 그런가 하면 평양을 비롯하여 각도에 전문적인 科學技術者의 早期養成을 위한 특수과학영재학교로 第1高等中學校를 1個씩 新設, 1985년 9월에 일제히 開校하였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이처럼 고등교육기관을 대폭증설하고, 第1高等中學校라는 특수과학영재학교를 新設하고 있는것은 지난기간 자력갱생노선을 표방하면서 폐쇄정책을 고수해왔고, 또 主體思想에 기초를 둔 政治思想教育을 중시하는 教育政策을 실시함으로써 科學技術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위한 高級技術人力의 필요 때문이며, 장기적으로보면 對外開放政策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절박한데서 나온 교육정책의 전환이라고도 볼수있다.

다음은 북한 교육기관의 특성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大學

북한에는 현재 235個의 大學이 있는것으로 되어있다.⁸⁾

유일한 종합대학인 金日成綜合大學에만 社會科學部(역사학부, 철학부, 경제학부, 법학부, 조선어문학부, 외국어문학부 : 5년제)와 自然科學部(물리학부, 수학역학부, 생물학부, 지리학부, 화학학부,

7) 「로동신문」, 1985. 7. 22

8) 국토통일원, 「조선개관」(평양의국문출판사, 1987, 번역), 1988. p.162.

지질학부 : 6년제)에 12개 학부를 두고 있으며,⁹⁾ 교수 1,200명, 직원 3,500명, 그리고 재학생이 17,000명(야간·통신부 5,000명)이며 政務院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다.¹⁰⁾

북한의 高等教育制度에서 특이한것은 「金日成綜合大學」을 제외한 모든 大學이 單科大學으로서 專門大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單科大學은 실제로 있어서는 우리 綜合大學의 전공학과에나 해당될수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북한의 高等教育의 目的이 全人的 人間養成을 지향하는 自由民主國家에서의 교육과는 달리, 金日成父子의 명령과 지시에 무조건 절대적으로 맹종하는 人間,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문적인 現場技術者, 또는 직능인의 양성에만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敎員大學은 명칭 그대로 人民學校敎員을 양성하고 있으며, 사범대학은 高等中學校 高等班敎員을 양성하는 제1사범대학과 고등중학교 중등반 敎員을 양성하는 제2사범대학으로 나누어지며, 敎員大學과 제1, 제2사범대학은 각도에 1개씩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成人教育기관인 工場大學, 農場大學, 漁場大學 등은 주로 공장, 기업소, 광산 등에 부설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직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5-6년으로 2部制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學校는 大學이라기 보다는 공장, 기업소근로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양성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북한에서는 高等中學校 卒業生의 70%는 軍에 入隊하고, 20%는 직장에 배치되며, 10%정도만이 곧바로 大學에 진학할수있다. 그러므로 군에 입대하거나 직장에 배치된자가 대학에 진학하려면 2-5년의 軍 또는 직장생활과정에서 인정을 받고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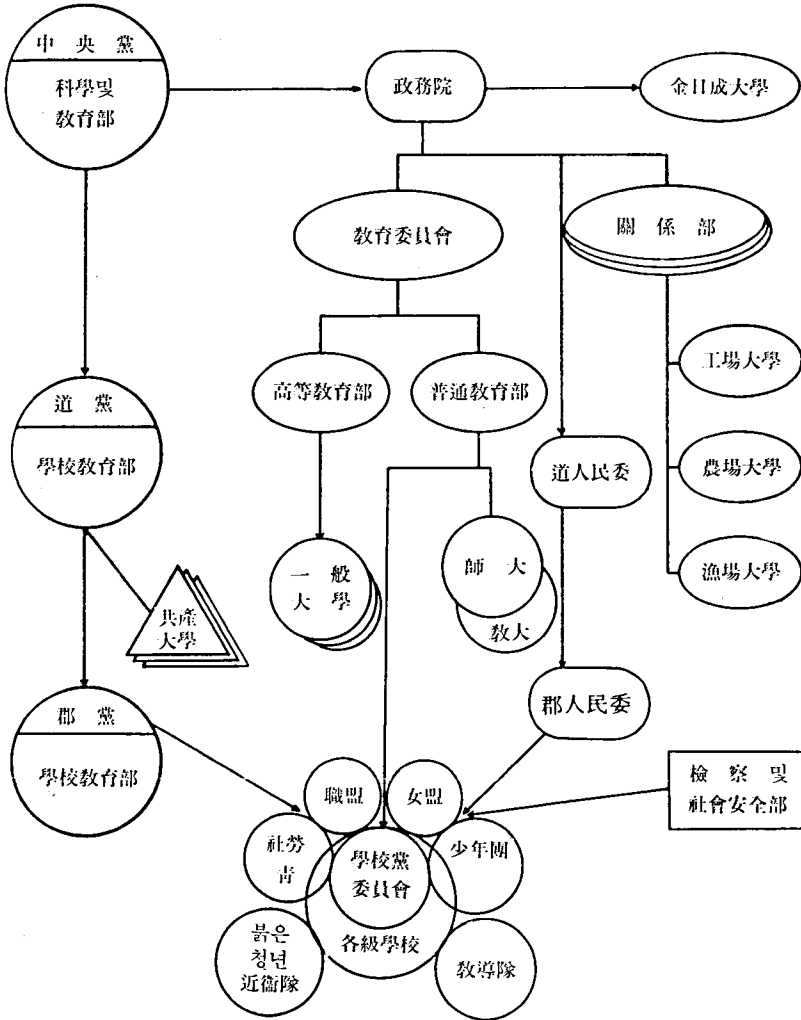
9) 金東奎, 「社會主義教育學」, 1988, p.408.

10) 金東奎, 「상계서」, 1988, p.405.

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敵對階層에 속하는자의 자녀는 근원적으로 大學진학이 불가능하다.

<表1> 教育行政 및 統制體系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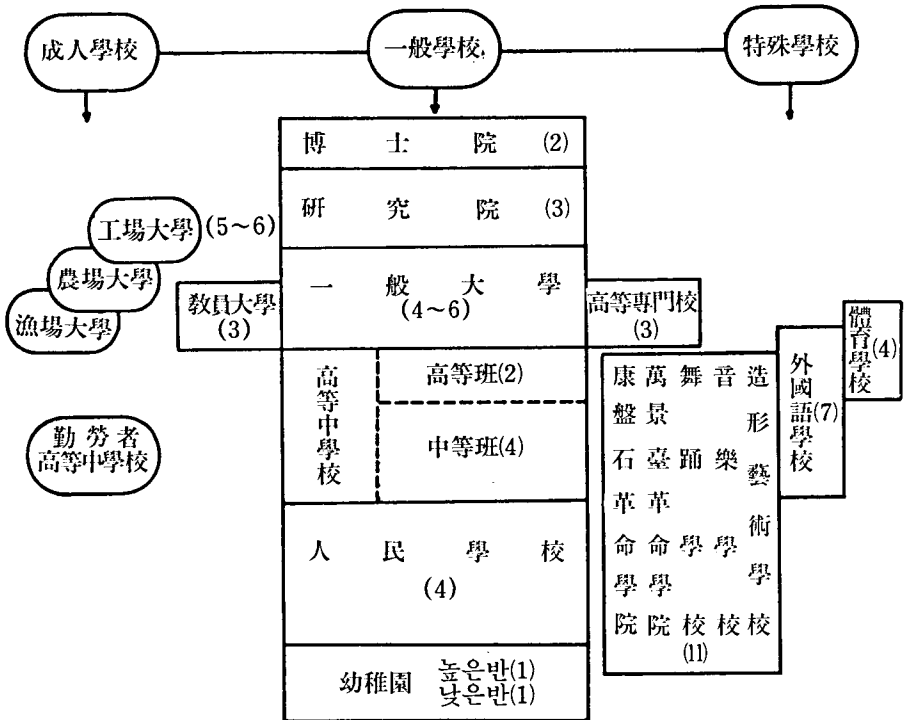
2) 高等專門學校

고등전문학교는 3年制의 職業專門學校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이나 기능공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양성하는데 두 種類로 대별된다.

하나는 北韓全地域에 공통되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것으로 例컨대, 建設專門學校, 예술전문학교 등이며, 다른하나는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茂山高等鑛業專門學校, 第2高等陶器專門學校 등이 있다.

고등전문학교는 郡單位로 설치되어 그 數는 473個校이다.¹¹⁾

<表2> 學校教育體系圖



11) 「조선개관」, 1988, p.162.

3) 特殊學校

특수학교는 만경대혁명학원(평양만경대), 강반석혁명학원(남포)과 같은 특수층의 자녀가 들어가는 교육기관과 무용, 음악, 조형예술 등의 예체능계학교가 있는데 이들은 유치원 높은班 과정부터 高等中學校까지의 11年制로 되어있다.

그리고 體育人이나 예술인은 해외선전활동을 위해 外國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 예체능계학교의 入學은 출신성분, 思想性을 중요시한다.

현재 북한에는 탁아소 28,358個所, 유치원 19,262個에 약 200만명의 유아가 수용되어 있으며 人民學校 4,792 개교, 高等中學校 4,738 개교, 高等專門學校 473 개교, 大學235個등 총 11,130개교이며, 學生數는 4,923,000名인데 이중 高等專門學校와 大學生數는 49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¹²⁾

5. 教育內容과 方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그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해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을 革命化, 勞動階級化, 共產主義化하기 위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教育條件과 手段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을 풀이하면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는 것은 오직 북한공산집단이 의도하고 있는 教育理念과 目標達成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人間改造에 의한 「共產主義的 새人間」의 育成”, 이것이 교육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2) 「조선개관」, 1988, p.161-162.

가. 教育內容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政治思想教育을 최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人文系統의 학과에서는 물론 自然科學 계통의 학과, 예를들면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도 정치사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政治思想教育을 잘하는 기초위에서만 科學技術教育과 體育教育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① 주체사상에 의한 무장과 이를 위한 혁명전통 敎養, ② 共產主義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 견지, ③ 제국주의, 지주·자본가 계급에 대한 증오사상의 고취, ④ 集團主義的으로 教育敎養, ⑤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함양, ⑥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정신으로서의 무장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 教育內容의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제국주의, 지주·자본가 계급에 대한 증오사상의 고취와 集團主義的 教育敎양이다.

金日成은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에서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3段階論을 제시하면서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憎惡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겉으로는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北韓共產集團이 주민으로하여금 증오하도록 가르치는 대상은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教育의 근본목표는 인간의 잠재력 啓發과 함께 이 중에서도 人間性의 함양과 나아가 상실하기 쉬운 人間性의 회복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공산집단이 같은 民族成員간에 적개심을 고취

13)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북한로동당출판사), p.375~378.

하는 이러한 「憎惡教育」은 명백히 인류 공통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民族教育과 民主教育에 대한 反逆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 북한의 憎惡教育은 南北韓의 異質化와 적개심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民族의 同質化와 民族和合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집단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한다는 문제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社會와 人民의 이익, 黨과 革命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¹⁴⁾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에서 상기와 같은 集團主義原則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전체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한 전체는 있을수 없다」는 사실이다. 듀이(J.Dewey)의 教育哲學에 기초하고 있는 西歐 自由主義社會의 教育觀은 어디까지나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價値觀이다¹⁵⁾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集團主義教育에서 개인의 희생, 個性의 말살이 큰 문제로되며, 따라서 북한의 교육은 개인의 희생위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非人間的인 것이라 할 수있다.

나. 教育方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教育方法으로서 ① 깨우쳐주는 교육, ②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生産勞動의 결합, ③ 組織生活, 社會政治活動의 강화, ④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⑤

14) 國土統一院,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北韓概要」

15) 金東奎, “北韓의 社會主義教育에 관한 研究”, 「統一論叢」 제3권 1호, p.84.

學校前교육, 학교교육, 成人教育의 並進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理論教育和 實踐教育, 教育和 生産勞動의 結合”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바, 이것은 우선 공산주의자들이 革命을 하나의 실천운동으로 보는 그들의 行動指針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共產主義者들에게 있어서 教育和 生産勞動이 결합되지 않은 지식은 無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학생에게 공부만 시키면 ‘머저리 인테리’, ‘양반 인테리’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시킴으로써만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학생들을 改造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외에도 教育和 生産勞動의 결합은 산 지식을 가르친다는 이름밑에 학생들을 수시로 生産勞動에 동원시키는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생활, 社會政治活動의 강화」를 부르짖는 目的과 底意이다, 그것은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라는 그들의 주장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조직생활에서는 공산주의의 敵對思想으로 되어 있는 個人主義, 利己主義, 부르주아思想이 용해되어 없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逆으로보면, 그들이 思想革命을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해도 이러한 「敵對思想」이 끈질기게 남아있고, 또 새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래서 북한공산집단은 思想革命은 누구에게나 이기주의, 개인주의사상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적대사상은 出身成分이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農民이나 勞動者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도 자유경쟁원리나 이윤동기가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은 북한사회에서 주민을 제때에 生産勞動에 동원시키기 위해서도 組織生活을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學校生活에서 학생들에게 일찍부

터 체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社會政治活動의 강화」를 주장하는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黨政策宣傳隊, 科學宣傳隊등 각종 선전대를 조직케하여 工場, 企業所, 農村 등에 나아가 북한주민에게 黨의 政策路線에 따라오도록 선전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학생들은 勞力動員과 社會政治活動이란 二重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다. 政治思想教育의 實態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① 金日成父子와 그 家系の 偶像化, ② 對南敵對意識과 反美思想의 고취, ③ 北韓體制의 우월성 선전 등이다.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 국어, 산수, 공산주의도덕, 김일성혁명활동, 음악, 글씨, 圖面工作등 7개 과목을 內容別로 분석해 본 결과 총 304개 단원중에서 金日成과 그의 家系우상화가 96개 단원으로 32%, 대남적대의식과 反美思想 고취가 81개 단원으로 27%, 그리고 북한 體制 찬양이 28개 단원으로서 9%이다. 그리하여 이 세가지만으로도 도합 205개 단원에 68%에 이르고 있다. 반면 여타 組織教養과 一般教養은 99개 단원으로 32%에 불과하다.

宗教를 완전히 말살하고 神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도 金日成우상화에 있어서는 예외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김일성을 全知全能한 인간, 傳說的 인간등으로 묘사하여 神格化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民族史도 북한 勞動黨의 주문에 따라 거침없이 왜곡, 날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지나쳐 같은 共產國家인 소련으로부터도 강한 反撥을 사고있으며, 한 예로 1963년에는 소련과 일대 歷史論爭까지 벌인 바가 있다.

또한 “어떤 과학이나 모든 혁명에 복종해야지 우리 혁명에 이바지

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도 없다.”¹⁶⁾라는 구실 밑에 數學과 體育까지 政治思想教育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북한의 數學教育은 數의 구조적 개념을 부여하기 보다는 實用性을 강조하며 계산문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政治·經濟·軍事問題에서 찾고 있다.¹⁷⁾

政治思想 위주의 교과서 내용과 함께 극히 우려되는 것은 言語의 異質化現象이다. 현재 북한의 교과서는 물론 신문, 라디오등 매스컴에서는 好戰性, 적개심을 고취하는 戰鬪的, 革命的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즉 ‘까부시다’, ‘원쑤’, ‘놈’, ‘피바다’ 등의 말이 거침없이 사용되고 ‘打勝’(승리), ‘革命的 戰取物’ ‘高地占領’(목표달성)등과 같은 혁명적 용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북한의 共產主義者들이 言語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간주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우리의 말과 글은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과학, 기술발전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힘 있는 무기로 되어 있다.”¹⁸⁾, “또한 革命과 建設의 모든 분야에서 대중을 혁명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조직동원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문화를 남조선혁명발전에 맞추어 침투시키는 무기이다.”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言語를 革命的 武器로 삼는다는 것은 ‘원쑤’, ‘놈’, ‘피바다’와 같은 전투적 언어를 계속 사용케함으로써 合理的, 批判的으로 思考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盲目的으로 自己들(북한공산집단)을 추종케 하는 세뇌효과를 얻어보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같은 「言語의 異質化」는 民族語의 異質化를 낳고 또 그것은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와 가치관 형성에도 否定的인 영향을 주어 민족의 異質化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民族和合에 逆機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16)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북한노동당출판사), p.313.

17) 「동아일보」, 1984. 6.22.

18) 북한 「문학예술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2) p.1076.

〈표 3〉 학교별 교과내용

학 교	과 목
인 민 학 교	국어, 수학, 김일성혁명활동, 공산주의도덕, 역사, 지리, 자연, 음악, 미술, 체육 등 10~12과목
고 등 중 학 교	국어, 수학, 김일성혁명활동, 공산주의도덕,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역사, 세계사,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 15~18과목
대 학	전공·학교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당 투쟁사, 맑스·레닌주의 철학, 정치·경제학 등은 필수과목으로 이수

출처 : 북한의 실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220

라. 體育을 통한 好戰的인 人間養成

自由世界에서는 체육을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성된 全人形成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 反해, 북한에서는 “체육은 신체를 다방면으로 발달시켜 集團主義 정신과 革命的 동지애, 굳센의지, 그리고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이다”¹⁹⁾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體育을 통해 혁명과 建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인한 투사형의 人間을 養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실시되는 모든 체육활동에서는 순수 아마추어 정신의 발휘보다는 경기를 진행하는 선수들의 투지에서 金日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한다는 政治思想的 側面이 강조되고 있어, 모든 體育活動이 政治活動의 시녀적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북한공산집단의 體育政策은 金日成의 항일 혁명투쟁 시기에 독창적으로 창조했다는 소위 ‘혁명적 체육전통’에 기본을 두고,

19)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p.604.

모든 정책을 이와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방체육의 大衆化, 생산노동과 체육활동의 결합, 체육을 통한 金日成우상화 등을 들 수 있다.

1) 國防體育의 大衆化

북한공산집단은 체육의 대중화, 군중체육화를 통해 노동과 국방에 기여하는 國防體育의 강화를 기본정책으로 삼고, 특히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체육의 대중화라는 미명하에 전주민에 대한 전투능력향상과 호전성 조장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政治用語사전에 따르면

“國防體育은 人民들을 조국보위에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진행되는 대중적인 체육행사이며 軍事活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군사지식과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전체인민들과 軍人들을 現代戰의 요구에 맞게 군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준비시키는데 이바지 하며……, 國防體育은 軍事活動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에게 완강한 투지, 대담성, 혁명적 동지애를 키우며 군사기술기재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기술기능을 높여주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방체육의 중요성과 내용이나 그적용범위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것은 소위 4大 軍事路線이 채택됨으로써 표면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체육사업을 全人民的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김일성의 교시와 이를 구체화시키는 反面에 國防體育 강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자와 學生들에게, 사격, 강행군, 활쏘기, 모형항공기 만들기, 무선통신 등의 종목을 신설, 보급시키고, 국방체육구락부와 해양구락부를 조직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국방체육 강화를 더욱 적극화 하였다.

그리고 김일성은 1967년에 「체육사업에서 국방체육을 위주로한 體育大衆化」를 제시하여 全住民의 體力向上이란 미명하에 사격, 산악 훈련, 장애물넘기, 수류탄던지기, 트랙터운전, 무기분해·결합등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강요함으로써 군사기술 향상은 물론 好戰的인 기질을 길러왔다.

최근에는 종목을 다양화하여 사격, 장애물극복경기, 모형항공기 만들기, 격검, 모터싸이클, 자동차 및 트랙터운전, 응급처치법, 재봉틀 분해결합(여자), 수류탄던지기, 독도법, 방향탐지기, 수기신호 등 20여 종목에 달하고 있으며 학교, 공장, 농촌, 어촌 등 생활 환경과 지역단위에 맞게 각 직장, 지역, 학교의 사로청, 직맹, 농근맹, 여맹 등 社會團體와 지역체육구락부의 지도하에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교「사로청」 지도하에 과외활동시간과 매주 토요일(體育의 날)을 이용하여 사격과 제식훈련을 포함한 각종 군사기재의 조작은 물론 인접지역의 지형지물을 익힘으로써 유사시를 위한 지역단위 防衛訓練까지 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사로청」 및 「농근맹」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농한기에는 사격과 산악행사 등을 실시하고, 작업중에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수기신호, 방향판정법, 응급처치 등 간단한 종목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공산집단이 이와같이 國防體育의 大衆化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全住民들에게 다양한 군사기술을 터득케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現代戰의 요구에 맞는 강인한 육체적, 정신적 저항력과 革命性을 배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데 그 目的을 두고있는 것이다.

2) 生産勞動과 體育活動의 結合

북한공산집단은 生産活動과 體育를 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들에게 ‘業間體操’, ‘生産體操’ 등을 만들어 열심히 보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즉, 모든기관, 기업소, 공장, 농촌 등과 작업반, 인민반 단위별로 ‘아침체조’와 ‘집단 달리기’를 비롯하여, 매일 일과전에 1시간 이상의 운동을 하는 작업전 체조와 2~3시간 작업하고 20~30분씩 운동하는 ‘業間體操’, 그리고 중식시간과 일과후 自體內的 각종시설을 이용하여 지역이나 직업적 특성에 맞는 체육소조활동을 함으로써 “전투적이며 명량한 작업분위기 조성과 集團主義정신을

배양할 것”²⁰⁾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석탄광업 부문을 비롯한 중노동과 기계화 수준이 낮은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산의욕 제고와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체육 경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종목으로는 트랙터수리경기, 굴뚝기경기 등이 있다.

이와같이 북한공산집단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勞動資源 확보와 부진한 生産實績을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체육활동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사회의 체육은 노동에 몸 바쳐 일하도록 하여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고 선전하면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體育을 통한 金日成偶像化

체육에서 김일성사상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김일성의 「主體思想」과 「革命傳統」에 역점을 둔 金日成 우상화가 본격화된 시기부터였으며, 이를 기초로하여 체육의 대중화와 체육기술의 향상을 획책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이후부터 金日成은 체육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특히 金日成 교시를 통해 “體育을 國防體育 위주로 全人民化 하고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1970년대말까지 북한을 體育王國”으로 만들것을 강조한 바 있다.

김일성우상화와 관련한 체육경기의 명칭을 보면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달달」, 「만경대—봉화리—보천보달리기」, 「우리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배움의 천리길 이어 달리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돛 기념 만경대賞 체육경기대회」등을 들수 있으며, 또한 金日成 우상화의 일환으로 대규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集團體操(마스게임)의 명칭

20) 조선 중앙년감 (중앙통신사, 1974), p.227.

도 「김일성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자」, 「대를 이어 혁명의 꽃을 피우자」,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 합시다」,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체 主體 만세」,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전통」, 「대를 이어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자라나겠습니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체육 경기의 명칭마저 金日成에 대한 우상화의 극치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체육은 革命의 이익에 부합하고 黨의 노선에 충직하며 김일성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발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文藝政策

북한공산집단의 文藝政策은 住民들에게 선동의 파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對決感을 부식 또는 고취하며, 體制 귀속성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그 基本目標를 두고있다.

북한은 이것을 「군중문화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로동당」 제 5차대회 총화보고에서의 金日成의 교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문학예술과 모든 문화사업을 人民을 共產主義的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人民에게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하여야한다.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데는 學校教育만으로는 안되며 선전 선동만으로도 안된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인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 동원 해야만 군중을 교양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수있다.”라고 하였다.²¹⁾

이와같은 북한의 文藝政策은 단지 학술, 예술, 민속, 체육, 언론, 교육 등 어떤 특정의 중심적 영역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모든것이 하나의 文化分野에 속하고, 이밖에 가족에 관한 정책, 言語및 國

21) 「김일성저작선집」 4권.

語教育政策, 그리고 法意識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政治活動에 이르기까지 모두 문예정책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진 그들의 文藝政策은 중국적으로 절대적 目標達成을 위한 한가지 사업(金日成체제구축과 全國的 범위에서의 革命完遂)을 지향하여 귀일된다.

이처럼 북한의 文藝政策은 統合的이고 組織的이라는 특징이있고, 따라서 북한의 예술을 가리켜 ‘이데올로기 예술’, ‘목적예술’, ‘혁명 예술’로 표현하고있다.

특히 1970년대초 부터 金正日이 북한의 문예정책을 주도함으로써 民族異質化는 더욱 가속화되고 더욱 심화 되었다. 金正日은 오직 세습독재체제확립을 위한 思想的 政治的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 文藝政策을 이른바 主體確立, 革命傳統確立 및 唯一思想體系確立의 方向으로 몰아가고있다. 따라서 이에 조금이라도 背馳되는 사고방식, 감정및 언어양식, 행동양식 등은 反動文化로 규정된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있는 예술창작활동의 구체적 목표로서는 ① 당정책 구현 및 선전 찬양 ② 김일성 및 그 가계우상화 ③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④ 정치사상교양 ⑤ 노력동원 및 노동의욕 고취 등 5개 부문을 제시하고 있다.

가. 文藝活動

북한공산집단은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統制를 더욱 강화하기위하여 본래 각 分野別로 있었던 同盟組織을 통합 하며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1961. 3.2)을 결성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 統制를 담당하고 있는 「勞動黨 文化藝術部」는 이 「문예총」 조직을 통해서 組織的인 統制를 가하고 있다. 「문예총」은 中央組織과 직할시·도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산

하에 작가동맹, 기자동맹, 음악가동맹, 연주가동맹, 연극인동맹, 영화인동맹, 무용가동맹, 미술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9개 단체가 있다.

작가, 예술인들은 이와 같은 組織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勞動黨이 지시하는 작품을 창작해야하며, 각자의 특기와 예술적 개성을 살리는것 보다는 '집체창작'이라는 명분하에 활동을 제한하므로, 북한의 작가 예술인들은 일종의 政治·經濟的 과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전 선동대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공장, 기업소 및 協同團體에는 '예술소조'라는것이 있으며 이 小組는 각분야별로 조직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창작활동에 있어 지켜야할 몇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社會主義 寫實主義 창작법이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民族的 형식에 社會主義的 내용을 담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창작법"이라한다.²²⁾

다시말하면 "전형적 환경에서 전형적 성격을 역사적 구체성과 혁명적 발전속에 진실하게 묘사하되, 共產主義的인 긍정적 主人公을 주도적인 입장에 세워 그가 승리하는 과정을 形象化하는 창작법"이라고 규정짓고있다.²³⁾

둘째, 黨性, 階級性, 人民性的 구현이다.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의 文學 藝術은 절대로 革命的 利益과 黨의 路線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오직 黨의 노선과 政策에 철저하게 의거한 革命的 文學·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 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共產主義

22) 「북한문학예술사건」(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2), p.497.

23) 자유평론사, 「북한특이용어해설」, 1983, p.238.

的 革命精神으로 교양하는 黨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있다.”²⁴⁾

여기에서 말하는 階級性이란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인 문학, 예술은 반드시 어느한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것을 절대지지하고 옹호하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문학예술 작품은 예외 없이 계급적성격을 띠며 자기 階級의 利益을 옹호하는 예리한 사상적무기로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北韓共產主義者들이 주장하는 黨性이란 문학 예술이 철저히 계급성을 띠며, 黨性和 계급성을 서로 分離할수 없는 사이에 있음을 전제로한다. 그것은 바로 목적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강한 계급성을 黨性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셋째, 種子理論의 적용이다. 이 종자이론이란 김일성의 문예이론에 기초하여 金正日이 獨創적으로 제시한것이라고 宣傳 하고있다.

여기에서 種子란 작품에서의 주제와 소재를 결정하는 要素 즉 中心思想을 가리키며 그 중심사상이란 金日成主體思想, 黨政策과 路線,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말한다. 종전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이 종자론을 가미한것이 문학예술의 기본원칙이라하고, 심지어 「김일성주의의 실천적 美學」으로 표현하고있다. 그들은 革命思想의 核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더많은 씨앗을 生産한다는 발상에서 이 理論을 내놓고 있다.²⁵⁾

文藝作品 창작에서 主題別 비율은 1964년 11월 7일 문학, 예술부문 일꾼들 앞에서 연설한 金日成의 敎示에 따라 社會主義建設과 혁명투쟁에 관한것을 각각 5 : 5로, 그중 혁명투쟁에서는 北韓것을 4, 南韓것을 1로 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²⁶⁾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일성즉별정치 中心課題로 金正日의 권력세습체제의 확립문제가 대두되자 문학예술분야에서는 金日成과

24) 「김일성저작선집」 2권, 1968, p.576.

25)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1983, p.1084.

26) 「김일성저작선집」 4권, 1967, p.157.

그 족벌들을 偶像化하는 작품생산이 최우선과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金日成은 절대적 존재이기에 그의 形象化가 어느 한 작가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하여 集體創作을 강요하기에 이르러 소위 「4.15창작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을 主人公으로 하는 장편집 「불멸의역사」를 비롯한 偶像化 작품들이 量産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예사업에 金正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특히 1982년 金日成 70회 생일을 전후해서 많은 기념작품을 生産했다. 북한공산집단은 이러한 작품들을 ‘세계적명작’ 또는 ‘기념비적창작’이라고 극찬하며 金正日의 천재적 지도하에 성취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문예활동은 集團體制 지향의 內容과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표현 및 선전 선동 도구로서의 기능에 의하여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되며, 모든 작품은 黨의 統制 조정하에 계획되어 생산되고 있으므로 작품에 대한 批判이란 있을수 없으며 단지 특정인을 숙청, 제거시켜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을시에만 黨의 지령에 따른 비판이 있을뿐이다.

1) 文 學

북한의 文學은 순수문학의 의미를 벗어나 黨의 政策을 구현하며, 근로자들을 共產主義世界觀으로 무장시키는데 봉사해야 하므로 주제선택에서는 물론 소재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있다.

작품들의 素材를 보면 대부분 현실성과 革命性을 중시한 社會主義的인것을 담은 내용들이고, 金日成과 黨에 충직한 소위 영웅적인 인물들만을 묘사하고있으며, 革命的 낙관주의와 集團的 영웅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는 金日成의 혁명투쟁과 革命的 家系의 美化, 그리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창작되고 있는데, 「피바다」, 「어느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라는 장편소

설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꽃파는 처녀」는 이른바 항일투쟁시기에 金日成이 직접창작 했다는 작품을 그대로 장편 소설화한 것인데 이 소설을 “혁명적 문학예술이 지켜야 할 美學的 원칙들을 가르쳐 주는 참된 교과서”라고 선전하고 있다.

작년 7월15일에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주제로 한 전15권의 혁명 역사소설인 「불멸의 역사」를 창작완성했다고 선전하고 주민들에게 읽히고 있다.

2) 音樂

1950년 중반까지만 해도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등의 음악이 연주되었으나 그후부터는 金日成 찬미와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위한 선동수단으로 바뀌었으며, 근래에 와서는 거의 金日成과 그의 족벌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되어있다. 1977년 평양 문예출판사 발행「조선음악 600곡집」을 보면, 이 600곡 중에는 가곡 302곡, 가곡에서 나오는 아리아 190곡, 영화주제가 108곡 등인데, 이 중 가곡편만 분류해 봐도 302곡중 232곡이 金日成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음악의 내용은 대중에게 黨 政策을 주입시키기 위해 쉽게 理解할 수 있는 성악곡에 치중하여 국민가요식인 것이 많다. 그러나 대중은 성악곡인데 그것은 노래보다 사상이 담긴 가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歌劇(가무극)을 集體的으로 작사, 작곡, 안무하여 많이 공연하고 있다. 이른바 5대혁명가극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별」, 「금강산의 노래」 등이 모두 集體에 의한 작품들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연주되는 전통음악 장르는 주로 민요이며 그밖의 가야금 병창, 농악 등에 불과할 뿐이고 아악, 판소리, 산조, 종교음악, 잡가 등은 연주되지 않는다. 연주되고 있는 것이라 해도 전

통적 내용이 아니라 가사를 새로 만들어 부른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보편적인 악기는 아코데온과 기타인데 이는 각 농장·직장별 예술소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3) 舞 踊

북한 무용의 근간은 1946년에 월북한 최승희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1950년대에는 주로 고전무용 위주로 발전 했는데, 이는 黨의 문예정책인 “民族의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는 다는 것과 일치하여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주축으로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로 대두된 4대군사노선 등 革命을 위한 투쟁의식의 고취, 社會主義, 共產主義社會 建設을 위한 全人民的 생산활동의 강요, 赤化統一 의욕 고양 등의 內容을 담기에는 고전무용 형식이 맞지 않게 되었다. 예를 들면, 춤을 쏘는 동작, 삼질하는 동작 등이 고전무용의 우아한 율동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승희를 비롯한 고전무용전수자들은 숙청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分野에서의 전통문화 歪曲樣相을 보면, 비록 형태는 변형되어 고유의상을 모방하고, 민속무용의 형식을 취하여 전통적인 것이 일부 잔존되고 있기는 하나, 기본동작과 율동방법, 그리고 속도 등을 변질시켜 鬭爭的인 內容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 무용예술의 主流를 형성하고 있다.

그들의 대표적 가극인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 등에서 나타난 무용의 형식은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율동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웅장한 규모의 조직을 과시하는데 있다. 또한 그들은 群衆舞踊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黨이 요구하는 軍중문화운동에 기여 하도록 한다.

아직도 장고춤이나 부채춤은 해외공연과 외래인사들의 관람용으

로 일부 남아 있으며, '옹해야'는 社會主義建設을 위한 革命的 노동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4) 映畫, 演劇

영화, 연극을 '직관예술'이라고 하여 다른 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중요시하고 있으며 住民들의 政治思想 敎養手段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영화·연극내용은 대부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부정적 인물의 경우 解放前 소재로는 日本人과 地主, 解放이후에는 美國人이나 남한住民, 또는 보수적인 인텔리들이며, 긍정적 인물로는 金日成과 그에게 충성하는 혁명투사, 勞動者, 農民을 등장시키고 있다.

1960년대 천리마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영화연극도 대형화되었으며, 천리마운동의 전형과 그위에 勞動黨의 唯一思想體系와 革命傳統敎養을 체계화한 金日成神格化가 그내용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

1970년대에 특기할 것은 金正日의 權力세습과 관련하여 金日成家系의 血統美化를 위한 革命傳統的인 연극을 창작 공연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때에 두드러진 경향은 集體作이 量産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연극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金正日이 연극보다 가극이나 영화를 더 좋아하는 취향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극영화촬영소, 2.8극영화촬영소, 기록영화촬영소, 과학·교육영화촬영소 등이 있으며, 영화기계공장, 평양영화필름복제공장, 평양필름현상소 등 영화관계의 공장 및 영화과학연구기관과 영화대학 등이 있다.

그리고 혁명전통을 테마로한 대표적인 극영화로는 「유격대 5형제」(3부작), 「어느 지대장의 이야기」, 「14년째의 겨울」, 「젊은」, 「일편단심으로」, 「혁명가」, 「월미도」, 「군당책임서기」등이 있다.

5) 美術

북한의 美術은 동양화와 조각에 치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解放 이후 6·25까지는 초상화를 비롯한 선전벽화 등 共產主義 宣傳포스터류가 대부분이어서, 1945년 한해동안에 그려진 金日成 초상화만해도 9만여점이나 되었다.

195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는 월북한 작가들에 의해서 비교적 自然主義的인 방법의 풍경이나 화초, 또는 사람들의 생활상 등이 등장하고 고미술에 대한 소개가 빈번히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초에 걸쳐서는 김일성의 초상과 공장·기업소들, 전후복구 및 천리마운동 등과 같은 경제건설이 주제가 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金日成이 화면에 등장하는 비율은 전체작품의 20%정도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90% 이상의 작품에 金日成이 등장하여 美化되고 偶像化된것들로 일관하고 있다. 즉, 196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작가의 주관이나 個性이 일체배제된 集體化가 빈번히 등장하였으며, 목적화의 형식으로 전락하여, 양식상에서의 급격한 전통의 왜곡과 내용상 金日成의 偶像化가 오늘날 북한미술의 전반적 추세이다.

그리고 북한이 조각에 치중하는 것은 김일성 동상건립과 혁명전통 내용을 造形化해야 하기때문이다. 또한 북한회화의 특징은 대작위주, 판화위주의 미술이 주류인바, 그 이유는 화가 개인보다 집단작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言論活動

1) 北韓 言論의 性格 및 특징

북한 언론의 성격은 사상성, 당성, 계급성, 대중성으로 집약될 수 있다.

社會主義國家에서의 言論의 사상성이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창조적 적용’이란 형태로 표출된다.

특히 신문의 지면내용은 저널리스틱한 수단에 의한 계급적 利害의 쟁취를 中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黨性은 현실을 보는데 있어 계급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노동자계급의 利害를 수호하려는 입장에서 표시된다. 따라서 “黨의 路線과 政策을 선정하는데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의 黨性을 띤 신문이란 모든 사건과 사회현상을 黨政策의 시각과 계급적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처럼 共產主義에 있어서의 思想性和 黨的 성격은 실제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봉사한다는 계급의식적 성격과 같은 뜻으로 통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계급성을 창조한 현실의 파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論에 따르면 “모든 신문은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특정 이데올로기의 소산으로 특정한 당파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사회의 신문은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임무를 띠게 되고, 신문의 대중적 성격은 신문의 대중적인 보급보다도 오히려 대중이 신문에 협력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北韓言論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金日成體制 유지의 기본적 메카니즘으로 미루어 보아 人間の 基本權이 원초적으로 유린되고 박탈당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표현의 自由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

② 북한도 憲法 第53條에서 “공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및 시위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표현의 自由가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실제로는 동법 제4조에는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으며, 제10조에는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라고하여 제한성을 분명히 하고있다.

③ 金日成은 “신문, 잡지, 서적같은 출판물이야말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하는 革命課業 실천을 위해 노동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선동의 도구”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黨의 방침을 떠난 言論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④ 북한은 매스콤을 완전독점 함으로써 체제유지에 危害가 되는 情報源을 사전에 봉쇄 차단하고 있다.

⑤ 북한의 대중매체는 정보의 전달과 오락·교양수단으로서가 아니라 黨과 政權機關이 住民을 통제하고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언론기관이란 黨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출판, 보도물들이 뉴스의 전달자나 정보의 교류수단 내지 오락수단으로서가 아닌 黨과 政權에 의한 북한주민의 지도, 통제와 金日成思想 교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같은 社會主義國家에서는 보도, 출판 등 순수한 의미에서의 言論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 할 수도 없다.

2) 報道, 出版 實相

가) 新聞

中央에는 勞動黨의 기관지로서 「勞動新聞(150萬부), 정무원의 기관지로서 「民主朝鮮」, 「사로청」기관지인 「勞動青年」등이 있으며, 그외에도 「새날」, 「소년신문」, 「통일신보」등이 있고, 정무원 각 위원회와 部에서 발간하는 「교통신문」, 「전설신문」, 「교원신문」과 같은 기관지도 있다. 그리고 外國語新聞으로는 週刊인 「The Pyongyang Times」가 英文과 佛文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地方紙로는 各市·道 新聞이 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문들은 뉴스의 전달자나 교양과 오락의 수단이 아니라 “黨의 路線과 政策을 옹호 관철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集團의 組織者, 宣傳者, 黨員들과 근로자들의 벗이며 대변자”임

을 자처함으로서 “社會主義, 共產主義建設의 물질적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대중동원 및 사상교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나) 通 信

통신기관으로서는 政務院에 직속된 북한유일의 日刊通信인 「朝鮮中央通信社」(北韓, 南韓, 國際뉴스)가 사진통신외에 英語, 러시아語, 프랑스語, 스페인語 등으로 통신을 내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各國語로 된 통신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지를 향해 송신하고 있다.²⁸⁾

北韓共產集團은 “조선중앙통신사가 북한을 대변하는 중요한 언론 기관이며, 통신은 黨과 政府의 노선과 對外政策을 국내외에 널리 보도 선전하는 동시에 국제적 범위에서 일어나는 주요사변들과 국제생활들을 國內에 소개, 선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통신보도의 정치사상성과, 전투성, 신속정확성을 보장하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 放 送

앞에서 언급한바와같이 放送의 임무도 勞動黨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서 黨의 지시통제를 받고있으나, 형식상 지도기구인 정무원의 「중앙방송위원회」산하에 각 시·도 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郡放送委員會가 있으며, 그하부기관으로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방송은 라디오의 경우 북한의 정규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대외, 대남병용인 「평양방송」, 대남흑색방송인 「민민전 방송」(구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 및 제3방송(유선방송)이있으며 이들은 黨의 선전선동부와 문화예술부의 지도를 받고있다.

TV 방송으로는 「조선중앙 TV」, 「개성 TV」, 「만수대 TV」가 있다.

28) 「조선개관」, p.190.

중앙텔레비죤방송은 대내선전용으로 칼라와 흑백겸용이며, 개성 텔레비죤방송은 순전히 대남용이고, 만수대텔레비죤방송은 칼라로 예술공연 및 국내외 영화를 위주로 일요일만 방영하여 시청율이 높다.

그리고 중앙텔레비죤방송과 만수대텔레비죤방송은 유럽권에서 쓰고있는 PAL 식인데, 개성텔레비죤방송은 대남방송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NTSC 식을 사용하고 있다.²⁹⁾

라) 出 版

출판업도 黨의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로서 金日成의 敎示에 따라서 그 사업방향을 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수 있는 것처럼, 革命組織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였다.

주요출판기관으로서는 사상혁명과 관련된 도서출판을 주로하는 「조선로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등과 과학지식 보급을 위한 「사회과학출판사」, 「과학원출판사」와 문예작품을 취급하는 「문예출판사」등이 있으며, 또한 교육도서를 출판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외국문교육도서출판사」가 있다.

그리고 外國文綜合出版社는 金日成의 저작과 혁명전통관계서적, 「조선개관」, 「평양개관」등 北韓을 선전하는 각종도서와 잡지를 外國語로 出版하고 있다.³⁰⁾

북한에서 출판되는 잡지로는 勞動黨의 이론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조선문학」 「조선무역」 「대중과학」 「체육」 등 각 분야별로 30여종이 있으며, 최근에는 國際問題 시사전문 월간지인 「국제생활」을 창간했다. 그리고 주간지 「평양타임」지는 英語와 佛語로 발행하고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북한의 실상」, 1986. p.211

30) 「조선개관」, p.190.

있으며, 「오늘의 조선」, 「천리마」, 「조선무역」 등 8種은 外國語로 번역, 海外에 배포하고 있다.

7. 結 言

한나라의 教育政策은 그 나라의 未來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個個人的 소질을 개발하고 다양한 능력을 조화롭게 活用하는 것은 個人的 발전 뿐만아니라 國家發展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공산집단은 소위 “共産主義的 새人間”을 육성한다는 教育目標 아래 個人的 소질, 自我를 실현하는 教育一般의 目的과는 달리 획일적인 政治思想教育에 치중함으로써 ① 맹종형의 人間 ② 어떤 사물이나 社會現象을 보고, 黨이 지시한 대로 의미밖에 얻어 낼 줄모르는 人間 ③ 생명력이 고갈된 共産主義思想, 그리고 金日成 偶像化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 껍질속에서 헤어날줄 모르는 人間 ④ 人間 상호관계를 협력과 협조의 관계로 보지 않고 투쟁으로만 보는 호전적이고 鬪爭的인 人間을 育成해 왔다.

그리고 더우기 그들은 소위 ‘군중문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문학, 예술, 출판, 보도활동을 통해 政治思想教養을 강화, 個人的 사고, 감정, 행동양식을 철저히 규제 함으로써 감정이 메마르고 오직 金日成父子 독재체제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人間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육이나 문예활동을 통한 인위적인 사상혁명은 결국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北韓共産集團이 반동사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利己主義, 個人主義, 그리고 부르주아思想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人間本性的 발로 인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

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人間本性의 발로는 어떠한 인위적인 手段이나 方法으로써도 이를 완벽하게 조절시킬수는 없다.

지난 40여년간 사상혁명을 통한 人間改造에 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北韓共產集團 스스로가 북한내에 ‘혁명의 배신자’ ‘혁명의 변절자’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더우기 최근 中·蘇를 비롯한 공산권의 改革·開放정책과, 合營推進을 위한 北韓社會의 부분적인 開放으로 인한 外部思潮의 침습은 그동안 인위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온 사상혁명의 한계점을 들어 내주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공산집단은 “우리식대로 살자”는 캠페인을 벌여 思想統制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일을 계속하는가 하는문제, 이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하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思想革命을 강조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한 民族共同體의 실마리는 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北 韓 의 軍 事

柳 仁 澤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韓半島 軍事問題는 남북한 葛藤構造의 중심부에 위치한 核心的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현재 약 150萬의 正規軍이 休戰線을 경계로하여 對峙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軍事密度를 유지하면서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奇異한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군사밀도」, 이 사실 자체는 바로 緊張과 恒時的 戰爭의 근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平和定着에 대한 制度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과거 同族相殘의 비극까지 체험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韓半島 군사문제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다음 두가지 點에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북한군의 再侵能力과 意志問題이며, 또 하나는 앞으로 예상되는 南北韓 軍縮協商과 관련된 南北韓 軍事力의 要素別 均衡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상과 같은 의문점을 분석·평가하고 展望을 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실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本稿는 북한의 군사실태를 事實的으로 정리하는 것을 一次的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部門—「북한군의 形成과 性格」, 「軍事思想과 戰略」, 「軍事組織과 制度」, 「軍事能力」, 「對外軍事協力」—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 군사력 실태를 評價하는 데는 어쩔수 없는 內在的 한계가 있다는 點을 먼저 밝혀둔다.

첫째, 어느 나라나 自國의 軍事力에 관한 精確한 情報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정보자료에 일부 偏差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둘째는 評價의 傾向性 문제이다. 例컨대 最新 尖端裝備과 구식장비를 산술적으로 同一線上에 놓은 방식이라든지, 불확실할 때는 일단 상대측을 上向評價 해두는 것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셋째는 평가자체의 어려움, 例를 든다면 裝備나 兵力數 등 Hardware에 속하는 것은 어느정도 비교가 가능하지만 士氣, 運用管理面 등 Software에 속하는 것들의 비교는 현실적으로 거의 不可能하다는 點이다.¹⁾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本稿에서는 일단 未解決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객관성과 정확성을 確保·維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附言해 두고자한다.

2. 軍의 形成과 性格

가. 形成過程

이른바 「朝鮮人民軍」은 북한이 政權樹立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도 전인 1948년 2월 8일에 창설되었다.²⁾

人民軍의 창설작업은 해방직후부터 <建黨·建國·建軍>이라는 3大課題아래 추진 되었는데, 1945년 10월21일 북한 地上軍의 前身인 保安隊가 소련군 제25司令部(北韓駐屯司令部)의 지도하에 약 2,000名 규모로 조직됨으로써 비롯되었다.

蘇聯軍司令部는 이보다 앞서 1945년 10월12일 “북한지역내에 있는 모든 武裝隊를 해산시킬것, 모든 무기, 탄약, 군용물자들을 軍警務司令部에 바칠것, 임시 도위원회들은 소련군사령부와의 협의하에 배

1) 詳細한 論議는 John.M.Collins and Anthony.H.Cordesman, *Imbalance of power* (國防大學院 安保問題研究所, 譯 1980)pp.14~27 參照.

2) “조선인민군창건 열병식에서의 김일성 연설(1948.2.8),” 「김일성선집」 2권(1964) pp.73~76.

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해방직후 治安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治安隊」, 「自衛隊」등 기왕의 武裝隊는 해산되고 북한의 각지역에 새로 「보안대」가 조직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人民軍」의 母體가 되었다.

이어서 1946년1월에는 各道에 「鐵道保安隊」가 창설되었고, 군사정치간부의 양성을 위하여 「平壤學院」이 2월8일 설치되었다.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1946년8월15일에는 각지역에 조직된 保安隊를 통합, 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창설하고 价川, 羅南, 平壤에 「보안간부훈련소」를, 江西에 「保安幹部學校」를 설치하였다. 1946년9월에는 「보안간부훈련대대부」를 「人民集團軍總司令部」로 개칭하고, 1947년부터는 소련의 군사원조를 받아 신형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1948년2월4일에는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내에 「民族保衛局」을 신설하였고, 동년 2월8일에 「人民集團軍」을 「朝鮮人民軍」으로 개칭하고 정규군으로 창설을 선포하였다.

北韓의 海軍은 1946년7월에 「水上保安隊司令部」를 元山에 창설한 데서 비롯되었다. 1946년12월에는 「水上保安隊」를 「海岸警備隊」로 개칭함과 동시에 元山과 南浦의 水上保安隊를 「警備衛守司令部」로 개칭하고 淸津에 「衛守司令部」를 신설하였고, 1947년 6월에는 元山에 「海岸警備隊幹部學校」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뒤에 「海軍軍官學校」가 되었다. 그후 1948년9월 북한정권의 수립으로 해안경비대는 「海軍總司令部」로 개칭, 북한인민군의 海軍이 되었다.

空軍은 1945년10월25일에 민간기구로 발족한 「新義州航空隊」가 그 효시이다. 1947년8월20일에는 소련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新義州航空隊출신(약300명)을 중심으로 飛行隊를 창설하고, 1948년 朝鮮人民軍 창설과 함께 航空聯隊로 증편함으로써 正規空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상 人民軍의 創軍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이 컸었다는것을 유념할 필요가있다. 1948년12월말 소련군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북한의 「人民軍」은 소련군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조직, 훈련등이 실

시되었다고 볼수 있고, 따라서 「人民軍」의 政治的·思想的·軍事的 起源은 소련군의 軍事思想과 軍事制度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약 1萬名의 북한인들이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소련에서 군사훈련을 받았고,³⁾ 소련은 150대의 T-34戰車, 曲射砲, 自走砲, 迫擊砲, 小火器 및 彈藥을 포함한 모든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및 약 3千名으로⁴⁾ 추산되는 소련의 軍事顧問官과 기술자들이 1950년6월以前에 人民軍에 所屬되어 있었다⁵⁾는 사실등은 이를 뒷받침 한다.

나. 軍의 性格

북한은 스스로 그들 軍의 性格을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라고 規定짓고 있다. 黨規約 제7장 제46조에서 “軍은 黨의 革命的 武裝力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다음 제47조에서 “군대내의 各급단위에 黨組織을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中央委員會 直屬機關인 軍黨委員會가 이를 관장하여 사업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社會主義 憲法 제14조는 “武裝力の 사명을 勞動者, 農民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社會주의 제도와 혁명의 戰取物을 보위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軍은 黨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을 뿐 아니라 黨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金日成도 제5차 로동당大會에서 “人民軍은 오로지 黨의 지도하에서만 不敗의 革命武力으로 강화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숭고한 사명을 다할

3)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part II, The Society (Berkeley, Los Angeles, and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p. 926.

4)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epartment of the Army, 1961), p. 7.

5) 「北韓軍의 創軍과 發展」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編) 『韓國戰爭史 研究』(國防部, 1966) pp. 17~42.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軍이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黨軍的·革命軍的 性格」은 軍幹部들의 言動이나 간행물의 論說등에서도 누누히 力說되고 있다. 북한軍創建 50週 紀念大會(82.4)보고에서, “지난 기간 「黨의 軍隊」 「革命的 軍隊」로서의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한 장병들을 축하한다” 운운한 것이나, 「근로자」(82.4) 논설에서 朝鮮人民軍은 主體의 革命偉業을 保衛하는 黨의 軍隊, 혁명의 軍隊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例의 一部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黨軍的·革命軍的 성격은 金日成의 唯一體制와 연결되어 「金日成의 軍隊」化 하였다.⁶⁾ 人民軍은 수령이 조직해서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킨 黨의 혁명적 무장력이며 「金日成의 軍隊」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⁷⁾

지난 1977년까지 2월8일을 人民軍創建日로 정해 기념하던 것을, 1978년부터는 4월25일로 변경하여 기념하고 있는 것도, 金日成이 1932년에 抗日遊擊隊를 창설했다는 4월25일로 변경함으로써 人民軍의 성격을 「항일빨치산」 투쟁전통을 연원으로 하는 「金日成軍隊」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企圖라고 볼 수 있다.

북한군 創建紀念大會(83.4.25)報告에서도 “우리 人民軍隊는 「金日成의 軍隊」 「黨의 軍隊」로서 더할 바 없이 強化되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金日成은 로동당의 總秘書겸 黨軍事委員會 委員長으로서 그리고 政權의 主席인 동시에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서 軍事정책의 指導와 일체의 武力을 장악·통솔하고 있다.⁸⁾

또한 金日成—金正日 後繼體制的 구축과 관련하여 人民軍의 강

6) 金英鎮, “軍部の 政治的 役割” 韓國共產黨研究協議會 研究論叢 第2輯 「北韓의 오늘과 내일」, (法文社, 1982) p.96.

7) “인민군창건 47돐기념보고대회 徐哲 演說文 (79.4.24)”, 로동신문, 79.4.25字.

8) 北韓憲法 93條.

화·발전을 金正日의 업적으로 내세우기도 하는바, 1986년4월 人民軍 창설을 기념한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金正日이 군부를 장악·지도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한편 金正日에 대한 軍部の 충성을 다짐했다.

이상과 같은 「黨의 軍隊」 「革命의 軍隊」 「金日成의 軍隊」로서의 北韓 人民軍의 성격은 軍事制度나 軍事政策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 軍事思想 · 政策 · 戰略

가. 軍事思想

1) 共產主義 軍事思想

階級鬭爭에 의한 全世界의 공산화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전통적 군사론에 따르면 戰爭과 革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革命」과 「戰爭」혹은 革命事業추진과 군사문제는 마치 兩位一體論과 같이 생각되어 온 것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전통적 군사론이다.⁹⁾

마르크스가 「武裝革命」理論의 사상적·철학적 기초를 다져 놓았다면, 엔겔스는 혁명과 관련되는 군사문제 일반을 보다 폭넓고 깊게 통찰하였다. 특히 엔겔스는 非正規戰으로서의 「遊擊戰論」(계릴라戰) 및 「人民戰爭」의 마르크스主義的 기초개념을 정립하였으며, 「內亂」에 있어서 무장 노동자의 계급의식발로(계급투쟁)를 고취하고 체제화시키는 군사사상가로서의 선구적 업적을 남겼다.

이상과 같이 마르크스·엔겔스에 의하여 定礎된 공산주의 군사사

9) 尹炳益, 「북한의 軍事實態」(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副教材, 1987) p.20

상은 「暴力革命論」을 바탕으로 한 레닌의 실천론적 전쟁관으로 계승·발전되었다. 그리고 레닌은 資本主義의 최후단계로서의 帝國主義戰爭과 革命戰爭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을 帝國主義戰爭, 발전된 자본주의시대의 전쟁이며 資本主義 終末時代의 전쟁 및 征服戰爭으로 규정하고, 歷史發展속의 사회주의 「테제」로서 제국주의전쟁을 사회주의 혁명실천을 위한 「內戰」으로 변전시키는 문제를 제기하여, 자본주의를 파괴시키려면 많은 「內戰」(혁명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하였다.

말하자면 레닌에 있어서의 일관된 命題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戰爭不可避論」이었으며 따라서 레닌은 “군대는 政治로부터 「中立」일 수 없으며, 사회주의군대는 곧 혁명무장력”이라는 등식관계를 정립하였다. 그런가 하면 레닌은 마르크스主義者들의 독특한 투쟁형태로서 「빨치산戰爭」형태를 창도해 내기도 하였다.

한편 군사전략가인 동시에 특히 제2차 세계대전기간을 통하여서는 政治·軍事指導者로서의 업적을 남긴 스탈린의 군사사상을 이해하려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政敵으로 몰려 죽은 트로츠키의 군사사상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그는 1918년의 소련 「赤軍」 창군을 뒷받침한 군사이론상의 주도 인물이기 때문이다. 1917년3월 러시아 共產黨 제8차大會에서 채택된 黨 最高軍事會議議長 트로츠키의 「創軍테제」와 트로츠키의 論文 「게릴라戰과 正規戰」(1919년7월)은 이후의 스탈린時代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된 社會主義軍隊 一般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즉 프롤레타리아혁명시기는 「階級的軍隊」로서의 「勞動者와 貧農의 軍隊」건설을 전제로 한 계급적인 民兵體制 確立을 행동강령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후 스탈린은 안으로 一國社會主義建設의 발판을 굳히면서 여세를 점차 國際共產主義運動으로 돌리는 한편 黨軍性과 階級性이 강한 「勞農赤軍」의 확장을 계속한다. 그러나 제2차 世界大戰中 獨逸軍의 전격전 앞에 맥을 못추자 스탈린은 혁명성을 중시하던 「勞農赤

軍」을 「蘇聯軍」으로 개편하고, 다른 한편 國際共產主義鬭爭體인 「코민테른」을 해체시키고 美·英 資本主義國家軍과 이념을 초월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한다.

그리고 核미사일時代의 도래에 따라 흐루시초프는 1956년 제20차 黨大會에서 「平和共存路線」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이는 군사적으로 전쟁불가피성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戰爭觀의 완화경향이라고 하여 현대적 마르크스·레닌主義 戰爭觀이란 표현도 등장하고 있으나, 과연 共產主義的 戰爭觀이 수정·변화된 것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소련은 그 시기를 前後해서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解放戰爭」 「革命戰爭」을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不正義의 戰爭」으로서의 「征服戰爭」과 「正義의 戰爭」으로서의 「解放戰爭」이란 레닌의 二元論的 共產主義 戰爭觀이 면면이 계승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¹⁰⁾

한편 毛澤東의 軍事思想은 마르크스·레닌·스탈린 등 공산주의의 전통적 군사사상의 기반위에 특유의 「中國的 모델」로서의 「人民戰爭」유형을 강조한 것이다. 毛澤東은 階級間, 民族間, 國家間 그리고 政治集團間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最高의 투쟁형태로서 전쟁을 규정하면서, 政治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政治라고 정치와 전쟁의 상관관계를 갈파하였다. 그리고 장구한 항일전쟁의 전략·전술을 바탕으로 「持久戰論」을 전개하면서, 「精神戰力」을 물질무기보다 우위에 둬으로써 「唯武器論」을 배제하였다. 요컨대 毛澤東 軍事思想의 정수는 「人民戰爭論」이다.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노동자·농민계급을 인민의 개념으로 집약시켜 「鬭爭偉力의 가장 깊은 根源은 民衆속에 있음」을 통찰하고 계급투쟁, 중국의 社會主義革命 및 人民

10) 위의 책 p.24.

政權樹立 그리고 民族解放의 쟁취를 위한 무력항쟁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인민전쟁방식을 취하고 이에 연한 전략전술을 실천하는 것이 毛澤東의 「人民戰爭論」이다.

2) 金日成의 軍事思想

金日成은 1930년대 주로 東滿地區에서 中共黨이 조직한 抗日遊擊隊의 한 간부 노릇을 하였고, 1941년 日本關東軍의 대토벌작전에 쫓겨 入蘇한 후 소련군에 입대, 8·15해방과 함께 尉官으로 북한땅에 들어와 집권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원칙을 朝鮮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면서 혁명의 이름을 빌어 완전한 自己獨裁體制를 형성하고 이른바 「金日成主體思想」 「金日成主義」를 주장하면서 특히 “主體思想의 指導理念으로 국방에 있어서의 自衛”를 내세우는 한편 「抗日빨치산」 투쟁경험을 金科玉條視하고 있으나 思想다운 군사사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다만 공산주의자로서 蘇聯및 毛澤東의 군사사상을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

金日成은 1948년 2월 8일 創軍紀念式典의 연설을 통하여 “人民軍은 소련군을 본받으라”고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人民軍」의 編制規範이 모두 소련군의 복사판이다. 金日成은 소련의 對極東 軍事戰略에 따라 6·25南侵戰爭을 일으켰으며, 6월 26일 아침 8시, 그들의 軍事行動이 「解放戰爭」임을 성명으로 공식화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金日成이 주장하고 있는 “南朝鮮人民에 의한 南朝鮮革命論”은 기본적으로 「人民戰爭論」 유형의 毛澤東 軍事思想의 모방이다. 이것은 對南軍事行動의 명분을 찾기 위한 요인으로 될수도 있다.

오늘날 金日成은 「抗日빨치산」 경험을 최고의 經典으로 내세워 신화적인 軍事思潮를 조작하면서 단독전 개념을 세워가고 있다. 金日

11) 위의 책 p.26.

成은 對蘇軍事協力強化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가면서 現代戰과 革命戰爭,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유기적 배합을 통하여 이른바 “南朝鮮人民의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군사행동을 감행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軍事政策

1) 國防自衛政策

北韓은 軍事面에서 소련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國防自衛政策」이다.

金日成은 1950년 12월 21~23일 慈江道 滿浦 別午里에서 개최된 黨中央委 제2기 제3차 全員會議에서 「現情勢와 當面課題」라는 보고를 하면서 ①兵力補充의 곤란 ②지역단위 防禦體制의 불비 ③軍需支援體制의 미비 ④戰爭指導能力의 불충분 ⑤작전수행능력의 부족 등을 열거하여 패전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이어 1962년 「쿠바事態」에서 蘇聯의 무능과 「中·印國境紛爭」에서 「中·蘇紛爭」으로 공산권의 분열을 목도한 북한은 1962년 12월 黨中央委員會 第4期 第5次 全員會議에서 「造成된 情勢와 관련된 國防力 강화문제」를 토론하고 “人民經濟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 원칙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군사비를 대폭 증액시켜 우선 3개월간의 戰爭持續을 감당할 彈藥·油類 및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하였으며 무기의 자체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전의 中蘇 軍事敎理의 모방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地形的 특수성과 6·25戰爭 敎訓을 중시하는 독자적인 軍事敎理의 개발도 시도하였다.

金日成主義 原理 第8章 「自衛的 國防建設」에는 自衛路線의 본질을 “自力更生の 革命精神을 發揚하여 자체의 革命武力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4大軍事路線

북한의 이른바 國防自衛政策의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된 노선이 4大軍事路線이다.

金日成主義 原理 第8章 「自衛的 國防建設」에 의하면 “이 군사노선이야말로 金日成이 제시한 全人民的 軍事政策으로서 이는 防禦에서 뿐만 아니라 攻擊에서, 前方에서 뿐 아니라 後方에서, 땅에서 뿐 아니라 하늘과 바다에서 侵略者들을 결정적으로 소탕하고 자체의 힘으로 祖國을 믿음직하게 保衛할 수 있는 가장 偉大한 防衛體系”라고 호언하고 있다.

또한 金日成은 勞動黨 5次全黨大會 개회사에서 “黨의 自衛的 軍事路線을 철저히 관철하여 全人民的 · 全國家的 방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온 나라를 難攻不落의 要塞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우리의 防衛力을 不敗의 것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黨의 軍事路線에 따라 人民軍隊에서는 全軍 幹部化와 全軍 現代化방침을 계속 관철하며 人民들은 全人民 武裝化와 전국 요새화 방침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金正日도 그의 論文「主體思想에 대하여」에서 “국방에서 自衛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全人民的 全國家的 방위체계를 세워야 한다. 全人民的 全國家的 방위체계를 세우자면 全軍을 幹部化하고 현대화하여야 한다. 全軍을 간부화하여야 軍隊의 힘을 強化할 뿐 아니라 일단 有事時에 필요한 指揮力量을 보강하여 군대를 몇배로 늘일 수 있다. 그리고 全軍을 現代化 하여 政治思想的 우월성에 現代的 技術을 통합하여야 革命軍隊를 참말로 무적의 군대로 만들 수 있다. 全人民的 全國家的 防衛體系를 세우자면 또한 全民을 武裝시키고 全國을 要塞化하여야 한다. 全民을 무장시키고 전국을 요새화하여야 全體人民의 힘을 발동하여 敵들이 어디로 덤벼들던지 제때에 철저히 섬멸할 수 있으며 帝國主義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믿음직하게 保衛할

수 있다」고 言及함으로써 4大 군사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가) 全軍의 幹部化

人民軍의 간부화 노선은 全體人民軍을 철저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여 主體의 精髓分子로 육성하고 모든 人民軍을 1等級 높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목표는 隊員(戰士, 上等兵)은 副分隊長과 分隊長 직무를, 부분대장은 分隊長·副小隊長 직무를, 소대장은 副中隊長·中隊長 직무를, 중대장은 副大隊長·大隊長 직무를, 대대장은 副聯隊長·聯隊長 직무를, 參謀는 直屬上官의 임무수행 能力을 배양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推進實態는 講習·實習 등으로 교육시키고, 「判定事業」時 能力測定을 점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個人能力에 따라 수준도달이 相異한것으로 보인다.

나) 全人民의 武裝化

全人民武裝化 노선은 戰時 전인민을 戰力化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全人民 武裝化에 대하여 “우리黨이 내놓은 전인민 무장화 방침의 本質은 全體人民을 수령의 革命思想으로 정신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그들이 軍事를 성실히 배우고 군사훈련에 참가하여… 일단 유사시에는 침략자들을 소멸시키고 전투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생산단위에서 이탈하지 않고 軍事에 참가하는 自願의 군사조직인 「勞農赤衛隊」와 「青年近衛隊」를 조직하는 全民 武裝化의 威力한 방도는 일단 유사시에 정규병력을 급속히 확대할 수 있고 敵들의 어떠한 武力侵攻도 자체의 힘으로 격파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은 1970년 11월2일 제5차 黨大會 總和報告에서 이 路線이 완벽하게 달성되었다고 호언하였다.

다) 全國土의 要塞化

全國土의 要塞化 노선은 立體戰 수행의 대비책으로 물샐틈 없는 전투 지탱點을 마련하여 人員·機材·物資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

다. 즉 자연지리적 조건에 알맞게 북한 全域을 방위시설화하고 군사적 요새지대로 만들며, 6·25의 교훈에 따라 空中攻擊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생산시설 역시 최대한으로 地下化하는 계획이다. 북한은 이 路線의 강행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는 물론 主陣地 및 主要戰略地帶를 坑道化하였으며 航空 및 海軍基地를 地下化했고, 兵器工場의 적절한 소산과 地下施設의 구축등 문자 그대로 북한 全域을 요새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艱苦작업의 숙련도와 餘力을 戰線으로 옮겨와서 前方 땅굴의 굴착에 까지 활용했다.

現在 後方地域도 軍需産業 시설의 地下施設化를 완성하여 戰時에 필요한 전투물자 지원시설을 갖추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地域別 陣地 종류는 인원·차량·식량대피소, 道路火點, 高射銃火點 등이 있고 郡單位 戰鬪要衝地化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라) 全軍의 現代化

全軍의 現代化 노선은 砲火力 曲射化 및 機動力 確保, 狙擊武器 輕量化 및 威力化로 大量殺傷武器 등 현대적무기의 장비를 갖춘다는 등의 방침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치사상의 우월성에 군사기술을 結合시키는 것이며 黨의 軍事政策에 부합하도록 독창적인 戰法을 개발하고, 軍事科學을 고도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현대식 무기와 戰鬪技術 機材로 무장하되 戰區의 특징과 체질에 적합하도록 갖추며, 비단 현대식 무기에만 집념하지 않고 이미 보유중인 一般武器와 전투현장에서 臨機應變으로 급조하는 간이무기의 사용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 노선의 꾸준한 추진으로 기갑 機械化 및 渡河裝備를 현대화했고 核投發手段의 보유, 砲兵火力의 自走化 및 射程距離의 극대화에도 성과를 올렸으며, 誘導彈, 高速艇과 잠수함 및 高性能 항공기를 도입하였고 輕量武器를 장비한 特殊軍團을 창설하면서 輕步兵 특수부대를 크게 증강시켰다.

다. 軍事戰略

북한의 軍事戰略은 金日成의 抗日遊擊투쟁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해방이후 소련의 지도와 원조로 人民軍을 창설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스탈린·毛澤東 등의 軍事思想을 教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6·25南侵 이전까지는 전적으로 소련군의 전략전술을 그대로 모방하였으며, 戰爭의 과정에서는 소련의 電擊戰戰略과 毛澤東의 유격전사상을 병행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였다.

韓國戰爭은 金日成으로 하여금 군사전략을 再定立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휴전이후 무장계릴라 南派등의 직접경험과 쿠바사태, 越南戰爭, 中東戰爭 등의 간접경험을 교훈삼아 소위 金日成의 「主體戰略」이라는 것을 수립하였다. 金日成主體戰略이란 現代戰과 革命戰의 合法則性으로 速攻機動攻勢戰略과 包圍殲滅戰略으로 구성된 소련식 군사전략과 大部隊 遊擊戰略인 毛澤東式 군사전략의 부분적 융합과 수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金日成主體戰略下的 북한의 당면군사전략은 다음과 같다.

1) 先制奇襲戰略

선제기습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戰略的 기습선제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에 의한 戰術的 기습선제공격등 다양한 개념이다.

북한은 최근 裝甲師團과 車輛化·機械化師團을 旅團으로 개편하고 보병여단을 차량화하였으며, 機甲能力을 강화하고 戰車를 輕量化하는 등 「武裝의 輕量化 + 走力」에 의한 고도의 특수전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DMZ의 바로 북쪽에 軍隊·砲·彈藥및 기타 보급품을 집중시켜 왔고 北韓軍의 약

66%는 DMZ의 몇 마일內에 있으며, 人民軍은 休戰線 直後方に 있는 동굴 陣地에 砲를 설치해 놓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그전투기를 위한 견고한 비행장을 건설해 왔다. 機甲部隊들은 DMZ에서 100마일 以內的 後方に 배치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南으로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¹²⁾

一般的 관측으로는 북한은 對南軍事力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軍事潛在力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북한 전체인구의 1/2, 북한 GNP의 2배에 달하는 京仁地域을 조기 탈취하려고 획책할 것이며¹³⁾ 攻擊 機動裝備의 集中 및 전진배치 동향 등으로 보아 선제기습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습선제공격으로 유리한 戰略的 狀況을 일단 달성하여 놓고 政治協商을 제의함으로써 韓國友邦國(특히 美國)의 지원 구실을 봉쇄시키려는 方策, 즉 「先 軍事的 占領, 後 政治的 協商」戰略概念을 구상하고 있다는 推論 導出이 가능한 것이다.

2) 速戰速決戰略

속전속결전략의 핵심은 機動力인데, 北韓은 軍의 현대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航空機 · 미사일 · 戰車 등 정규군의 기동능력을 대폭 증강시키고 있다.

속전속결전략은 「短期決戰」 또는 「速度戰」으로 별칭되고 있으며, 한때 金日成은 「100日戰爭 10日戰鬪 및 3日占領」 등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전쟁준비 완료를 호언하기도 했다. 한국의 심장지대인 京仁地域의 戰略的 중요성과 地理的 근접성은 이 戰略 채용을 합리화시키는 변함없는 요인이 될 것이며, 특히 4차에 걸친 이스라엘과 아랍戰爭, 포클랜드 분쟁 등을 통해서 短期決戰의 필연성은 부각되고 있다.

12) U.S. Joint Chiefs of Staff, United States Military Posture for 1983, January 1982, p.44.

13) 拙稿, “金正日體制的 軍事政策展望” 『北韓學報』 第8輯(北韓研究所, 1985), p.252.

일반적으로 현대전은 고도의 精密武器와 그 파괴력에 의하여 初戰에 敵의 主戰力을 격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短期決戰의 양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북한의 경우는 강력한 美軍과의 戰爭이 불가능하므로 美軍과의 戰爭을 피하기 위한 戰術로서 短期決戰을 구상하게 되고 特殊戰을 중심으로 非正規戰을 극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3) 總力戰戰略

북한의 總力戰戰略은 軍事와 政治戰의 結合, 군사와 경제의 결합, 군사와 외교전의 결합, 군사와 심리전의 결합 등으로 집약된다.

總力戰 개념은 산업혁명이후 戰爭의 國民化와 産業化 추세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兩次 世界大戰을 통해서 전세계가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現代戰은 그 규모·기간·참가범위를 막론하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總力戰 형태로 전개될 것인바, 북한만이 이 전략을 독점수행한다는 개념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군사전략의 보편적인 패턴이라 할 것이다.

4) 配合戰略

金日成은 6·25戰爭에서 얻은 경험과 戰後의 무장간첩 南派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蘇聯式 軍事戰略에다 毛澤東式 遊擊戰略을 배합하여 소위 「現代戰 + 遊擊戰」 「正規戰 + 非正規戰」 개념의 배합 전략을 定立하여 이를 「韓國 실정에 맞는 主體的 戰略으로 概念化」 하였다. 人民軍 創建 50돐을 맞아 人民武力部長 吳振宇는 보고를 통해 “정규전과 유격전, 산악전과 야간전, 적후방 넓은 지역에서의 제2전선의 전개와 갱도에 의거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등 현대전의 요구와 우리나라 실정을 정확히 반영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을 창조하였다” 함으로써 金日成의 配合戰略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소위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배합, 集中과 分散의 배합, 소부대활동과 대부대활동의 배합, 卽時的 反擊戰과 連續打擊戰의 배합 등 다양한 우발사태에 신축성 있게 戰術・機動・戰力을 結合할 것이다. 특히 다수의 비정규전 부대로 하여금 제2戰線을 형성하여 兩面戰 作戰을 전개할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非正規戰이라 함은 輕步兵部隊・輕航空機 등 戰略上 輕便한 부대와 小部隊로 구성된 정규부대화한 게릴라부대를 주축으로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군의 前後方軍團에 각기 배속되어 있는 輕步兵 旅團은 게릴라戰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부대이다. 1988年현재 북한은 特殊戰 要員을 總9萬여명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韓國의 後方교란, 게릴라활동, 파괴활동을 비롯한 非正規戰을 專門任務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軍事組織・制度

가. 軍事機構

북한의 군사체제는 黨組織을 통한 政治指導體系와 政權機關을 통한 軍事指揮體系로 二元化되어 있다. 그러면서 모든 武力의 指揮・統率이 金日成에게 集中되도록 되어 있다. 주요 군사기구에 대한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國家主席

북한 憲法에 따르면 主席은 全般的 武力의 最高司令官으로써 또한 中央人民委員會 首位로써 또 國防委員會 委員長으로써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한다.¹⁴⁾ 中央人民委員會의 權限은 “국방 및 국가 정치

14) 북한 憲法 93條 103條 105條 參照.

보위사업의 지도와 중요 군사간부의 임명과 해임 및 將領 칭호의 수여, 그리고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원령의 선포”등이다.

2) 國防委員會

이 기구는 主權의 최고지도기관인 中央人民委員會내에 설치되어 있어 형식상으로는 중앙인민위원회의 활동을 돕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기능은 黨軍事委員會에서 결정된 국방에 관한 기본군사정책을 심의 결정하며, 위원장의 대내외 군사정책 자문에 응함으로써 군사정책, 군사작전, 군사동원등 주요 부서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지도한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主席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의 임명은 主席의 제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3) 黨軍事委員會

黨軍事委員會는 黨中央軍事委員會와 各級 地方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로 조직되어 있다.

黨中央軍事委員會는 黨軍事政策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人民軍을 포함한 全武裝力강화와 군수산업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며 군대를 指揮한다.(黨規約 27條) 이처럼 군사위원회는 군사력의 운용에 관한 제반정책의 최고결정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군사위원회의 업무가 대부분 국방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는 기본적인 군사정책상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地方黨委員會의 軍事委員會는 中央軍事委員會의 指導를 받아 전시동원체제의 검토, 民兵조직의 운영관리, 民兵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4) 人民武力部

人民武力部는 軍의 最高통수권자인 主席밑에서 國防委員會의 지도를 받으며 戰平時를 막론하고 북한의 軍을 지휘·통솔하는 집행기관이다. 특히 북한은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제7기1차회의를 통해 인민무력부를 政務院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主席 또는 黨·政聯

合體인 中央人民委員會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운영케 하고 있다.

歷代 人民武力部長은 崔庸健(48.2) → 金光俠(57.9) → 金昌奉(62.10) → 崔賢(68.12) → 吳振宇(76.5) 등이 맡아 왔다.

5) 總參謀部

북한의 人民軍은 地上軍 海軍 空軍을 人民軍總參謀長이 총괄 · 지휘하는 單一統合軍體制이다. 평시에는 人民武力부가 軍政을, 人民軍總參謀部가 軍令權을 행사한다.

歷代 總參謀長은 崔庸健(48.2) → 姜健(50.6) → 南日(50.9) → 金光俠(53.8) → 李權武(57.9) → 金昌奉(59.7) → 崔光(63.2) → 吳振宇(69.2) → 吳克列(79.9) → 崔光(86.11) 등이 맡아 왔다.

人民軍의 編制는 總參謀長 이하에 前後方의 15個 軍團(特殊8軍團 포함), 砲兵司令部, 機械化司令部, 海軍司令部, 空軍司令部, 平壤防衛司令部 등으로 되어 있다.

나. 黨 · 軍關係

勞動黨규약 제46조에 의하면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軍의 黨에 대한 從屬關係, 軍에 대한 黨優位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金日成은 1980년 10월 로동당 6차대회의 사업총화보고에서 “인민군대 안의 黨組織들은 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대오안에 자각적으로 혁명적인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人民軍隊內에 黨組織들이 군사분야에 대한 黨的 指導를 강화할 것과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워 軍事政治課業을 원만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와같이 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人民軍隊內에는 로동당 조직을 통한 정치지도체계로서 각종의 정치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서 人民軍을 통제하고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軍隊內 政治組織으로는 「勞動黨」組織과 「社勞靑」조직이 있다. 人民軍內 당조직 즉 軍黨委員會 조직이 언제 이루어졌는가는 명백하지 않으나 대체로 1956년부터 1961년 사이에 정식으로 조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61년 10월 4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에는 軍黨委員會 組織이 규정되어 있음)

이 조직은 中央에 “인민군대내의 전체 당조직을 유일적으로 망라” 하는 「朝鮮人民軍黨委員會」가 있고, 大隊級 이상에는 黨委員會가, 中·小隊 단위에는 黨細胞와 黨分組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데, 각급 당 조직들은 지방당 조직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게 되어 있다(당규약 7장 50조) 그리고 人民軍黨委員會는 로동당중앙위원회에 직속되며 그 指導밑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다.

軍內에는 또한 黨위원회와는 별도로 政治機關을 조직하고 있는데 「人民武力部」 산하에는 「로동당」의 정치사업을 유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人民軍總政治局」이 있고 大隊級이상의 부대에는 政治部가 있다. 이 政治機關은 黨의 정책과 결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총참모부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1969년 부터는 人民軍內에 政治委員制를 도입하였는데 師團과 聯隊단위에는 政治委員, 大隊와 中隊단위에는 政治指導員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업무와 군대내 정치사업을 조정·감독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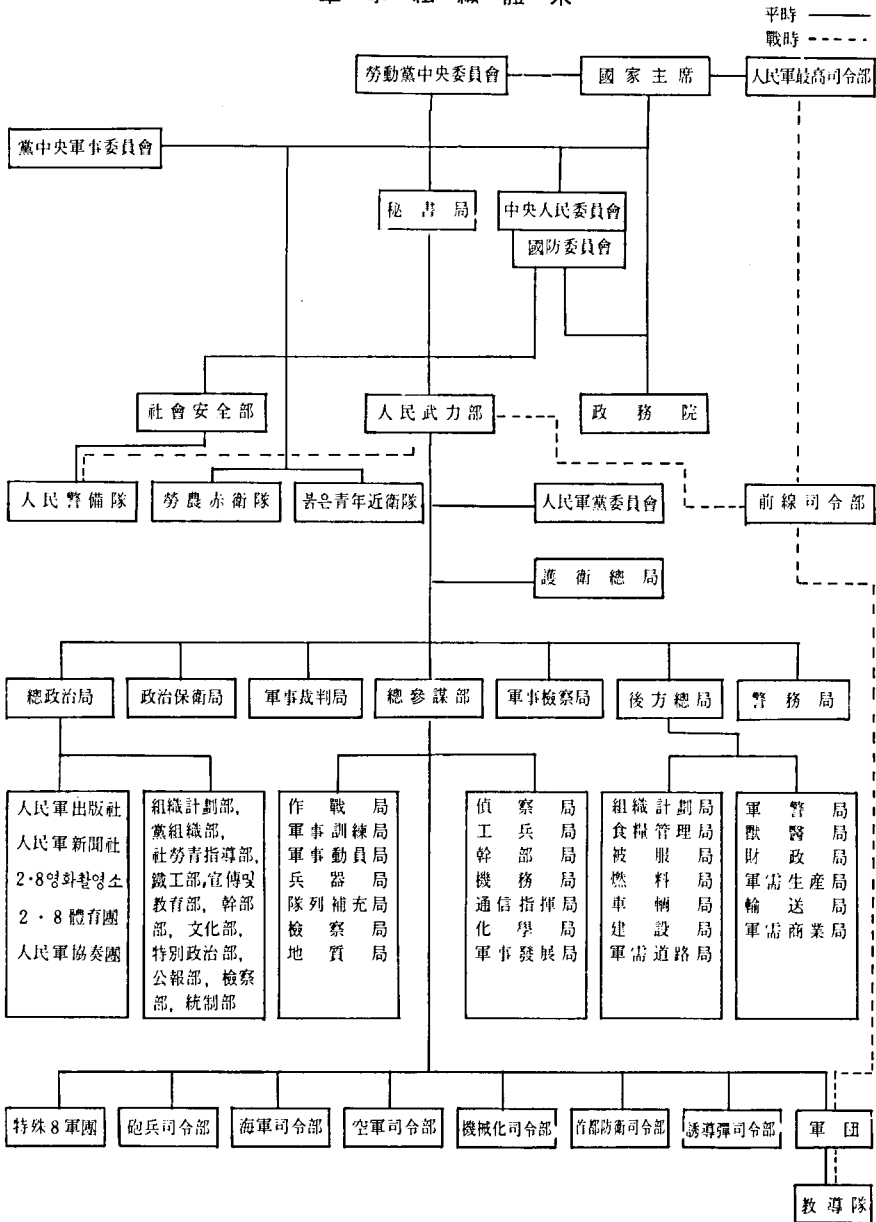
1969년 1월 人民軍 黨4期4次 全員會議에서는 人民軍黨委員會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든 命令書에 政治委員의 署名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副署制度를 채택하기에 이른다.

또한 人民軍內에는 部隊단위에 따라 「社勞靑」도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각급 로동당 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밑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非黨員을 로동당의 지도밑에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人民軍內 로동당 조직은 二重·三重으로 統制體系를

15) Suck-ho Lee, Party - 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Ph.D.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1983) pp.217-218.

軍事組織體系



出處：「北韓概要」(平和統一研究所 1986) p. 224

갖추고 있다. 한편 政治 및 軍事系統의 二元的인 지휘체제에 따른 兩者 간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다. 軍服務

北韓은 義務兵制度에 따라 만 17세에 징집시키고 있다. 그러나 成分不良者 및 進學하여 특수 분야를 전공하는 者는 징집에서 제외되고 있다.¹⁶⁾

士兵의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에 의하면 地上軍은 3년6개월, 海空軍은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육군은 5~8년, 海軍은 5~10년, 空軍은 3~4년 내외이다.

軍服務에 있어서는 정신적 무장과 紀律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黨中央委 5期10次全員會議에서 ① 강인한 혁명정신 ② 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 무쇠같은 체력 ④ 백발백중의 사격술 ⑤ 강철같은 기율 등 「전투력강화 5大方針」이 제시되었다.

또한 1977년 11월 「인민군선동대회」에서 金日成은 人民軍最高司令官의 이름으로 ① 軍事規定의 철저한 준수 ② 武器의 精通과 철저한 관리 ③ 軍事命令의 철저한 집행 ④ 黨 및 政治組織들에 준 분공의 어김없는 집행 ⑤ 國家機密·軍事秘密·黨組織秘密의 엄숙한 지킴 ⑥ 社會主義的 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 軍事政治訓練에의 어김없는 參與 ⑧ 人民에 대한 사랑 및 人民財產의 침해금지 ⑨ 국가재산과 軍需物質의 철저한 보호 ⑩ 軍隊안의 一致團結 등과 같은 「軍務生活 10대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

軍服務를 마치게 되면 除隊와 동시에 직장에 배치될 받게 되며, 배치받은 직장에서 1~2년간 근무를 하고 大學進學을 하기도 한다.

軍指揮官은 「金日成 軍事綜合大學」「第1綜合軍官學校」 등 각종 軍

16) American University, Foreign Area Studies, Area Handbook for North Korea (Washington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326.

事學校를 통하여 양성되는데 本科는 3년내외의 과정으로 되어 있다.

軍階級 構造는 軍官은 14種, 士兵은 6種으로 나뉘어져 있다. 軍官의 경우는 ① 원수급에 元帥, 次帥 ② 장령급에 大將, 上將, 中將, 少將 ③ 상급군관에 大佐, 上佐, 中佐, 小佐 ④ 하급군관에 大尉, 上尉, 中尉, 少尉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士兵의 경우는 ① 하사관에 特務上士, 上士, 中士, 下士 ② 兵은 上等兵, 戰士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¹⁷⁾

5. 軍事能力

북한은 1962년부터 「4大軍事路線」을 채택하여 兵力과 裝備를 크게 증강하여 왔는데, 현재 量的인 면에서 세계 제6위의 대규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¹⁸⁾

가. 總兵力

북한의 현역은 약 87만명이다.¹⁹⁾ 이는 추계인구 2천69만명의 4%를 넘고 있어 총인구 對比 병력수에 있어서 세계 1位인 이스라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육군 약76만, 해군 약4만, 공군약 7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1) 地上軍

북한 地上軍은 15個軍團, 53個師團, 61個旅團의 部隊규모로서 76

17) Ibid, p.326~327.

18) Donald Oberdorfer, "North Korea's Army Now Ranked Fifth—Largest in World by U.S.", Washington Post, January 14, 1979.

19) U.S CIA, World Factbook, 1984, pp.126~128 or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7~1988 (London: Garden City Press, 1988) p.162.

W.P 紙('89. 1. 25자)는 北韓 兵力이 100만을 돌파했다고 美國政府소식통을 인용, 보도한바 있음.

萬名의 兵力을 유지하고 있다.²⁰⁾

최근 部隊構造의 개편이 있었는데 중전의 步兵師團에 새로이 생산 지급된 戰車 및 裝甲車가 많아지게 되자 자연히 보병사단은 機械化師團으로서의 성격을 띠우게 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지형의 특성은 대규모 戰車部隊의 전개에 적합한 기동공간이 흔치 않으므로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이같은 작전지역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하여 機甲部隊의 부대구조를 사단규모로 부터 機甲 및 機械化旅團으로 세분했다.

이렇게 해서 많아진 旅團의 지휘體系를 단일화하기 위하여 수개의 機械化軍團을 창설하고 5~6個의 旅團을 배속시켜 그 예하에 두게 되었다.²¹⁾

또한 戰略部隊를 휴전선 80km 이내에 배치하는 등 81년도에는 45%수준이던 前方配置 병력규모를 66%수준으로 전환해 놓고 있으며, 약 9萬名의 特殊 8軍團을 運用하고 있고 평양-원산線 이남의 30개 航空基地외에 휴전선 가까이 2개의 비행장을 신설하는 등, 우리의 首都圈 기습공격 시간을 8분대로 단축해 놓고 있다. 事前警報 시간도 중전의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되어 있다.²²⁾

다음 주요 전투장비를 살펴보면²³⁾ 戰車의 경우 舊型인 T-34戰車 약 430대를 포함하여 總3,500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T-54/59 戰車가 主力(66%)을 이루고 있다. 1978년 후반기부터 蘇製 T-62 中

20) 國防部, 「國防白書」1988, p.78 그런데 日本 防衛廳, (編) 「防衛白書」(東京, 1987) p.48. 에서는 69개 師團/旅團, IISS, op. cit. P. 162. 에서는 96개 師團/旅團 규모로 評價하고 있음.

21) 裴名五, 「南北韓의 軍事關係 展望」, 「韓半島 統一環境과 南北韓 平和體制」(國土統一院編, 1988) p.263.

22) 拙稿, 「북한의 軍事動向 推移分析」, 「北韓」'85년6월호, p.133.

23) 本稿에서 소개하고 있는 북한군의 주요 裝備種類와 數値는 「ISS, The Military Balance, 1987~1988」의 자료를 基本으로 하고 기타 國防部, 韓美 聯合司 등의 資料와 美議會에 提出된 美政府側의 報告書나 證言 등을 참고하여 整理한 것임.

型戰車의 北韓개량형인 輕戰車(Lt, Tk Type-62/63)를 자체생산하여 약 300대의 경전차를 機械化 및 機甲軍團 예하부대와 創設部隊에 보급하여 왔다.

裝甲車는 병력수송용(BTR 40/50/60/152), 정찰용(BA-64), 기계화보병전투용(BMP-1) 등 약 2,000대를 保有하고 있다.

野砲의 경우 牽引砲 약 2,500문, 自走砲 약 3,100문, 총 5,600문을 保有하고 있다. (自走砲 保有비율이 55.2%로 높다) 그리고 放射砲 약 2,200문을 保有하고 있다.

또한 FROG 5/7·27基, K-61 水陸兩用車輛 약 500대, S型浮橋 약 2,300대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거리 地對地誘導彈인 射程 270~300km에 달하는 SCUD-B를 배치해 놓고 있으며(소련으로부터 導入했는지, 自體生産했는지는 不明함) 무차별 人馬殺傷力을 가진 180~250만톤 규모로 추정되는 化學武器도 비축하고 있다.

2) 海軍

북한 海軍의 총병력은 약 4만명이며 元山과 南浦에 각각 東海艦隊司令部와 西海艦隊司令部가 위치해 있다. 東·西海 해군간에 지리적으로 相互支援이 어렵게 되어 있는 點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艦艇勢力은 잠수함 23척, 경구축함 3척, 誘導彈艇 36척 등을 비롯하여 어뢰정 183척, 상륙함정 130척 등 총 633 척을 保有하고 있다.

북한 해군에서 엿볼 수 있는 특징은 總噸數(약10만톤)에 비해 함정수가 많음으로써 小艦選好性에 소수 승무원 즉 多艦, 高速 및 火力主義가 채택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현상은 大型艦의 건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년내에는 북한 해군이 耐海性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해군력은 함정의 크기에 대체로 비례하며 大型은 공격용이고 小型은 방어용이라는 것이 一般的 觀點이긴 하다. 그러나 한반도 해역은 작전지역반경이 작고

최근 魚雷장착 高速攻擊艇을 증강시키고 각종 함정에 533mm 어뢰를 적재한 점이나 高速攻擊用 上陸艇을 보유하고 있음도 유의하여야 한다.

3) 空軍

북한 空軍의 총병력은 약 7만명이며 4개의 습격사단과 4개의 反航空師團, 5개의 獨立 헬機聯隊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투용 각종 항공기는 약 820대이고 支援機가 약 770대 도합 1,59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戰術機는 IL-28 輕爆擊機 80대와 미그15/17 및 Su-7 등 戰爆機 약 330대, 미그-19/21, 미그-23/29 등 요격기 약 410대로 구성되어 있다. 미그15/17은 韓國戰 當時의 機種이며 IL-28도 노후된 기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미그-23기 46대는 新銳機로서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고 最新銳機인 미그29도 12대를 導入해 놓고 있다.

支援機는 AN-2 등 수송기 약 300대와 헬機 약 280대, Yak-18 등 훈련기 약 190대로 구성되어 있다. 헬機中 美휴즈社 500系列 87대의 密導入은 韓國軍이 보유한 機種과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我側 입장에서 볼 때 특수침투의 위협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의 防空能力도 크게 향상되었다. 종래의 空對空미사일 AA-2 10余基와 SA-2 地對空미사일 500基를 비롯하여, SA-3 Goa SAM 약 30基 등의 導入과 87년에는 보다 新銳 防空武器인 SA-5 Gammon SAM 과 ZSU-23-4 自走對空砲가 추가 도입되었다.²⁴⁾ SA-5 地對空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00km이며, 核彈頭 장착이 가능하므로 사정거리 300km 인 Scud-B 地對地 미사일과 함께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

24) 루이스·메네트리 주한미군 사령관의 1988년 5월 26일, 美下院 세출위원회 軍事小委 청문회에서의 證言.

南北韓 軍事力 比較 ²⁵⁾

區 分		韓 國	北 韓	對 比
兵 力		650,000	870,000	74.7%
地 上 軍	軍 團	10	15	66.6%
	師 團	48	53	90.5%
	旅 團	15	61	24.6%
	戰 車	1,500	3,500	42.9%
	裝 甲 車	1,550	1,960	79.0%
	野砲 및 放射 砲	4,000	7,800	51.3%
海 軍	戰 鬪 艦	170	410	41.5%
	潛 水 艦		23	
	支 援 艦	130	200	65.0%
空 軍	戰 術 機	480	820	58.5%
	支 援 機	690	770	89.6%

나. 豫備戰力

북한의 住民 軍事動員政策은 人民을 革命的 軍事사업의 主人, 武裝力의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은 1958년 中共軍의 철수를 계기로 1958년 1월에 勞農赤衛隊를 창설하였으며, 1962년에 教導隊를 조직하였고, 또한 1970년 9월에 붉은 青年近衛隊를 발족시켰다.

豫備軍의 指導體制는 人民武力부와 黨軍事部 系統으로 二元化되어 있으며 人民武力부는 各 道別로 설치되어 있는 總10個의 地區司

25) 國防部, 「國防白書」, 1988, p.148.

司令部를 통해 예비군의 핵심인 教導旅團을 지휘하고, 黨軍事部는 民防衛 등 예비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농적위대와 붉은 청년근위대를 관장토록 體系化 하였다.

1) 教導隊

교도대는 북한의 민간군사조직중 가장 핵심체로서 滿17才이상 40才까지의 住民(女子 17~30才)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과 직장규모에 따라 師團과 旅團으로 編成되어 있다. 교도대는 正規軍에 準하는 編制와 武裝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戰爭발발시 즉각 동원되어 後方防禦 및 戰略豫備로 투입된다. 교도대의 총병력은 약 119만명에 달한다.

2) 勞農赤衛隊

노농적위대는 41才이상 60才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직장 및 行政單位別로 梯隊로 편성되어 있다.

노농적위대의 임무는 민방위업무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는 물론 지역방어, 對空防禦임무를 수행한다. 노농적위대의 隊員은 약 360만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붉은 青年近衛隊

高等中學고등반 5~6學年 남녀 學生들(14~15才)로 조직되며, 學校單位別로 中隊~大隊級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임무는 「反革命的 要素」를 제거하여 북한 지배층을 死守하는 親衛隊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軍 下級幹部 보완을 위한 後備隊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붉은 青年近衛隊는 약 81만명의 隊員으로 조직되어 있다.

다. 軍事費

북한이 공식발표한 군사비를 보면 '67~71년까지는 세출예산對 軍事費 比率이 30.4%~32.4%수준이었으나 '72년이후부터는 17%이하

로 발표하고 있다. ('87년도 예산에는 13.2%, '88년도 예산에는 12.2%로 되어 있음) 그러나 이와같은 縮小發表는 '72년 이후 북한의 武力이 오히려 크게 增強된 사실과 相反되므로 위장발표로 간주되었고 북한 軍事費의 實質규모를 推計하기 위한 研究와 노력이 國內外 情報·研究機關에서 추진되어 왔다.²⁶⁾

북한의 軍事費 은폐방법은 다른 民間部門豫算에 포함시키는 방법 일텐데 극히 일부만을 例로 열거한다면 방위산업건설은 「人民經濟費」에, 年金이나 자녀교육보조는 「社會文化費」에 은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 군사비 推計方法은 ① 지금까지 探知된 戰鬪序列 및 裝備保有量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推定에 適合하도록 部隊構造를 分類한 후 費用要素를 적용시켜 각 범주별로 비용을 推定·合算하는 접근 방식인 미시적 방법과 ② 북한 당국이 발표한 군사비규모에 기초를 두고 당시의 政治軍事·經濟的 상황변동을 감안하여 GNP 및 세출 총액에 대한 一定比率을 적용하는 방식인 巨視的 方法이 있다.

巨視的 方法으로 북한 군사비를 推定하는데 試金石이 되는 것은 1971년에 북한 當局이 발표한 군사비 규모로써, 그들 GNP 對比20%~22%에 상당하는 발표내용이 비교적 신빙성이 있다고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 견해로는 북한은 GNP의 23~24%를 군사비에 投入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²⁷⁾ 즉 북한 군사비 규모는 약 42억 \$ 내

26) KIDA and RAND Corporation, The Changing Balance : South & North Korean Capabilities for Long-Term Military Competition, December, 1985.가 대표적인 例임.

27) 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1983년도 북한의 군사비를 GNP 대비 12.3%라고 評價하고 있는바 북한 발표 수치를 그대로 옮긴것 같음. ("Tables of World military expenditure", SIPRI YEAR BOOK 1986, P.244.)

② 日本 防衛廳은 GNP의 20~25%를 投入하고 있다고 評價하고 있음(「防衛白書」昭和 62年版) p.48.

③ 英國戰略問題 研究所는 GNP의 23~24%라고 보고 있음(The military Balance, 1988. p.162)

南北韓 GNP 및 軍事費 比較

(經常價格 基準)

年度	GNP(億美弗)		1인당 GNP(美弗)		軍事費(億美弗)		軍事費/GNP(%)	
	韓國	北韓	韓國	北韓	韓國	北韓	韓國	北韓
1960	19	16	79	137	1.8	3.1	9.6	19.7
1961	21	18	82	163	1.1	3.7	5.2	20.2
1962	23	20	87	179	1.4	4.3	6.2	21.2
1963	27	21	100	185	1.5	4.9	5.7	22.9
1964	29	23	103	194	1.0	5.6	3.3	24.5
1965	30	23	105	192	1.1	6.1	3.7	25.9
1966	37	24	125	192	1.4	6.2	3.9	25.9
1967	43	26	142	202	1.7	6.4	3.9	24.5
1968	52	30	169	225	2.0	8.1	3.9	27.3
1969	66	31	210	230	2.6	8.3	3.9	26.6
1970	81	40	252	286	3.0	9.9	3.7	24.8
1971	95	41	288	308	4.0	10.3	4.2	25.3
1972	106	46	318	316	4.6	10.9	4.3	23.5
1973	134	63	395	418	4.6	12.0	3.4	19.2
1974	187	73	540	461	7.3	14.6	3.9	20.0
1975	208	94	590	579	9.2	20.2	4.4	21.6
1976	286	95	797	585	14.6	21.4	5.1	22.5
1977	366	106	1,008	642	19.8	21.7	5.4	20.4
1978	513	119	1,392	704	28.2	28.1	5.5	23.6
1979	614	125	1,640	720	31.3	29.3	5.1	23.5
1980	603	135	1,589	758	38.0	33.9	6.3	25.1
1981	662	136	1,719	746	39.1	32.4	5.9	23.9
1982	693	136	1,773	735	43.7	32.4	6.3	23.8
1983	760	145	1,914	765	43.3	34.0	5.7	23.5
1984	824	147	2,044	762	43.7	34.2	5.3	23.2
1985	837	151	2,047	765	43.5	35.0	5.2	23.1
1986	953	174	2,300	860	48.6	39.3	5.1	22.7

出處：韓國銀行，經濟企劃院，國土統一院

(韓國의 1970年 以後 系列은 新國民計定體系에 依함)

외이다. 이 軍事費中에서 軍事投資費는 약 48%인것으로 추측된다.

아래의 表가 보여주듯이 韓國의 軍事費가 북한을 추월하는 時期는 '78년 이었으며, 軍事投資費 支出이 북한을 능가하는 時期는 86년이 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總軍事投資費 누계面에서 韓國이 북한을 앞서게 되는 時點은 1990년대 중반이 될 것이라는 展望을 할 수 있게 된다.

6. 對中·蘇 軍事協力

북한은 金日成 자신이 직접 모스크바와 北京을 방문하여 1961年7月6日에는 「朝蘇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同年 7月11日에는 「朝中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각각 체결하였다.

「朝蘇조약」이나 「朝中조약」은 다같이 條約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여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締約相對國이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軍事 및 其他援助」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軍事同盟條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朝蘇條約」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年 유효의 時限的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 締約一方이 시한만료 1年前에 해약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年間 효력이 지속되고 똑 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朝中條約」은 締約雙方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合意하지 않는 限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효력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북한과 소련간에는 최근 「새로운 형태의 협력」 다짐과 그 구체화로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²⁸⁾

'84년5월 金日成이 23년만에 소련을 방문하고 돌아온 것이 軍事協

28) Dae-Sook, Suh, "North Korea in 1986" Asian Survey Vol. XXV II, No.1 (Jan, 1987), pp.50~60.

力強化의 轉機가 되었다. 그해 11월에는 소련 外務次官 카피차가 평양을 방문하고 金正日과 군사협상을 진행하여 ① 淸津, 羅津 등 해군 기지의 사용권 ② 緊急着陸權(Emergency Landing)이라는 북한 內陸의 空軍基地사용권 ③ 북한 領空에 대한 통과권 등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이후 북한의 海空軍과 소련 極東戰域軍 및 太平洋艦隊간의 협력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그 주요 활동은 ① 소련의 中距離偵察機 Tu-16 Badger의 북한 空軍基地 離着陸權 부여와 休戰線 일대의 偵察비행 및 항공사진 촬영 ③ Tu-95 Bear 장거리 폭격기의 印支半島에 이르는 새로운 航路가 북한上空을 횡단하여 黃海路線으로 개설되었으며 ③ 그동안 中國의 눈치 때문에 북한의 東海港에만 국한되었던 蘇艦寄港이 西海의 南浦港에도 허용되고 있는 것 등이다. ④ 그리고 '87년 부터는 東海上에서 蘇·北韓간의 海上聯合機動訓練도 실시되어 왔다. 특히 최근 ('88년5월14일)에도 소련 太平洋艦隊 함정의 元山港 寄港과 司令官 코바토프의 金日成 면담 및 북한 軍部指導者간의 협력증진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吳振宇의 訪蘇('88.2)와 소련 國防第1副相 루세프의 訪北('88.4)등 高位 軍事人物 상호방문이 연이어 지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은 북한이 科學技術水準의 미흡으로 自體生産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高度의 精密武器를 소련으로부터 導入하여 軍事力을 보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그-23機 46대, 사정거리가 약 300km에 달하는 SCUD-B SSM 6基(自體開發說도 有力함) 및 SA-3 Goa SAM 등의 도입이며²⁹⁾ '88년5월의 美國防省 보고서에 따르면 '87년도에 이미 보다 新銳防空武器인 SA-5 Gammon SAM과 ZSU-23-4自走對空砲가

29) SOVIET MILITARY POWER 198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p.140. 拙稿, “북한의 對蘇軍事紐帶強化”『北韓』1986년 12월호, pp.86~88.

추가 도입되어 북한의 防空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外信에 의하면 蘇製 SU-25 最新銳 FGA 機 10대가 '88년1월에 북한으로 供與되어 實戰 配置된 것으로 보도되었고 앞으로 10대정도 추가 도입될 것이 예상된다고 알려졌으며, 또 소련 最新銳 전투기인 미그-29機도 북한에 12대가 공여되었는바 이 같은 사실들은 북한空軍의 대지공격 능력이 크게 강화된 것을 의미한다.

'86년3월 李基百 前 國防部長官은 北倉基地에 배치된 북한의 미그-23 전술기는 우리의 首都圈 도달시간이 17分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SCUD-B는 平·元線에서 수도권 공격이 가능할 뿐 아니라 前線地域으로 이동배치한다면 大田이남까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북한의 對南 攻擊범위능력 확대를 지적한바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85년12월 북한 政務院總理 姜成山과 소련 首相 리즈코프가 조인한 「經濟協力 및 科學技術協定」에 따라 북한에 원자력발전설비 44萬 kw 급 4기를 소련이 건설지원하고 있고, 북한은 정무원內에 原子力工業省을 創設하였으며 소련함대의 북한 入港과 소련 航空機의 북한 領空通過와 관련, 그 함정이나 항공기에 핵이 장치되어 있다면 소련에 의한 북한의 “核化”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³⁰⁾

한편 북한과 中國과의 軍事協力관계는 軍高位간부들의 相互訪問 外에는 특기할만한 軍事協力·交流事項이 최근들어서는 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中國에 편향하여 對外政策을 전개해 나갔던 '80년대 前半期에 있어서는 다양한 軍事裝備를 中國으로부터 도입한 바 있다. 그 도입실적을 예시하면 미그-21機 40대('82년), OSA 급 誘導彈艇 4

30) 상세한 논의는 李基鏞, The Soviet-North Korean Alliance, is it nuclearized? (Seoul, January, 1987)·세미나 發表論文 參照.

척('80~'81년), AN-2 輸送機 82대('80~'83년), YAK-18훈련기 47대('82~'83), 레이더 6기('82~'83년), SILK WORM 地對艦미사일 10기('80년) 등이다.

7. 結 言

오늘날 韓半島에서의 戰爭可能性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존재한다. 이와같은 견해의 論據는 ① 攻擊軍은 守備軍에 비해 綜合戰力이 2~3倍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軍事不均衡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點, ② 攻擊者側은 開戰 時點에서나 顯在的 兵力이 절대적으로 우세하여야 하고, 長期戰을 계획할 경우 國家의 總資源이 월등 우월해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도 성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點 ③ 또 한 반도는 美·蘇·中·日의 利害關係가 상호 밀접하게 교차되는 지역으로서 이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勢力均衡이 깨지거나 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點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人類戰爭史는 軍事力이 劣勢한 군대도 先制奇襲과 전투력의 集中등 戰爭原則을 잘 적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1988년 7월8일, 8년만에 끝난 이란—이라크戰爭은 그 당사자 어느쪽도 우세하다는 戰力の 확신없이 발발한 전쟁이다. 또 中東戰(1967.6)의 경우 이스라엘의 열세한 전력으로도 선제기습으로 아랍을 공격함으로서 6일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1904년의 露·日戰爭도 戰力規模에 상관없이 勝敗가 난 전쟁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北韓은 대단한 軍事力을 建設해 놓고 있다. 수치면에서 볼때 분명히 韓國側에 우세한 軍事力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군사력이 어떻게 發散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여러 가지 假定을 성립시킬 수 있다. 이와같은 南北韓의 군사적 불균형을

韓國側은 韓美聯合防衛體制를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韓民族은 현재 「平和」와 「統一」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時代的 使命을 안고 있다. 統一은 우리 民族이 민족답게 自由·民主·福祉를 구가할 當爲的인 課業이며, 平和는 現實的인 安保問題이다. 前者의 次元에서 볼때 남북한간에는 특히 軍事的 側面에서 尖銳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民族의 생존문제와 存在的 樣態에 不可分の 關係에 있음을 直視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全韓半島에서의 社會主義革命完遂」戰略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의 軍事的 緊張狀態는 해소되기 어려울것 같으며, 그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반도는 세계의 紛爭可能地域으로 계속 存在할 우려가 없지않다.

다행이도 한반도 軍事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平和定着 문제가 남북한간에 우선적인 문제의식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남북한 당국간의 회담개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전개라 하겠다.

民主統一論 (北韓實態)

1989年 1月 25日 印刷

1989年 2月 3日 發行

發行處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5-19

電話 234-4102 · 236-4143

印刷處 農園文化社

